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만드는
건축도시정책 전문저널

Vol.38 - Summer 2020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우리 건축과 도시공간의 형태는 위기에 대응하면서 끊임없이 재편되어 왔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 건축과 도시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축과 도시공간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지 방안을 모색해 본다.



건축과 도시공간

Vol. 38 - Summer 2020

(a u r _ i)

건축과 도시공간

Vol. 38
Summer 2020

발행
2020년 6월 30일

〈건축과 도시공간〉은 건축·도시
분야 정책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다루는 정책전문지입니다.

발행인

박소현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내용은 필자 개인의 견해이며,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편집책임

고효진

정책이슈 기획

유광흠

편집

이미영, 김민자

발행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세종특별자치시 절재로
194, 701호

편집부 044.417.9600
팩스 044.417.9608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아닌 도판의 경우 출처 및 저작권자를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디뎠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빼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리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www.auri.re.kr
information@auri.re.kr

디자인

(주)디자인인트로

02.2285.0789

www.gointro.com

ISSN

2288-2332

〈건축과 도시공간〉에 수록된 모든
사진과 그림자료는 저작권자와의
사전 협의를 거쳤습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필자의 저작물이
찾아 명기했으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용하기 위해 최선을

디뎠습니다. 일부 착오가 있거나
빼진 부분은 추후 저작권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절차에 따라 허리를 받고
저작권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건축과 도시공간〉에서는
독자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정책이슈 및 건축도시 동향을 포함한
모든 부분에 투고가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원고가 채택된 분들께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또한 본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 및 기획에 대한 의견이나
필진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는 분들은

메일을 통해 제안하시면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표지

코로나19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삶터이자 '안전'과 '보호'의 상징이던
건축과 도시공간이 감염병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비대면 사회 같은 키워드가
일상을 지배하는 지금, 급증하는 감염병 위험을
떨치기 위해 건축과 도시공간은 어떻게 변화해야 하고
또 무엇을 통해 변화할 수 있을까요?

CONTENTS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시론: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박소현	006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생활치료센터	조비룡	010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방재성	018
코로나 시대, 활동적인 도시 생활환경을 다시 생각하기	유승현	02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가능성	조상규	034

통계자료실

세종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이종민	044
-----------------------------------	-----	-----

건축도시동향

해외동향	일본의 공공건축물 복재 이용 촉진과 시사점	권용수	050
	시카고의 대규모 빈민가·저개발 지역 재생사업 발표와 추진 방향	강기향	055
	파리 세마에스트의 쉼터 재생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김나래	059
국내동향	건축물 화재안전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	홍성준	06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시작: 국제설계공모 추진	엄철호	068
해외단신	베를린, 코로나19 대응 '팝업 자전거도로' 개설 외		070
국내단신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철린지 사업을 통한 도시 문제 개선 외		078

세계의 건축·도시 싱크탱크

장소와 지역사회에 관한 사회경제적 정책연구·지원을 수행하는 미국의 UI(Urban Institute)	고영호	084
---	-----	-----

장소탐방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세모·네모·집 – 종로구 국공립 부암어린이집	김상언 · 김은진	094
한국의 혼을 담은 외교청사 –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정영균 · 조남승	110

auri 소식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24
· 제2회 마을재생 세미나 '포틀랜드의 밤' 개최	130
·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실포지엄 공동주관	131
· 로컬-리콜(Local Recall) 오프닝 개최	132
·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 세미나 개최	133
·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가치의 이름과 생성: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개최	133
· 전문가 초청 강연회 '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연구공간은?' 개최	134
·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조사·관리 방법론 도출을 위한 강연회 개최	134
· 혁신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	135
·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개최	136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전주시 MOU 체결	137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군산시 MOU 체결	137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1

19세기 중반 콜레라가 영국을 강타하면서 배관·하수 시스템 등 현대 도시를 지탱하는 위생 인프라가 구축되기 시작했다. 이처럼 건축과 도시공간은 위기를 마주하고 대응하며 끊임없이 재편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사스(SARS)와 신종인플루엔자, 메르스(MERS), 코로나19를 연달아 겪어내면서 건축 도시공간은 또 다시 변화의 시점에 접어들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건축과 도시 공간이 본래의 목적대로 우리의 일상을 지키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을까? 이번 호 정책이슈에서는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향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건축과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한다.

생활치료센터의 모듈형 응급병실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세종시 공유 자전거 어울링과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를 차량



시론: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006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생활치료센터
010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018

시론: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 상황을 대응하기 위해 연일 많은 의견을 내고 있다. 지금까지는 새로운 바이러스에 대한 확산 경과, 파급력, 방향성 등 초기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었다. 코로나 이후를 생각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현실적인 연구를 모색해야 할 때이다.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생활치료센터 |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격차하게 퍼지면서 위독한 중증 환자와 구분되는 경증 환자를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 또는 관찰하는 생활치료센터가 구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염자가 갑자기 증가했을 지난 3월에 기획되어 가동되었다. 새로이 만들어진 생활치료센터의 역할과 기능 그리고 의의를 정리한다.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 질병관리본부를 필두로 한 대책은 코로나19 확산을 저지시키는 데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다. 감염의심자와 경증 환자, 중증 이상의 환자를 구분하여 치료하고 의료시설과 비의료시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이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이 바이러스의 2차 대유행과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서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코로나 시대, 활동적인 도시 생활환경을 다시 생각하기 | 2020년은 지난 10년간의 도시 시스템을 마무리하고 다음 10년을 계획하고 시작하는 해이다. 이 시기에 유행한 바이러스감염증으로 인해 도시 공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도시가 공간과 건강 사이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할지 생각해본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가능성 | 수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으나 확산 추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등으로 중요한 사회적 활동을 비대면 처리하고, 도시 데이터로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등 도시 데이터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적용하고 있다. 코로나19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떠오른 시스템과 서비스 사례를 통해 스마트시티 구현에 필요한 것을 알아본다.

코로나 시대,
활동적인
도시 생활환경을
다시 생각하기
02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가능성
034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를 생각하다

박소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소장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
우리는 어떻게
고민해야 하는가

올해 1월 하순 국내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병-19(이하 코로나19) 환자가 처음 확인된 이래 매일매일 확진자, 격리자, 해제자, 완치자 그리고 안타까운 사망자의 수를 헤아리며 우리는 어느덧 다섯 달의 시간을 보냈다. 코로나 이전의 평이한 생활은 이미 까마득한 먼 과거처럼 느껴지고, 상상하지 못하던 코로나19 팬데믹 현상이 우리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코로나19가 가져온 이 새로운 상황과 그 대응에 대해 연일 많은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학회, 연구소, 정부부처, 지자체, 시민단체 등 모든 기관과 주체가 코로나19와 관련된 포럼을 하루가 멀다 하고 연다. 경제, 사회, 보건, 복지, 노동, 교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코로나19가 가져온 영향과 앞으로 초래할 여파에 대해 앞다투어 논의한다. 절박한 상황인 만큼 새로이 학습해야 할 내용이 많고, 건축과 도시공간의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니 대부분 쟁점 보게 된다.

이제까지의 논의가 코로나19의 대략적인 확산 경향과 파급 영향력 및 방향성에 관한 초기 정보의 성격이라면, 이 초기 단계 학습 이후 논의에서는 보다 실증적인 근거에 기반한 정밀한 진단과 구체적인 연구 어젠다가 동반되고, 그로부터 현실적인 해법 모색 구조가 세세하게 기획되어야 한다.

코로나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 이에 대한 예측과 대응은 진정 어떠해야 할까?

뉴노멀의 문턱에서: 정확한 평가, 치열한 분석 있어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넘쳐나는 세미나 덕분에 우리 사회가 이제 코로나 이전 시대로 결코 돌아갈 수 없고, 감염·격리·거리두기 등으로 파생·확장되는 코로나19 이후 시대의 소위 뉴노멀이나 뉴리얼리티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을 우리 모두 어렵잖하게라도 수긍하고 있다. 당장은 어렵지만 코로나19가 어떻게든 종식되더라도 이후 계속 진화할 새로운 감염병의 시대에 대비하며 살아야 한다는 점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는 추세이다.

그런데 지금 예측하고 있는 뉴노멀과 뉴리얼리티는 일상 생활환경에서 어떤 실체적 의미를 갖고, 또 어떻게 작동하게 될까? 코로나19 관련 의 거주밀도나 선호도시 변화에 대한 일부 발제자들의 선언적 주장은 이미 공감대를 잃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을 떠나겠다는 징표가 없고, 뉴욕을 벗어나겠다는 응답수치가 보이지 않는다.

한편 오래도록 선진국이라 당연히 여겨왔던 유럽과 북미 여러 나라의 대도시에서 코로나19로 위협받는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내지 못한 채 맥없이 허둥대는 상황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이와는 극명히 대비되는 K-방역체계를 내세우며 우리가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을 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후 국민행복도, 생활 만족도, 노인빈곤율, 청년 자살률 등 거의 모든 국가지표에서 자부심을 갖기 어려운 정황을 보여 우울했었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 이후 상황이 크게 바뀌고 있다. 불과 작년만 하더라도 설문 응답자의 57.4%가 한국을 '헬조선'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지만 올해 5월에는 25.9%로 격감하고, 다시 태어나도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겠다는 비율이 작년 46.4%에서 63.7%로 증가하였다(KBS 외 2020).

해외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K-방역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면서도,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균형 있는 점검도 필요하다. 코로나19 사태가 우리 사회 곳곳에서 유발하는 고통의 강도가 적지 않다. 지난 시절을 회고할 때 IMF 시대의 어려움과 당시 상황의 잘잘못을 이야기하듯 코로나19 시대의 어려움을 냉정하게 이야기할 때가 곧 오리라 전망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중요한 점 가운데 하나는 K-방역 현상에서도 나타났듯이 결국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잘하지만 놓치는 것, 우리가 잘하고 싶지만 사실은 잘못하는 것 등을 우리 스스

코로나19 여파 속에서 치러진

4.15. 총선 풍경

이때 보여준 빛나는 시민 의식은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다.



로가 좀 더 자신감을 갖고 찬찬히 알아내어 서로 인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항목이라 생각한다.

K-방역에 관한 여러 각도의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점의 근저에는 강력한 행정력·동원력·실행력을 갖춘 중앙정부와 지방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가 있고, 이에 호응하는 시민사회의 성숙한 참여도 있다. 보건·의료계의 혁신적인 그간의 준비와 책임감 있는 헌신도 있다. 앞서 있는 정보통신기술도 큰 역할을 한다. 반면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서로 지킨다는 대의에 공감하며 감시사회, 국가주의, 혹은 경찰국가에 대한 우려를 잠시 뒤로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경계심도 늦추어서는 안 된다. 인권에 대한 감수성도, 포용력도 그 우선순위를 낮추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한다.

사회현상과 도시공간 잇는 성찰을 시작할 때

코로나19 이후 겪게 될 건축과 도시공간의 변화에 대해 잘 예측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코로나 이전 시대에도 우리의 건축도시현상을 스스로重新해석하며 대응방안을 차근차근 모색해 본 적이 별로 없었다. 이 점을 겸허히 인정하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지난날 도시

짓기와 건축짓기 행태는 우리의 삶과 환경의 문제를 세세히 정의하며 우리 고유의 해법을 모색하기보다는 큰 틀에서 신속하게 국토 인프라를 조성하고 대량으로 주거를 공급해야 한다는 등의 거대 목표를 위해 대규모 국가 프로젝트를 급박히 수행하는 것에 치중했었다. 시대적 과제였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소위 해외의 선진 우수사례를 속히 참고하여 낙후된 우리 현장에 신속히 적용하는 구도를 당연시하였고, 어느 정도의 성공을 이루며 오늘에 이르렀다.

코로나19 상황은 이제 건축과 도시공간 변화의 해석과 대응을 연구하는 우리에게 매우 복합적이고 동시에 역설적인 성찰을 촉구한다. 세부적으로 K-방역의 성공적인 환경 요인을 현장에서 다시 분석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잘하는 것 중에는 예를 들어 중앙정부의 역할도 있다. 건축도시공간정책에서 지역 현장의 강점을 파악하고 주민참여 및 주민소통의 요소를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라도 중앙정부의 역할을 약화 혹은 배제해 가기보다 오히려 이를 견제하며 어떻게 창의적으로 그 지원체계를 지역 현장에 합당하게 재적용하고 활용할 것인지도 새삼스레 다시 고민해야 한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번 K-방역의 긍정적인 평가를 계기로 행여 이전 시대의 경직된 동원체계나 행정만능 태도로의 회귀 본능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지 조심히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 그러나 잘하느라고 놓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더 감수성 있게 접근해야 하리라 본다.

참고문헌

- 1 KBS, 시사IN, 서울대학교. (2020). 코로나 이후 한국사회 인식조사.

코로나19 감염관리를 위한 새로운 시설: 생활치료센터

조비룡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공공진료센터장, 교수

2020년 6월 20일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 사망자 수는 46만 명을 넘어서고 매일 14만 명 이상의 새로운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5,000명 이상이 매일 사망하고 있다.* 치사율은 5%를 넘어서는데, 이는 20명의 환자가 발생하면 1명이 사망한다는 의미이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치사율은 2.26% 정도인데, 전 세계적으로 0.1%에서 18%로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다.

이렇게 치사율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의료시설과 역량 차이 때문이기도 하지만, 환자들의 나이와 하루 발생 환자 수 등도 크게 작용한다. 현재 치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나라는 프랑스·영국·이탈리아 등인데, 이는 고령의 환자가 다수였고, 하루에 발생하는 환자 수가 폭증하면서 치료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인력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2020년 2월 중순에 대구와 경북에서 코로나19 환자들이 폭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대구와 경북지역의 치료 가능한 병상이 모두 차면서 이후 발생한 환자들은 입원할 곳이 없어 집에서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다. 한때는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입원할 병실이 없어 집에서 대기하였고, 일부 대기자 중 사망자도 발생하였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검색일: 2020. 6. 20.)

©연합뉴스



문경읍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에 마련된 생활치료센터

다행히 코로나19 환자가 모두 중증으로 입원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약 80%의 감염자는 증상이 거의 없거나 약하고, 20%가 중증으로 발현하여 입원치료를 받게 되며, 약 5%가 중환자실 치료를 받거나 사망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자를 모두 입원시키면, 약 80%의 환자는 큰 증상과 치료 없이 관찰만 하다가 퇴원하게 된다.

문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몸에서 없어질 때까지의 기한이 3주 전후로 소요되므로, 그동안 병원의 병실을 중환자의 치료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낮은 감염자들을 미리 선별해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치료 또는 관찰하는 방안으로 ‘생활치료센터’가 구상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2020년 3월부터 이러한 취지로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폭증하는 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생활치료 센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저자가 담당하던 서울대병원 문경 인재원 생활치료센터를 포함하여 총 16개의 센터가 가동되었다. 이후 서울과 경기도에서도 따로 생활치료센터를 개소 및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생활치료센터의 모듈형 응급방실
필요한 곳에 이동하여 간편하게 설치, 운용이 가능하다.

생활치료센터의 기능

생활치료센터는 병원과 집의 중간단계로 병원의 의료시설 확보에 목적이 있지만, 감염환자 관리를 위한 격리나 시설의 청결 및 소독 그리고 건강상태의 모니터링이 원칙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추가로 건강을 잃지 않도록 관리해 주는 역할이 보완되어야 한다.

감염증 환자의 격리

경증의 코로나19 환자들도 감염력은 높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면 바이러스를 옮길 수 있다. 그러므로 균이 없어질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이 일어나지 않도록 격리할 수 있어야 한다.

시설 청결 유지 및 소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대개 비말로 감염이 되지만, 일반적인 생활시설에 바이러스들이 상당 기간 생존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자들이 접촉한 시설과 장소는 주기적으로 소독하여 감염원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이송

코로나19 감염 후 중증으로 악화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건강한 젊은이들의 경우는 중증으로 이어질 가능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젊고 병이 없는 청장년의 사망도 간간이 보고되고 있어 100% 안심할 수는 없다. 또한 코로나19의 특징 중 하나가 갑자기 악화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환자는 의료진과 격리된 상태에서도 건강상태가 주기적으로 자주 모니터링되어야 하고, 상태가 악화되는 징조가 발생하면 가능한 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어야 한다. 경증 환자의 절반 정도는 가벼운 증상이나 불쾌감을 느끼므로 이러한 증상들도 모니터링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투약·진찰·상담 등 의료적 관리가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건강한 생활시설

평균 3주 전후로 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동안 건강하고 의미 있는 생활이 영위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에는 육체적 건강뿐 아니라 정신적 건강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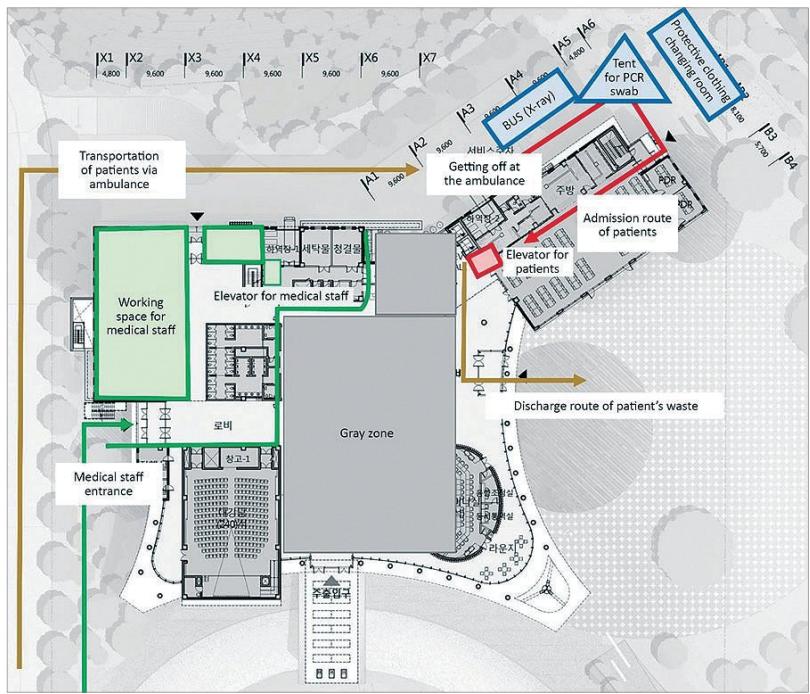
서울대학교병원 문경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시설과 역할*

대구·경북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의 폭증으로 생활치료센터가 급작스럽게 구상되었기 때문에 각 생활치료센터들의 상황은 어느 병원과 지자체가 다지인하였느냐에 따라 나름 특색이 있고 방침이 조금씩은 다르다. 서울대학교병원은 대구·경북과 가까운 문경에 연수원을 갖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초기에 생활치료센터로 기능을 전환하였다. 많은 센터가 장소의 소유자와 의료진의 소속이 다른 반면에 문경 인재원은 장소와 인력이 모두 서울대학교병원 소속이어서 좀 더 많은 의료진과 의료물자가 투입되었고, 의료적인 기능을 더 많이 수행한 편이다.

감염증 환자의 격리를 위한 배치

문경 인재원은 서울대학교병원의 교육 연수 시설로 지상 7층, 지하 1층에 모두 101개의 객실을 보유한 건물이다. 그런데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진과 환자들의 거주지역이나 동선이 겹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의료진의 시설과 거주는 1층에 위치하고, 2층을 버퍼공간으로 비워 둔

* 서울대학교병원(2020)



문경 인재원 생활치료센터의 다이어그램

녹색이 청결지역, 붉은색이 오염지역, 회색이 의료진 활동 구역, 노란색이 환자와 폐기물의 동선, 푸른색이 외부 서비스 팀의 동선을 나타낸다.

채 3층을 개인보호구 착탈의 공간으로 썼으며, 환자들의 방은 4층 이상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환자들의 입소·퇴소·검사 시의 동선을 엘리베이터를 포함하여 의료진의 출퇴근이나 검사실 이동 동선과 겹치지 않도록 하였을 뿐 아니라 가능한 한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지도록 배치하였다.

하지만 1층의 경우 의료진과 환자의 동선이 겹치게 되어 이를 물리적으로 잘 구분하여야 하는데, 동쪽과 서쪽 끝으로 가능한 한 멀리 떨어지도록 하였고, 중간 구역을 넓게 준오염구역으로 설정하여 충분히 분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엘리베이터는 환자용·의사용·화물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고, 환자들은 입소·검사·퇴소 시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환자용 엘리베이터의 경우 2·3층에는 아예 설 수 없도록 하였다.

3층은 개인보호구 착탈의 공간으로, 배식과 약품전달 때 서쪽 엘리베이터로 올라가 착의하고 로비 쪽 엘리베이터로 이동한 후 의료진 엘리베이터를 타고 환자들이 거주하는 객실 층으로 올라가도록 하였다. 업무



문경 인재원 생활치료센터의 코로나19 감염 입소자와
서울대학교병원의 의료진과의 화상진료 장면



생활치료센터의 워크스루 검사 시설
(붉은 색의 천막)

를 마치고 복귀할 때에는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야외 정원에서 탈의한 후 손 소독을 하고 서쪽 엘리베이터로 이동하여 1층으로 이동하도록 하였다.

건강상태 모니터링 및 관리, 이송 시설

환자들의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상담은 주로 1층 의료진의 진료공간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원격으로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의료진은 서울대학교병원에 위치하였으며, 문경 인재원의 1층에는 검사와 이송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만 상주토록 하였다. 특히 흥부 엑스레이 촬영은 건물 밖에 있는 버스 안에서 이루어졌으며, 바이러스 채취 검사는 야외에서 워크스루(Walk-through)로 진행되도록 배치하였다. 엑스레이 촬영 및 바이러스 채취 검사 의료진은 완전 방호복을 착용한 후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착의와 탈의가 각각 다른 컨테이너 박스에서 이루어졌다. 이와 함께 검사를 위한 환자들의 이동 동선이 청결지역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조정하였다.

생활치료센터의 의의와 미래

생활치료센터는 우리나라에 코로나19 감염환자 수가 갑자기 증가하였을 때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작스럽게 기획되어 가동되었다. 다행히 초기 대구·경북에서 폭증한 환자들의 상당수를 잘 관리하고 퇴소시키는 역할 까지 마무리한 뒤 최근까지 환자 수가 줄면서 대부분 문을 닫고 있다.

아직까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여 관리된 환자들 중 사망한 경우가 없고, 생활치료센터의 의료진이 감염된 경우도 없어 매우 성공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서울과 경기지역의 코로나19 감염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의 생활치료센터 확장을 재기획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감염 관리에서는 꼭 필요한 개념이자 역할시설로 자리를 잡은 것이다.

생활치료센터와 같이 질병의 중증도 또는 필요한 서비스의 종류 등에 따라 새로이 만들어진 준의료시설들은 꽤나 있다. 산후조리원, 요양원, 재활원 등이 대표적이다. 생활치료센터가 기존의 이러한 시설과 가장 다른 점은 사회에 대한 영향력이다. 산후조리원이나 요양원을 가고 가지 않고는 주로 환자 개인에게만 영향을 주지만, 감염환자가 생활치료센터에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본인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감염을 얼마나 막을 수 있는가에도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대부분 지원해 주며 약간은 반강제적 입소를 요구할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퇴소 시기를 제한할 수도 있다.

이번 코로나19의 급격하고도 전 세계적 발병은 앞으로도 지속될 세계화·도시화 등에 기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감염증은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고, 생활치료센터와 같은 역할은 또다시 필요할 가능성이 많다. 생활치료센터의 역할과 시설은 물론 감염증의 특징에 따라 조금씩 달라져야 하겠지만 ‘격리’, ‘건강 모니터링 및 관리’, ‘시설 청결 유지’ 등의 기능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기능과 시설도 바이러스의 특징과 감염병의 역학이 밝혀지면서 조금씩 바뀌었다.

생활치료센터의 비의료적인 문제점 중 하나는 크게 불편함이 없는 경증 환자가 시설에 갇히듯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생활치료센터에서도 운동을 시켜 주거나, 유선으로 스트레스 등에 대한 심리상담을 해 주는 등의 서비스가 일부 보완되었지만,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을 지속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 때문에 감염되었다는 것 외에 큰 증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상당히 외롭고 어려운 경험들이었다고 많은 환자가 토로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새로 개소할, 좀 더 준비된 생활치료센터들은 이런 경증의 환자들이 격리된 것 외에는 다른 불편 없이 평소 자신이 하던 일이나 업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고 배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코로나19 대처에서 생활치료센터를 통해 얻은 경험은 ‘그 질병의 병리와 대처방법을 잘 알면 이에 맞는 효율적인 치료 서비스가 가능한 시설을 디자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 분야들의 협업 및 소통의 효과와 효율성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검색일: 2020. 6. 20.)
- 2 서울대학교병원. (2020). 서울대학교병원 인재원 생활치료센터 운영백서.
- 3 Kang, E., Lee, S. Y., Jung, H., Kim, M. S., Cho, B., & Kim, Y. S. (2020). Operating Protocols of a Community Treatment Center for Isolation of Patients with Coronavirus Disease.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26(10).

감염병 관리를 위한 시설 확충 및 개선 방안

방재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일부 국가에 피해를 준 기존의 감염병과 달리 188개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하였고, 36만여 명의 사망자와 581만여 명의 확진자가 나타났다.* 한국은 사망자 269명, 확진자 1만 1,402명이 발생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다(2020년 5월 29일 기준). 그러나 지속적으로 감염자가 나타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코로나19 이전으로의 복귀는 어려워 보인다.

국내 의료계의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 내 새로운 감염병의 발생을 2021년으로 예측하였다고 한다. 2000년대 들어 2003년 사스(SARS), 2009년 신종플루, 2015년에 메르스(MERS)가 6년 주기로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지 않은 에볼라, 지카 바이러스까지 포함하면 감염병의 발생 주기는 점점 짧아지고 있다.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언론사인 한겨례가 한국기후변화학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새로운 신종 감염병의 발생시기를 3년 이내로 보는 전문가가 40%로 나타났다(최우리 2020).

*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en Coronavirus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검색일: 2020.5.29.)

전문가들은 감염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기후변화’와 ‘인간의 생태계 파괴’로 바라보고 있어 ‘혁명에 가까운 생태적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한 감염병은 반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안희경 2020). 슬프고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재난과 감염병의 상시화’를 전제로 감염병 관리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코로나19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한 감염병 관리시설

2015년에 겪은 메르스의 경험과 당시 얻은 교훈이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큰 역할을 하였다. 질병관리본부의 대책들은 매우 효율적으로 추진되어 국내외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 발현 이후 신속하게 진단키트를 준비하였고, 28명의 환자가 나타난 시점에서 가용할 수 있는 최대의 음압병상 준비 등 감염확산 시나리오에 기반한 체계적인 대응이 큰 역할을 하였다. 무엇보다도 의료인과 공무원들의 헌신과 봉사가 감염 확산을 저지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였다. ‘덕분에 캠페인’이 말로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개선으로 연결되는 대책이 시급하다.

물리적인 시설 혹은 건축의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19의 진단 및 치료, 확산 방지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 시설들은 크게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음압병동(병실), (음압)중환자실, 임시생활시설로 구분이 가능하다. 5개 시설 중 감염병 환자를 집중 치료하는 음압병동과 중환자실, 검사 및 진단을 하는 선별진료소는 의료시설이다. 선별진료소는 진단의 성격 외에도 증상이 있는 피검사자를 일반 환자와 분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므로 병원 내 감염을 방지·차단하는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따라서 선별 진료소는 일반적으로 의료기관에 설치되지만, 급증하는 의심 환자의 빠른 진단을 위해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장소인 주차장이나 외부공간에 설치하여 운영되기도 한다.

감염병 환자가 급증할 경우 병원에서 모든 환자를 치료할 수 없으므로 일반 의료체계의 보호를 위해 국민안심병원과 경증환자를 위한 생활 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일시적으로 자가격리가 필요한 검사 결과 대기자 혹은 해외 입국자들을 위해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연수원이나 기숙사를 일시적으로 용도 전환하여 활용한 생활치료센터와 임



감염병 관리시설의 유형

출처: 저자 작성

시생활시설은 「건축법」상 비의료시설이다. 감염의심자, 경증환자, 중증 이상의 환자를 구분하여 효율적으로 치료하고 의료시설과 비의료시설을 적절히 활용한 방식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코로나 19의 장기화와 2차 대유행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관리시설의 확충과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선별진료소의 유형별 기능 정립 및 시설기준 도입 필요

선별진료소는 2020년 4월 23일 기준 613곳이 설치·운영 중이다. 자동차 이동형[드라이브 스루(Drive-through)] 선별진료소 71곳을 포함하면 총 684곳의 선별진료소가 운영 중이다.* 대다수 선별진료소는 종합병원, 병원, 지역의료원, 보건소에 설치된다. 선별진료소의 60%(366곳)는 병원과 지역의료원에, 38%(230곳)는 보건소에 설치되었다. 전국의 모든 보건소에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었는데 인구밀집 지역인 수도권과 일부 광역시는 보건지소와 보건분소에도 설치하였다. 서울시는 보건소가 운영하는 건강상담소에도 설치하였다.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는 의료기관의 주차장과 외부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71곳 중 56곳이 병원과 보건소의 외부공간 (주차장)에 설치되었다.** 15곳은 공공청사, 경기장, 운동장, 체육관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link>(검색일: 2020.4.23.)

** 주차장 등 외부공간에 여유가 있는 병원과 보건소에서는 일반적인 선별진료소와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차장과 공용주차장을 활용하였다. 공공건축물의 외부공간이 선별진료소 설치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진과 검사자의 접촉을 방지하는 도보 이동형[워크 스루(Walk-through)] 선별진료소, 인천 공항 검역단계에서 입국자의 빠른 진단을 위해 도입된 개방형 선별진료소[오픈 워킹 스루(Open Walking-through)] 등 다양한 유형의 선별진료소가 설치되었다.

선별진료소의 유형이 다양하므로 유형별로 시설기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어떤 진료소는 컨테이너, 어떤 진료소는 천막으로 조성되고 엑스레이 장비를 갖춘 곳과 그렇지 못한 곳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 응급실과 연계되어 설치되는 선별진료소가 ‘코로나 검사-확진 판정-격리치료’로 이어지는 게이트 역할을 하여야 하지만, 의심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는 설정이다. 또한 단기간에 다수의 진료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역이나 의료기관별로 기능과 역할에서 편차가 발생하였다(곽성순 2020).

선별진료소가 설치되는 기관과 장소에 따라 기능과 역할을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유형별 운영 및 시설기준 도입이 필요하다. ‘접수-검체 채취-검체 관리-진료실-진단검사 의학센터’ 등으로 연결되는 선별진료소



다양한 형태로 조성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3월 4일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표준운영지침을 제시하였다. 운영방식, 인력, 공간조건, 고려사항으로 지침이 구성되었다. 운영모델과 지침의 구체화와 유형별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보건복지부 2020b).



자동차 이동형 선별진료소

의 운영방식과 의료인력 및 지원인력 배치기준, 교차감염이나 추가감염을 방지할 수 있는 의료진과 검사자의 동선 체계(차량동선, 보행동선) 구분, 검사 및 진료에 필수적인 공간의 규모 및 조건(음압, 양압 기준), 의료진의 감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준과 휴게공간 확보, 의료기기(장비) 설치기준 등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검사대상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선별진료소의 검사 속도가 중요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하는 현 시점에서는 선별진료소의 유형별 기능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시설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경증환자 치료를 위한 생활치료센터’의 안정적 확보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대구·경북지역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2020년 3월 20일 기준 16곳이 조성되었으며 퇴원 환자가 증가하여 점차 기존 용도로 전환 중이다. 정부,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연수원 및 대학교 기숙사 등이 활용되었다. 생활치료센터는 중상이 심하지 않은 ‘경증’ 환자를 격리해 치료하는 시설로 병원은 아니지만 의료진이 건강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병원으로 입원(이

(송)시키거나 퇴원을 시킨다.* 생활치료센터는 경증 환자로 인해 중증 환자가 입원하지 못하는 상황을 막거나 자택 격리로 인한 증상 악화를 방지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3월 중순에는 생활치료센터에 2,500명 이상 입소하여 병상부족 문제를 해결해 주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경증 환자에게 필수인 격리·숙식·치료가 필요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인원이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교육연수시설이나 기숙사 등을 활용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효율적이나 의료시설이 아닌 건물의 기능적인 한계가 제약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1인실보다는 다인실이 많아 환자들의 개별격리가 제한적인 점, 병원과 달리 의료진과 환자의 격리공간이 충분하지 못한 점, 건축설계 시 고려가 필요한 의료기기 활용 및 설치의 제약, 병원에 필수적인 설비시스템(음압, 환기) 미설치 등 다양한 문제점이 나타났다.

그럼에도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이나 장기화를 고려할 때,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생활치료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우선 센터에 필수적인 기능과 공간, 시설기준을 정립하고 이를 토대로 유사시 활용 가능한 생활치료센터 후보군을 선별하여 경증환자 수와 확산 속도에 대비한 생활치료센터의 단계별 확충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인구밀도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생활치료센터의 입지를 선정하고 시설·인력기준 등을 검토하여 연수시설, 기숙사, 수련시설, 숙박시설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연수시설, 기숙사 등을 신축하거나 리모델링할 때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건축기준이나 시설운영기준(환기설비 등)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0년 후나 20년 후에 코로나19보다 전염력과 치명률이 높은 감염병이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혈압과 체온 등을 기준으로 최중증·중증·중등도·경증 4단계로 분류하고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며, 나머지 3단계의 환자들은 정도에 따라 기준 방식대로 음압 격리병실 등에서 치료를 한다.

‘자가격리자(이재민)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의 확충 및 운용방안 마련

이와 더불어 자가격리자를 위한 임시생활시설(임시주거시설)의 확충 및 운용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코로나19를 통해 해외 입국자,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 검사결과 대기자 등 일정 기간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 외에도 생활치료센터 등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의 효용성이 확인되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감염병은 사회재난의 한 유형이고, 감염으로 인해 자가격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재난으로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이재민에 해당한다. 또한 감염병과 같은 재난 발생 시에는 자가격리자뿐 아니라 노숙인 등 감염관리에 취약한 계층, 안정적인 주거지 확보가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주노동자 밀집주거지에서 확진자가 급증한 카타르와 싱가포르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난으로부터 효율적으로 사회 운영을 정상화하는 복원시스템이 필요하고 복원의 시작은 재난 시 이재민의 육체적·심리적 건강을 유지 할 수 있는 사회지원체계와 물리적 시설에서 시작된다. 천막, 텐트, 대형 체육관 등은 장기적인 재난에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감염병 등 다양한 유형의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임시주거시설 후보군 확보와 시설 개선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임시주거시설은 구호와 보호의 기능 외에 지역의 사회·경제적 활동 정상화에 필요한 시설이므로 재난의 유형과 특성에 대응할 수 있는 조성 기준과 지침 마련이 필요하다.

음압병상과 중환자실의 지속적인 확충

코로나 환자 치료에 큰 역할을 수행하는 음압격리병실은 공간마다 차등 한 공기압을 유지해 병원균이 외부로 빠져나오지 못하게 하고 이를 통해 안전한 환경에서 환자를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도록 고안된 병실이다. 음압격리병실은 1인실 설치가 원칙이며 전실, 격리실(화장실, 샤워실), 단독배기(전외기 순환 방식), 음압차 확보를 위한 설비가 필수적이다. 입원치료구역 외에 음압격리 준비구역과 전이구역 등이 필요하고, 여러 시설 및 설비가 필요하여 설치가 쉽지 않고 많은 비용이 든다.

* 2020년 4월 1일부터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는 2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 격리를 해야 한다.



음압격리병동의 공간 구성(색이 진할수록 음압이 강함)

출처: 질병관리본부(2019, p.12)

음압병상은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국가지정 음압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198개 병상)이 운영 중이었다. 이 외에 시·도 지정 음압병상, 300개 병상 이상 의료기관 의무설치에 따른 병상 등을 포함하여 2020년 2월 22일 기준으로 모두 1,077개의 음압격리병실이 운영되고 있다(보건복지부 2020a).

질병관리본부는 최근 중증환자 치료를 위한 국가지정 음압병실 확충사업을 통해 17개 의료기관(83개 병실)을 선정하고 총 3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이번 확충사업을 통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은 29개 의료기관 161개 병실(198개 병상)에서 39개 의료기관 244개

*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이란 평시 및 국가 공중보건 위기 시 신종 감염병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장이 설치와 운영을 지원한 감염병 관리시설을 말한다.

** 격리음압병실당 3억 5,000만 원, 엘리베이터 1억 5,000만 원 지원

병실(281개 병상)로 확대된다(보건복지부 2020c).

앞으로 점진적인 음압병상 확충이 필요하며 감염병 발생에 따라 병상 부족 시 민간의료시설에 있는 음압병상의 효율적인 활용, 임시 음압병상 설치, 일반병원의 감염병 전문병원 전환 등을 통해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장기적으로는 일반병상의 음압병상 전환을 위한 기술과 시설기준 도입 방안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더불어 코로나19 중환자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경증환자는 생활치료센터, 중증환자는 감염병 전문병원이나 음압병상에서 치료를 하지만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중환자실에는 음압병상이 없고, 음압병상에는 중환자 치료에 필요한 인공호흡기나 각종 모니터링 장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2차 대유행에 대비한 중환자실, 인공호흡기, 필요의약품 등 중환자 진료체계 및 자원 확보가 절실하다.

감염병 관리시설 간 위계와 역할 정립이 필요

감염병 관리시설의 핵심시설인 음압병상과 중환자실은 의료시설로서 「의료법」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관련 규정과 지침으로 조성되고 운영되므로 의료 및 방역정책의 운영과 소프트웨어(의료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등)와 연계되어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반면 임시생활시설이나 생활치료센터는 비의료시설로서 「건축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재해구호법」등의 영향을 받고 있다.

감염병 관리는 물리적인 시설 개선에 주안점을 두기보다 향후 감염병 재발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다. 감염병이 사회재난의 일종임을 감안할 때 임시생활시설과 생활치료센터 등은 의료시설로 볼 것인가? 재난시설로 볼 것인가? 연수원·기숙사 등 교육연수시설 등이 탄력적으로 재난 시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건축법」과 관련 규정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또한 각 시설의 관련 부서와 근거 법령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이와 같은 이슈들을 고려한다면 감염병 관리시설은 의료, 방역, 보건, 재난, 건축정책이 교차하는 지점에 위치한다. 감염병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고 시설의 위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이 설립되어야 한다. 지난 4월 14일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사업 공모를 계기로 지지부진하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감염병 관리'와 '일상적 환자 진료'가 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고, 더 나아가 일상과 재난의 경계에서 유연성과 탄력성을 지닌 공공의 공간과 건축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이 시작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1 안희경. (2020). 제러미 리프킨 "코로나는 기후변화가 낳은 펜데믹 … 함께 해결 안 하면 같이 무너져". 한겨레. 5월 14일 기사.
- 2 보건복지부. (2020a).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범정부대책회의 브리핑. 2월 23일 보도자료.
- 3 보건복지부. (2020b).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 3월 4일 보도자료.
- 4 보건복지부. (2020c). 코로나19 등 대비 응급병실 83개 확충. 5월 29일 보도자료.
- 5 질병관리본부. (2017). 감염병 관리시설 평가지침.
- 6 질병관리본부. (2019).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운영과 관리지침.
- 7 곽성순. (2020). [기획] 체계적 시스템 없는 '선별진료소', 신종 코로나 확산 막을 수 있나?. 청년의사. 2월 7일 기사.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76920>
- 8 충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16).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방안 연구 개발. 질병관리본부.
- 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http://ncov.mohw.go.kr/#link>(검색일: 2020.4.23.)
- 10 죄우리. (2020). 전문가들 "새 감염병 발생 주기, 3년 이내로 단축될 것". 한겨레. 5월 19일 기사.
- 11 한국의료복지건축학회. (2018). 의료기관 건축설계 가이드라인 연구. 보건복지부.
- 12 Johns Hopkins University & Medicen Coronavirus Resource Center 홈페이지. <https://coronavirus.jhu.edu/map.html>(검색일: 2020.5.29.)

코로나 시대, 활동적인 도시 생활환경을 다시 생각하기

유승현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활동적인 도시

구성원들의 신체활동이 활발하고, 연료에 의존하는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대신 가능한 범위에서는 걷기나 자전거 등 활동적이고 자연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동하는 ‘활동적 이동(active transportation)’을 하며, 개인 자동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러한 생활방식이 가능하고 사람들에게 더 나은 선택이 되도록 환경과 제도가 뒷받침하는 도시. 이러한 ‘활동적인 도시(active cities)’를 추구하는 것은 도시 건강의 주요 주제이고, 따라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활발한 움직임을 유도하고 촉진하는 도시 생활공간의 구성·배치·활용·관리는 도시 건강의 중요한 과제이자 전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활동적인 도시에 관한 논의는 활동성 관점에서 도시공간의 구조와 이용을 검토·개선하고, 도시의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며, 공간을 만들어 내거나 공유하고, 서로 목적과 용도가 다른 공간이나 시설을 집약적으로 배치해서 신체활동 동선과 양을 유발하는 전략의 개발과 실행에 집중되었다.

활동적인 도시의 세부 내용 중에서 걷기를 주제로 연구를 하면서 작년까지 시민들과 면담조사를 하였을 때는 ▲미세먼지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시간의 혼잡 ▲신체활동을 할 수 있는 근린의 공공시설과 오픈 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미충족 ▲보차혼용도로에서 일어나는 보행자-이

륜차-자동차 간의 갈등 ▲온라인 서비스화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활용성 ▲‘총알 배송’ 같은 도시의 편의가 걷고 움직이는 기회를 줄이는지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국제학술대회에서는 방과 후 운동장 또는 영업 외 시간에 쇼핑몰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거나, 주말에는 거의 통행이 없는 도심지역 사무용 건물 주변의 도로를 주말 한정 도심광장 형식으로 변용해서 사람들이 걷고, 활동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전략이 다수 소개되었다. 그러면서 이 전략을 추진할 때 제도적·공간적·사회문화적 그리고 건강 관점에서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지를, 또 전략의 효과를 ‘건강’, ‘환경’, ‘지역경제 활성화’, ‘경제적 효율성’, ‘정책의 인지도와 지도’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평가하는 방안을 다루었다.

도시 생활공간의 공유

그리고 보니 예년 같으면 봄부터 서울의 광화문 광장 세종대로에서는 일요일마다 차 없는 거리가 시행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2020년의 우리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발생과 확산 때문에 도시 생활공간과 전례 없는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다. 도시의 많은 사람이 매일 필수로 이용해야 하는 기본 시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조심과 불안을 인식하는 밀폐된 실내공간에 속하게 되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제한된 실내공간을 모르는 누군가와 공유할 때, 혼잡한 공용공간을 이용할 때에 종종 불편함과 불쾌함 그리고 불안이 따라오곤 하였다. 그러나 밀접 접촉을 통해 전염되는 감염병의 대유행(pandemic) 상황에서는 제한된 실내공간을 불특정 타인과 밀집도 높게 공유하는 것이, 그리고 그것이 일상에서 피하기 어려운 필수 요소라는 점이 가져오는 불안과 거리낌이란 전에 비해 종류와 정도가 다르다.

그동안은 도심 근린에 일터와 쉼터, 생활편의 시설, 흥미로운 상점이나 문화거리를 복합적으로 구성하면 한정된 도시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면서 사람들의 신체활동과 사회적 교류의 유도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감염병의 대유행 속에서는 사람들의 밀집과 접촉을 차단해야 할 공간이 되었다. 같은 공간에서 땀을 흘리고 호흡하고 기구를 공유하는 실내 운동

시설, 시민들이 모임과 활동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공기관 유휴공간은 코로나19 이전에는 도시공간 자원과 경험의 공유 성격이 컸지만, 이들 시설에서 모임을 자제하라는 안전 안내 메시지를 연일 받는 지금은 공간 공유를 감염 예방과 차단이라는 면에서 바라보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사태 이후로 밀폐공간에 들어가서 대인 접촉을 하지 않는 자전거와 킥보드, 그 외 개인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어난다는 보도가 있었다. 활동적인 도시를 지지하지만 개인 소유 차량 이용의 선택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코로나19 상황에서 개인 차량 이용을 선택한 사례도 상당히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또 실내공간 공유를 통한 활동이 제한되고 재택근무, 비대면 수업, 외출과 모임 자제가 수개월째 계속되면서 출퇴근과 통학 등 목적지까지 이동하기 위한 걷기가 줄어든 경험은 많은 사람이 체험하고 있을 듯하다.

필수적인 이동을 위해 걷기, 자전거, 대중교통보다 개인 차량 이용이 늘어났다면 우리는 활동적 이동에서 전보다 멀어져 버린 것이고, 이는 건강과 환경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것이다.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활동이 제한되어 삶이 확 껐다는 뜻의 신조어 ‘확찐자’가 유행하고, 코로나19에 대한 스트레스나 불안과 무기력을 느끼는 ‘코로나 블루’가 생겨 나는 2020년의 현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를 유념한 대책이 필요하다.

개인 공간의 확보

앞서 기술한 대로 공간 공유를 통해서 활동공간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동안 활동적인 도시를 추진하는 주요 개념이자 전략에 속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은 실내공간의 공유에 대해 위험과 불안의 관점을 가지게 만들었다. 한편 근무, 학습, 쇼핑, 여가, 사회적 교류 등 일상의 상당 부분을 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실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코로나19 이전의 활동 방식을 온라인 도구와 함께 실내에서 대체하는 활동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는 사무실에서, 학교에서, 운동 시설에서 하던 활동을 모두 집에 머물며 실내에서 한다는 뜻이 되고, 이런 기능을 하는 공간이 집 안에서 확보되는 지의 문제로 이어진다.

대학에서는 2020년 1학기 동안 학생들에게 등교를 자제하도록 하는 대신 수업을 온라인, 비대면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나 등교 자체 방침의 취지와는 다르게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 카페 등 사람들과의 접촉이 발생할 수 있는 경로와 장소로 이동하는 사례가 꽤 있었다.

거기에는 온라인 수업을 수강하기 위한 개인 공간이 거처에서 확보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었다. 수업에 따라서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질의응답을 하거나 과제 발표와 소그룹 토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처의 실내에서 이러한 활동을 할 개인 공간이 없는 학생들이 있었던 것이다. 다인 1실의 기숙사나 기타 공유시설에서 생활하는 학생, 가족들과 함께 살지만 개인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집에 연결이 안정되고 추가비용 부담이 없는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지 않은 학생들은 이러한 조건이 갖춰진 카페로, 혹은 학교 연구실까지 이동하게 되었다. 종일 집 안에서 생활하며 가족 구성원이 각자 재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수업을 해야 하는 다인 가족도 마찬가지의 맥락에서 공유사무실·모임공간·카페 등을 이용하거나 활동의 제한을 받으며 부대낌이 있었을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기존의 활동 대체 중에 많이 회자되는 ‘홈트’, 즉 인터넷 동영상을 따라 하며 집에서 운동하는 홈트레이닝도 공간 확보의 사안이다. 작은 원룸이나 기숙사처럼 공간의 한계가 있는 거주 형태나 소음·진동 등 동반되는 문제가 있는 공동주택 같은 주택 구조가 장애 요인으로 우선 떠오른다. 그리고 아마도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도시의 주택 공간을 어떤 기능의 공간으로 기대하고 평가하는지로 연결될 것이다.

앞으로 재택근무·화상회의·홈트레이닝과 온라인 수업 등이 더 보편화한다고 할 때, 우리의 주거공간은 가구 구성원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과 공간 구조 그리고 소재와 기능을 갖추기를 기대한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대로 필요 적절한 공간 확보가, 다인 가구는 구성원마다 생애주기에 맞는 주거공간 기능이 필요하다.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요구

코로나19 상황에서 주거 실내공간의 확보와 기능에 연결되는 또 한 가지 사안은 환기이다. 코로나19 예방 지침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바

로 손 씻기와 환기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주택 구조, 특히 고층 공동주택에서는 실내 환기와 통풍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있다. 외출 모임 자제 권고가 계속되는 중에 타인 접촉을 최소화한 상태에서 바깥 공기를 썰 방법도 제한적이다.

조그맣게라도 마당이 있는 단독주택에서는 마당에 나가는 것만으로도 타인 접촉 없이 바깥 공기를 쐬고 기분 전환을 할 수 있지만, 현실은 도시민의 다수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다. 과거의 아파트들은 실외 발코니가 있는 구조였지만 현재는 대부분 그 공간이 실내로 흡수·개조되어 있다. 요새는 집을 구할 때 조망을 중요시하게 되었듯이, 코로나19의 경험과 함께 실내 환기 용이성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나만의 외부 공간을 편리하게 가질 수 있고 환기에도 역할을 하는 발코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도 달라질지 모르겠다.

외부 공간으로의 연결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확장해 보면, 다시 활동적인 도시 생활의 주제로 돌아가게 된다. 코로나19의 유행과 함께 실내 운동시설의 이용이 여의치 않고, 사람의 밀집이 덜한 한적한 야외 활동을 한다 해도 건강을 위해 권장되는 빈도를 충족할 만큼 자주 하기는 쉽지 않으면서, 녹지나 오픈스페이스까지 가는 이동수단에 제한이 있는 사람에게 요구도가 두드러지는 것이 도시의 공원이다. 최근에는 ‘팍(park)세권’이라 불리면서 주거지나 근무지에서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공원이 있는 지가 생활하기 좋은 선호 지역의 요소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산이나 하천 주변의 걷기 길, 둘레길, 숲길도 마찬가지의 맥락이다.

코로나19의 경험에 도시공간에서의 생활 면면마다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를 일으켰듯이, 이제 감염병 대유행을 겪은 도시민에게는 공원은 좋은 편의시설 이상의 의미로,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소중한, 꼭 필요한 도시의 자원이 되었다. 도시공원의 조성과 유지·관리, 도시 생활권과 자연녹지로의 연결이나 접근성을 형평성에 입각해서 확보하는 것은 여전히, 그리고 더욱 중요해진 도시 건강의 과제인 것이다. 대규모보다도 접근성과 가용성이 좋은 도시공원을 여기저기에 확보하기 위한 공간 만들기(space-making)의 의제화와 함께, 이번 코로나19 상황을 계기로 물류의 이동 문제를 대

정의로운 가치

면하는 도시에서는 도시농업도 연동해서 생각해 볼 사안일 것 같다. 이상에서 언급한 내용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상황을 맞이한 도시가 공간과 건강에 관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논의 중 일부일 뿐이다.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상황은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여전히 진행 중이고, 지금까지의 경험만으로도 우리가 기준에 생각하고 실행한 많은 것들이 변화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활동적인 도시를 위한 공간의 공유나 압축과 다목적 활용 같은 기준의 전략이 도전을 받았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대응은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다.

공교롭게도 2020년은 도시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영역에서 지난 10년을 정리하고 다음 10년을 계획하는 이정표적인 시점이다. 보건부문에서는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 2020이 마무리되고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2030으로 이행하게 된다. 도시의 안정과 건강과 지속을 위한 기획의 시점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일상생활 여건인 사회적 건강결정 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들을 다루는 보건, 건축, 도시계획과 설계, 도시정책과 행정의 협업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다.

그러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더라도 언제 또 어떤 감염병 위기를 겪게 될지, 전파 양상이나 속도는 어떨지 알 수 없다면, 혹은 도시가 또 다른 위기 상황을 맞아 그때까지의 전략이 다시 도전받는다면, 대안이라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전략은 상황에 따라 변경하고 개발해야 하더라도, 바탕에 그 사회가 합의하고 공감하는 기본 가치가 자리 잡고 있어야 방향타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기본 가치의 핵심은 사회정의(social justice)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라고 생각된다.

건강위기·재난의 충격과 회복 부담을 더 크게 경험하는 사회적 약자를 고려하는 건강형평성(health equity) 제고를 위한 노력은 사회정의와 지속가능성을 가치 토대로 해서 건강지향적인 도시공간의 선택권, 보장성, 접근성, 가용성을 개선하도록 해야 한다. 도시 커뮤니티의 활동은 현재 위축된 면이 있겠으나 한편으로는 온라인 활동이 활발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고 본다. 사회적인 의제 형성이나 여론의 공감대는 온라인의 참여와 실행력이 컸던 선행경험도 있다. 우리 사회의 기본 가치와 형평성 기반의 건강지향적인 도시공간을 위한 노력에 온라인 커뮤니티의 역할과 역량,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의 확산 방안에 주목해 봐야 하지 않을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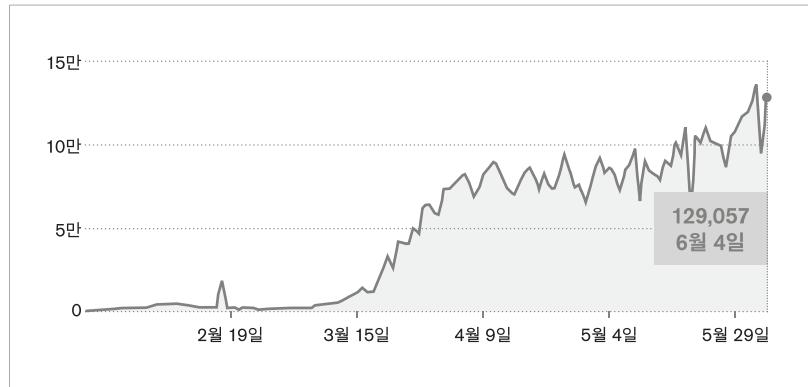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스마트도시의 가능성

조상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스마트·녹색 연구단장

현대 도시 문명에 대한 감염병의 위협

도시의 역사는 곧 ‘감염병과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도시는 사람과 재화가 모이고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플랫폼이기도 하지만 감염병 확산의 허브가 될 수도 있다. 특히 지금의 세계는 거의 모든 나라의 도시들이 글로벌 공급사슬로 연결되어 어느 한 곳에서 발생한 감염병이 쉽게 전 세계로 전파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다.

감염병은 전파 특성에 따라 수인성 감염병, 동물·곤충 매개 감염병, 호흡기 감염병, 후천성 면역결핍증(AIDS)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Reyes, R. et al. 2013). 이들 중에서 21세기 이후 세계적 유행 사태를 초래한 감염병은 모두 호흡기 감염병들로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SARS, MERS, COVID-19)가 그 원인이 되었다. 이들 중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의 경우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의료적 대응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의 경우 2020년 현재 유효한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경우 이전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들(SARS, MERS)과 비교해 봤을 때 치명률은 다소 떨어지나 전파 속도가 매우 빨라 세계 각국에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 세계 일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출처: Google(검색일: 2020. 6. 5.)

감염병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 개념은 코로나19 이전에도 있었다(Kinlaw, K. & Levine, R. 2007).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감염병 대응이 사회경제에 심각한 부담을 주는 일이 현실화한 경우는 코로나19가 처음이다. 통상적으로 감염병은 증세가 심각해진 이후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이 일어나는데, 코로나19는 증상이 경미하거나 무증상인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아 소위 ‘소리 없는 전파’가 잘 일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2020년 6월 기준, 이미 수개월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 세계적으로 실행되고 있음에도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 추세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비접촉을 뜻하는 언택트(untact) 개념이 주목받고 있다. 재택근무나 원격 교육, 원격 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은 이미 실험실이 아닌 웬만한 개인용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모두 담겨 있게 된 지 오래이다. 굳이 쓸 필요가 없었을 뿐이다. 그러나 각급 학교가 장기간 등교 수업을 못 하게 되면서, 확진자가 발견된 사업장들이 폐쇄되면서, 지역 내 감염 차단을 위한 집회 금지 조치가 시행되면서 많은 사람이 그동안 대면 접촉이 당연하다고 여기던 중요한 사회적 활동들을 비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 2020년 6월 5일 기준 전 세계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약 642만 명이고 일별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Google, 검색일: 2020. 6. 5.).

비대면 방식에 대한 집단적 경험은 관련 산업 분야에 중요한 성장의 계기가 될 것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 사회가 지금까지의 관습을 모두 버리고 비대면 중심 사회로 전환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아무리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해도 도시를 지탱하는 원동력은 물리적으로 가까이 무리 짓고 싶어 하는 인간 본성이다(Null, S. & Smith, H. 2020). 지금도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거래하고 정보를 공유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사랑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화상회의로 대체할 수 있을까? 결국 코로나19 이후의 도시는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추적·통제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도시의 물리적 공간과 사람 그리고 정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제 스마트도시는 과거에 상하수도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선택받은 도시가 누리는 사치가 아니라 도시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인 기반으로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 다음에서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기술이 감염병을 추적하고, 이동의 자유를 제공하며, 지역의 경제 활동을 지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 향후의 발전 가능성과 정책적 과제가 무엇인지 짚어 보도록 하겠다.

도시 데이터를 활용한 방역 체계 –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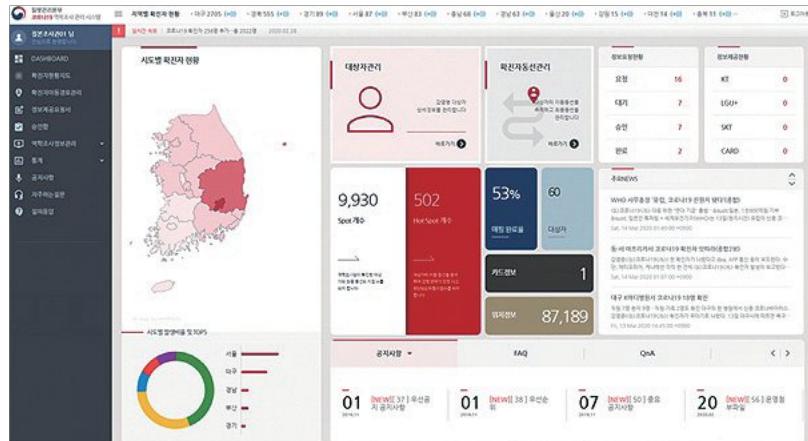
감염병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방역뿐만 아니라 발병한 사람과 접촉자의 확인 및 격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기존의 역학조사는 역학조사관이 감염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동선을 확인하고 방문 장소에 대한 소독 및 예상 접촉자를 추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진술에 의존한 방문 장소 확인은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허위 진술에 의해 조사가 지연되는 경우 접촉자 추적 및 격리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기 일쑤였다.

코로나19의 경우 전파 속도가 여타 감염병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빨라서 방역 당국은 감염자 진술 외에 경찰을 통한 휴대전화 위치정

보 요청 및 분석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는 여러 관계 기관 간의 승인절차 및 정보 전달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는 기존에 스마트시티 연구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된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을 기반으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역학조사관이 확진자의 접촉자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통신기지국에 남아 있는 휴대전화 접속 정보와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동선 정보를 추출하는 시스템으로, 질병관리본부·경찰청·여신금융협회와 3개 통신사 그리고 22개 신용카드사를 가상사설망(VPN)으로 연결하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국토교통부 2020).

이 시스템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언론으로부터도 집중적인 조명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의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감염병 사태를 계기로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대한 국가 통제가 급격하게 강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다. 그러나 이 시스템은 이미 역학조사관이 법률적으로 접근 권한을 갖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요청·수집·전송·분석을 자동화하는 시스템으로, 어디까지나 현행 법령의 틀 안에서 동작하는 제한적 시스템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의 도입으로 역학조사관 1명이 온종일 걸릴 일을 10분 만에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예시 화면

출처: 질병관리본부

처리할 수 있게 된 지금, 과거의 역학조사 체계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할 듯하다.

이에 앞으로 감염병 대응을 위해 더 많은 종류의 도시 정보를 동원하고 활용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질 것임을 쉽게 예상할 수 있다. 이미 도시 곳곳의 CCTV 영상을 연계한다거나, 정부와 지자체가 특정 종류의 시설에 대한 출입 기록을 수집·보관하고 필요시에 질병 통제 목적으로 활용한다거나 하는 등 여러 가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모두 아이디어 차원의 제안으로, 실제 감염병 관리 목적으로 도시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종류와 범위, 수집 방법, 저장 기간, 활용할 수 있는 조건과 절차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민 개개인의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이에 대한 해답은 아마도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사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 혹은 아예 종식되지 않고 토착화할 것인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그러나 여러 종류의 도시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수집·분석할 수 있는 도시 데이터 허브가 앞으로의 도시가 꼭 갖추어야 할 인프라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이동의 자유를 위한 스마트 모빌리티 이용의 증가

코로나19는 국민들의 소비 행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많은 전문가가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인터넷쇼핑이나 홈쇼핑 분야의 매출이 증가할 것을 예상하였고, 실제로 그런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하지만 의외로 2020년 3월 기준으로 매출이 가장 크게 늘어난 업종은 다름 아닌 자전거 판매업이었다(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0). 대중교통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이를 대체할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구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때문으로 풀이된다.

코로나19의 높은 전파력 때문에 세계 각국의 정부와 지자체가 대중교통 이용자들을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지로 고민이 깊다. 아직까지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대중교통 이용 과정에서의 대규모 전파 사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일일이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는 없기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대중교통수단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였고, 정부도 최근 개정된 지침을 통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 결과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동안 여러 지자체에서 전반적인 통행량이 감소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경우 2020년 3월 자가용 이용과 대중교통 이용이 동시에 감소하였다. 반면에 대중교통수단을 대체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그중에서도 자전거와 킥보드와 같이 개인화된 이동수단의 이용이 급증하였다. 고양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 ‘피프틴’의 3~4월 이용률은 2019년 대비 44% 증가하였다(일간경기 2020).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이용자는 2020년 2~3월 이용 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66.8% 급증하였다(서울특별시 2020a). 전동킥보드 공유 서비스의 이용 또한 크게 증가하였다(교보생명 2020; 뉴시스 2020).

그동안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는 스마트도시 관련 사업이나 계획에



세종시 공유 자전거 어울링과 공유 전기자전거 일레를 차량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약방의 감초와 같은 아이템이었지만, 실제로는 도입 및 관리 비용 대비 충분한 이용자를 확보하지 못해 대부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코로나19가 초래한 대중교통에 대한 불신이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산업에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수 있을까?

일단 국민들이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에 익숙해졌다는 점은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공유 차량(자전거, 킥보드, 공유 자동차 등)이 감염병 전파의 매개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가적인 관리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은 큰 부담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자가용 구입과 사용의 증가가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대중교통수단과의 시장 경합 문제,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의 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 등의 문제도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

지역화폐와 재난지원금을 결합한 지역 상권의 보호

사회적 거리두기가 장기화하면서 소비가 줄고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는 코로나19만큼이나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인류 역사상 최악의 질병은 아닐 수도 있으나 전 세계 경제에 끼치는 피해는 역사상 최악의 질병으로 기록될 수도 있을 듯하다. 이에 각국 정부는 앞다투어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 자금을 공급한다고 해서 이 자금이 정부가 원하는 곳에 사용된다는 보장은 없다. 특히 지금처럼 재난 상황에서 지역 상권의 붕괴가 임박한 때에 시장에 풀린 자금이 낙수효과로 지역 상권까지 도달하기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적 여유가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동안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도입한 지역화폐 시스템은 정부의 재난지원금과 결합되면서 지역 상권 보호 수단으로서 새롭게 조명받고 있다.

사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지방선거에서 빠질 수 없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자리를 잡았다. 이미 정부에서도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처럼 지역 및 특정 업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보조 화폐를 발행해 왔고, 최근 들어서는 ▲경기지역화폐(경기도) ▲인천e음(인천광역시) ▲시루(경기 시흥시) ▲여민전(세종특별자치시) ▲온

세종시 지역화폐 여민전
출처: 세종특별자치시



통대전(대전광역시) 등 그야말로 지역화폐의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지역화폐는 일반적인 화폐와 달리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는 그야말로 ‘불편한’ 화폐이기 때문에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만 사용자를 확보할 수 있다. 과거에는 종이 상품권 형태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 위해 많은 비용이 소요되었고, 사용자 혜택이라고는 그저 연말정산에 반영되는 소득공제율을 좀 더 높이는 정도여서 그다지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지역화폐는 모바일 앱과 연동된 선불카드 또는 체크 카드 형태로 발행되어 충전 및 사용이 편리해졌고, 지역화폐 사용에 따른 혜택도 직접적인 캐시백 적립 등으로 다양해져 국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스마트도시와 관련해서도 지역화폐의 활용이 다각도로 논의되고 있다. 주민들의 자원 재활용 활동에 대한 리워드 또는 포인트 제공,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및 대중교통 서비스에 대한 결제 편의성 제공, 신체활동 증진 등을 유도하기 위한 마일리지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서는 디지털화된 지역화폐가 기본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한 ‘재난 지원금’ 자체가 거주 지역을 기준으로 지역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의 일종이다. 재난지원금 시스템은 기존의 지역화폐 시스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일반 신용카드와 연계하여 재난지원금을 포인트 형태로 충전하고, 사용 가능 가맹점에서 해당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면 우선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차감되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또 재난지원

금을 기준의 지역화폐로 수령하는 것도 가능한데,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역화폐로 재난지원금을 받을 경우에 추가적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였다(서울특별시 2020b).

재난지원금 프로그램 시행을 계기로 지역 상권 보호에 지역화폐가 유용하다는 사회적 인식은 크게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효과적인 지역화폐 운영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재정적·행정적 부담이 크다. 또한 아직까지 많은 지역화폐에 대중교통 요금 결제 기능이 빠져 있는 등 불편함도 적지 않다. 지역화폐 운영에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의 참여 및 기여를 유도하고 대중교통 결제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아울러 지역화폐는 지역의 장소맞춤형 경제정책 수립 및 실행 수단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역의 경제 현상을 연구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최근 많이 활용되고 있는 카드 결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카드사에 매년 상당한 금액의 데이터 비용을 지불해야만 한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발행한 지역화폐의 경우 거래 데이터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지 않고, 이로 인해 실시간으로 지역 경제 활동을 모니터링하는 것도 가능해질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같은 지역 내에서도 상권별·입지별로 맞춤형 대책을 강구하거나, 지역 행사와 연동된 마케팅 채널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지역화폐 시스템을 스마트도시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시스템 통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맺음말

이상에서 코로나19 극복과 관련된 스마트도시 기술 및 서비스 사례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다. 그동안 스마트도시를 위해 개발되고 준비 중에 있던 도시 데이터 허브, 스마트 모빌리티, 지역화폐 시스템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감염병 전파의 차단을 위한 접촉자 추적 및 격리, 대안적인 이동수단의 제공, 지역 경제 기반의 보호와 활성화 측면에서 그 효과성과

효율성을 어느 정도 입증하는 데 성공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이러한 혜택은 스마트도시 계획이 수립되고 관련된 사업을 통해 인프라와 서비스가 확보된 도시에서만 제한적으로 제공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을 보장하는 데 도시 및 지역 간 격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는 보편적인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 필요한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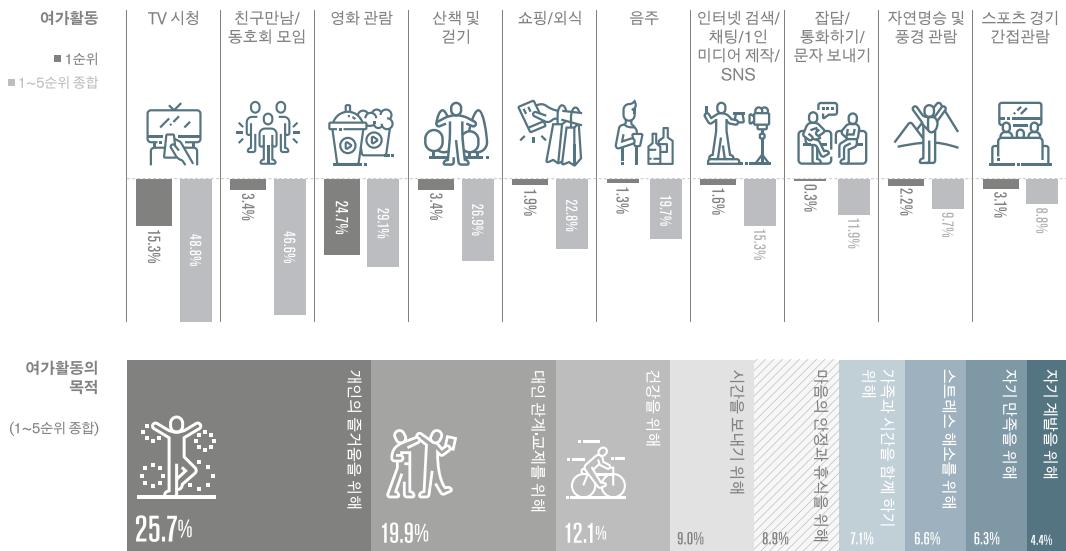
참고문헌

- 1 교보생명. (2020). 코로나19 이후, 공유 모빌리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은?: 교보생명 블로그 '가족 꿈 사랑'. 4월 28일 게시글.
- 2 국토교통부. (2020).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 온라인 질의답변(국영문). 4월 10일 자료.
- 3 뉴시스. (2020). 전동 킥보드 공유 시장, 6배 증가 … '코로나19 사태로 이용 급증'. 5월 26일 기사.
- 4 사이언스타임즈. (2020).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 19 추적한다: 역학조사에 스마트시티 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용. 4월 23일 기사.
- 5 서울특별시. (2020a). 서울시, 코로나19에도 안심…따릉이 이용 전년 대비 약 67% 증가. 4월 8일 보도자료.
- 6 서울특별시. (2020b). 재난지원금 '서울사랑상품권'으로…1만 원 추가 지급. 5월 15일 보도자료.
- 7 일간경기. (2020).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률 '껑충' … 고양시 공공자전거 '피프틴' 이용 44% 증가. 5월 8일 기사.
- 8 하나금융경영연구소. (2020).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 행태의 변화.
- 9 Kinlaw, K. & Levine, R. (2007). Ethical guidelines in Pandemic Influenza—Recommendations of the Ethics Subcommittee of the Advisory Committee to the Director,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Retrieved 2020-03-23.
- 10 Null, S. & Smith, H. (2020). COVID-19 Could Affect Cities for Years. Here Are 4 Ways They're Coping Now. The City Fix.
- 11 Reyes, R., Ahn, R., Thurber, K. & Burke, T. F. (2013). Urbanization and Infectious Diseases: General Principles, Historical Perspectives, and Contemporary Challenges. Fong, I. (ed). *Challenges in Infectious Diseases.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of the 21st Century*. Springer.

세종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 인식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세종시민의 삶을 풍요롭고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드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세종시민 320명을 대상(만 20세 이상 59세 미만)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는 대면 설문조사 방식으로, 2019년 9월 23일부터 10월 16일까지 24일 동안 이뤄졌다.

Q 세종시민은 어떤 여가활동을 하며 일상생활을 보내고 있을까? (종복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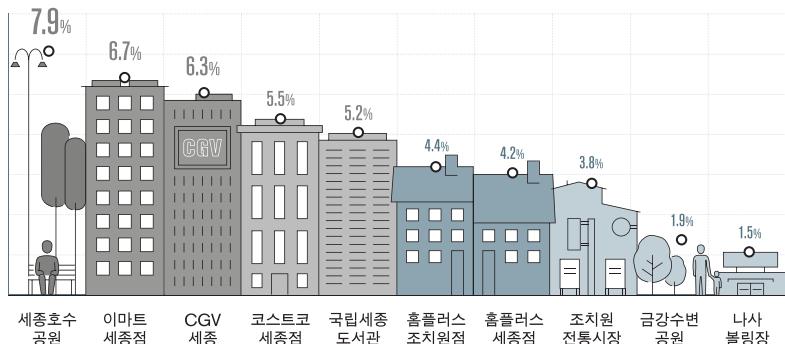
A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TV와 영화 등 영상매체 시청과 친구 동호회 모임

1순위 응답을 기준으로 세종시민들의 여가활동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영화 관람'으로 나타났으며, 1~5순위를 종합한 기준으로는 'TV 시청(48.8%)', '친구 만남/동호회 모임(46.6%)', '영화 관람(29.1%)', '산책 및 걷기(26.9%)', '쇼핑/외식(22.8%)'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 목적으로는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25.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대인 관계·교제를 위해(19.9%)', '건강을 위해(12.1%)' 순으로 나타났다. 여가활동과 그 목적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의 즐거움을 위한 영상매체 시청이 세종시민의 일상생활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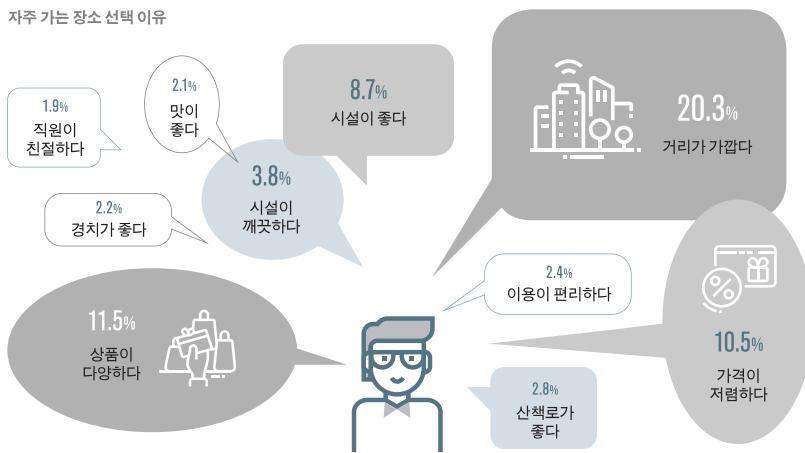
Q 세종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가는 장소는?

(중복 응답)

자주 가는 장소



자주 가는 장소 선택 이유



A 장보기, 쇼핑을 위한 대형마트 또는 시장을 자주 갑

세종시 내에서 세종시민이 자주 가는 장소로 총 269곳이 언급되었으며, 이 중에서 '세종호수공원(7.9%)'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는 '이마트 세종점(6.7%)', 'CGV 세종(6.3%)', '코스트코 세종점(5.5%)', '국립세종도서관(5.2%)' 순으로 나타났다. 자주 가는 장소로 많이 언급된 10곳 중에서 7곳이 대형마트 또는 시장으로 나타남에 따라 세종시민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이용하는 장소는 장보기 또는 쇼핑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 가는 이유로는 '거리가 가깝다(20.3%)'가 가장 높게 나타나, 물리적 거리가 이용빈도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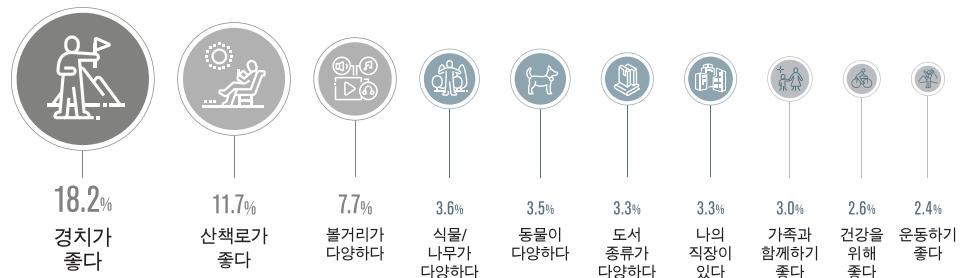
Q 일상생활에서 세종시민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는?

(중복 응답)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

- ① 베어트리파크
- ② 세종어린이천문대
- ③ 고복저수지
- ④ 세종전통시장
- ⑤ 밀마루전망대
- ⑥ 정부세종청사
- ⑦ 국립세종도서관
- ⑧ 세종호수공원
- ⑨ 금강수변공원
- ⑩ 금강수목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이유



A 세종호수공원, 베어트리파크 등 공원 및 자연환경이 중요하고 의미 있음

세종시민에게 일상생활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로는 총 122곳이 언급되었으며, 이 중 ‘세종호수공원(25.2%)’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 상위 10곳 중에 세종호수공원과 함께 ‘베어트리파크(7.7%)’, ‘고복저수지(7.5%)’, ‘금강수목원(7.1%)’, ‘금강수변공원(5.4%)’ 등 자연환경이 52.9%를 차지하여, 세종시민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 중 절반 이상이 자연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요하거나 의미 있는 이유로 ‘경치가 좋다(16.2%)’, ‘산책로가 좋다(11.7%)’, ‘볼거리가 다양하다(7.7%)’, ‘식물/나무가 다양하다(3.6%)’ 등 대부분이 자연환경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Q 자주 가는 장소, 중요하고 의미 있는 장소가 건축·도시 분야에 주는 의미는?



A 자주 이용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장소 만들기-연결하기'에 초점

건축·도시 환경은 자주 이용하는지,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에 따라 크게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①자주 이용하지만 이용자에게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지 못하는 환경, ②자주 이용하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환경, ③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자주 이용하지 못하는 환경, ④자주 이용하지도 않고 중요한 의미도 없는 환경이다. 이 중 ④의 환경은 지역 주민들에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러한 환경을 조성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건축·도시 분야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②의 환경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세종시의 경우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공간들(마트, 도서관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을 각 생활권 계획에서 지향할 필요가 있다.

건축과 도시공간

—

Vol. 38

Summer 2020

건축 도시 동향

Trend Report

2

공공건축물의 목재 사용 촉진을 위해 뒷받침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본의 사례에서 시사점을 찾아본다. 시카고시의 대규모 빈민가·저개발 지역 도시재생사업 추진 배경과 시민들,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살펴봄으로써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조건을 다시 생각해본다. 삶터 재생, 지역 연대에 중점을 두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프랑스 세마에스트(SEMAEST)의 사례는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던진다. 국내동향으로는 화재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비극이 계속되는 가운데 건축물 화재안전을 위한 정책 방향을 살펴보고, 올해 진행될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쿠르드 엔드스트리 공사 후 모습



유럽 건축양식을 복제해 조성한 중국의 텁스탸오



서울시 어의도공원



해외

일본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과
시사점
050

시카고의 대규모
빈민가·저개발 지역
재생사업 발표와
추진 방향
055

파리 세마에스트의
삶터 재생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059

국내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
064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시작: 국제설계공모 추진
068

일본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과 시사점 |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목조건축물이 11배 이상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일본의 동향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공공건축물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게 된 배경과 제도적 장치,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고 우리나라에 도입할 수 있는 점을 발견해본다.

시카고의 대규모 빈민가·저개발 지역 재생사업 발표와 추진 방향 | 시카고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종,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저개발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카고시는 민간 투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파리 세마에스트의 삶터 재생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 도시 상가의 재생은 삶터를 되살리는 일로 공간의 부활과 더불어 전문적인 상업 전략과 전술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마에스트의 사업들은 자율성과 소자본, 혹은 수익성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적극적 개입으로 도시 소생의 큰 그림을 우선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 |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재난으로 화재가 꼽힌다. 그렇다면 화재안전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어떤 장치로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있을까. 화재 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과 「건축물관리법」의 시행 내용, 앞으로 조성되어야 할 여건 등에 대해 논의해본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시작: 국제설계공모 추진 | 도시건축박물관의 논의가 시작된 2007년으로부터 13년 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필요성, 건립 방향, 국외사례, 공간 구성, 전시 콘텐츠, 아카이빙 등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이슈화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다.

들어가며

최근 ‘친환경’, ‘경제성’ 등의 관점에서 목조건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예컨대 산림청에서는 세계적 고층 목조건축 증가와 국내 목조건축 시장 확산 추세에 발맞춰 ‘목조건축서비스 자문단’을 2020년 4월 1일 발족하였다. 그리고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목조건축의 안정성이 확보된 만큼 기후변화 대응에 도움이 되고 미관상으로 아름다움이 뛰어난 목조건축 시대를 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단기 규제개선 과제의 하나로 목조건축물의 규모 제한 완화와 목조건축의 활성화 유도를 언급하였다.* 단기 규제개선 과제는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한 것인 만큼 국민 경제활동이나 실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그 내용은 하나하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해 일본에서는 2020년 3월 국토교통성과 농림수산성이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현황 등을 정리해 공개하였다. 이에 따르면 2018년 일본 정부가 정비한 저층 건축물의 목조화율이 90.6%를 기록하였다. 이는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목재 이용촉진법’) 시행 이후 최고 수준이다.

한편 실무에서는 다케나카공무점(竹中工務店)이 최신 목조·내화기술을 결집한 12층 RC+목조건축 준공에 들어갔고, 스미토모건설은 단일 목질

* 현재 목조건축물은 지붕 높이 18m, 천마 높이 15m, 연면적 3,000m² 등으로 제한되어 고층의 대규모 목조건축물을 조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제한을 둔 것은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함이었다. 그러나 고성능 목조자재 개발 등으로 구조·화재 등에 대한 안전 확보가 가능해지고, 세계적으로 목재를 초고층 건축재료 이용해 녹색건축에 박차를 가하는 등 오늘날의 현실을 생각하면, 목조건축물 높이 제한에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2020년 7월쯤 시행규칙을 개정해 목조건축물의 규모 제한을 완화하고 목조건축의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일본의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 촉진과 시사점

권용수
건국대학교
인문사회계열 조교수

부재로 중규모 목조건물을 실현하는 신공법 설계법 확립을 발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목조건축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실을 생각하면, 이러한 일본의 동향은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 글에서는 일본의 경우 어떠한 배경에서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이 이루어졌는지,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을 독려하는 제도적 장치가 있는지, 있다면 그 내용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나아가 최근 일본 실무에서의 목조건축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한다.

일본의 공공건축물 등 목재 이용 촉진 움직임 목재 이용 촉진 배경

일본의 삼림은 인구 증가와 산업 발전의 영향으로 황폐해진 적도 있었다. 그러나 전후 일본 정부의 삼림 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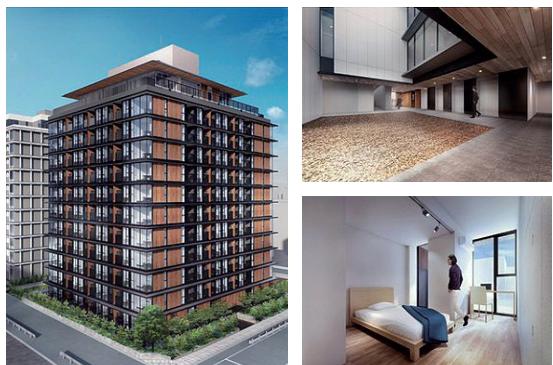
성 노력으로 차츰 삼림자원 축적량이 증가하였고, 이를 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맞이하였다. 그때부터 일본에서는 목재자급률을 높이지 않으면 목재 가격이 하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삼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토 보전이나 수원의 함양과 지구온난화 방지 등 삼림의 다면적 기능 저하가 우려되었다. 이에 목재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삼림자원의 선순환과 임업 재생을 도모하는 것이 급선무가 되었다.

일본 정부는 목재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목재 수요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건축물에 국산 목재 이용을 촉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목조화율이 낮아 잠재적인 수요를 기대할 수 있는 공공건축물에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가 솔선하여 목재를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목재 이용촉진 법을 제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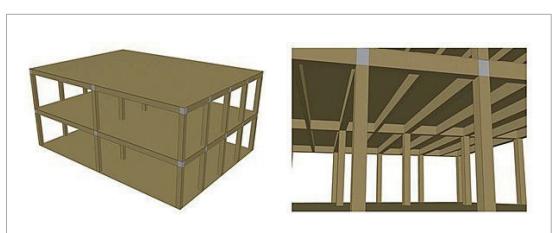
목재 이용의 의의

최근 건축 분야에서 ESG*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아직은 ESG가 건축이나 부동산보다 기업의 주요 이슈로 주목받고 있지만, 세계 시장에서는 2020년 이후 적용되는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 등을 이유로 2020년을 부동산 시장의 ESG 티평포인트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2019년에 ‘2025년부터 중대형 민간건축물을 대상으로 녹색건축물을 의무화’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개정이 이루어졌고, 서울시가 2020년에 ‘서울시 녹색건축물 2차 조성계획(2021~2025)’ 수립을 예정하는 등 건축이나 부동산 분야의 ESG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목재 이용은 바로 ESG의 관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목재는 철이나 알루미늄 같은 재료에



다케나카공무점의 최신 목조·내화기술을 결집한 12층 RC+목조건축
출처: <https://built.itmedia.co.jp/bt/articles/2003/13/news030.html>



스미토모건설 신공법 이미지
출처: <https://built.itmedia.co.jp/bt/articles/1808/21/news038.html>

*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첫 글자를 딴 용어이다.

비해 제조 시 탄소 배출량이 매우 적은 에너지 절약 재료이며, 지구온난화 방지 등 환경적 측면에 이바지하는 바가 크다.* 목조주택은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약 4배에 달하는 탄소를 저장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제2의 삼림’으로 불리기도 한다.

오늘날에는 목재의 안정성 문제가 해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 목재를 이용하면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이점이 많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목재 이용은 생활환경 개선이나 어린이 정서 등에 긍정적으로 기능하며, 목재를 활발히 이용함으로써 꽃가루가 적은 묘목 등으로 삼림자원을 교체하면 국민 건강 유지·향상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 또 목재를 많이 이용하면 농촌지역 및 임산업 고용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기에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도 의의를 지닌다. 여러 건축 사례를 토대로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보면 목조건축물이 RC조 건축물에 견줘 사무소·학교·체육관 등의 건물에서 높은 경제 파급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2015년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SDGs)에서 제시한 복수의 목표 달성을 위해 새로운 목재 수요 창출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한 정책

일본 목재 이용촉진법의 목적은 목재의 적절한 공급

과 이용 확보를 통해 임업의 지속적이며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삼림의 적정한 정비 및 목재자급률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법이 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의 책무

국가는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책정·시행함과 함께 솔선하여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에 힘써야 한다. 또 목조건축물에 관한 건축기준법 등의 규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법적 조치 등을 마련하는 동시에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국민 이해를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국가의 책무를 분명히 규정한 것은 공공건축물 등의 목재 이용 촉진을 도모하는 데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정비시설의 목조화나 내장 등의 목질화에 힘썼고, 지역의 목재 이용 촉진을 위해 목조공공건축물 정비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적 조언, 목조공공건축물 우수 사례 공개 등을 하였다. 아울러 목재제품의 안정적·효율적인 공급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건축기준법을 비롯해 목조계획·설계기준 등 각종 기술기준을 정비하였다.**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지방공공단체에 대해서는 국가 정책에 따라 각 지역

2018년에 완성한 목조화·내장 등 목질화 시설 사례



구조재에 CLT 패널을 활용
출처: 国土交通省 (2020)



구조재에 목재를 활용



홀 내장에 목재를 활용



홀 내장에 목재를 활용

의 실정에 맞는 공공건축물 목재 이용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①공공건축물 목재 이용에 관한 정보를 공공건축물 정비에 종사하는 자나 지역주민에게 제공 ②공공건축물 정비에 종사하는 관계자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목재 이용의 의의 교육·홍보 ③목재 이용 기술 보급 등 국가가 하는 대책의 성과를 지역 수준에서 실천하는 형태로 기획·입안하고, 이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한편 목재 이용촉진법에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①학교나 노인시설 등 공공건축물을 정비하는 사업자나 임업종사자, 목재제조업자 등 목재 생산·유통·가공에 종사하는 사업자에 대한 목재 이용 촉진 노력 의무와 ②국민의 목재 이용 촉진 노력 의무도 규정하였다.

기본방침 책정

농림수산대신과 국토교통대신은 국가가 정비하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목표 등을 담은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해야 한다. 기본방침에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촉진의 의의, 목표, 범위 등을 비롯한 기본적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기본방침에서는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목표로서 비교적 법적 제한이 적은 저층 공공건축물은 모두 목조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저층·고층에 관계없이 국민의 눈에 띌 기회가 많은 부분은 내장 등의 목질화를 추진한다고 적고 있다. 나아가 공공건축물 정비에 쓰이는 목재의 적절한 공급 확보에 관해 ①공공건축물 정비에 적합한 목재 공급 체제 정비 ②간벌재나 합법성이 증명된 목재 등의 삼림 정비·보전에 배려한 목재 공급 ③강도나 내화성, 건강피해방지성능 향상 등 목재에 관한 기술 개발 등을 요청하였다.

목재 이용촉진법에서는 도도부현 방침이나 시

정총 방침의 책정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모든 도도부현에서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였고, 시정총 역시 2015년 기준 90% 정도가 목재 이용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였다.

공공건축물 건축에 이용하는 목재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한 체제 정비

목재제조업자는 ‘공공건축물에 적합한 목재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정비 등의 계획’(이하 ‘목재제조고도화계획’)을 작성해 농림수산대신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목재제조고도화계획 승인을 받으면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조성법이나 삼림법의 특례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공공건축물 정비에 목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삼림의 적정한 정비와 보전을 배려하면서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공공건축물 정비용으로 적합한 목재(길이와 크기 등의 요건을 갖춘 목재)를 공급할 수 있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고려해 목재 이용촉진법에서는 목재제조업자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다. 목재제조업자가 목재제조고도화계획에 따라 기계설비 등을 도입하면, 그 도입 등에 필요한 임업·목재산업개선자금 상환 기한을 10년 이내에서 12년 이내로 연장받는 등의 혜택이 있다. 한편 공공건축물 정비에 공급하는 목

* 일본은 목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에 따른 악영향을 경험한 적이 있다. 목재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은 삼림자원의 정비나 선순환을 둔화 시킴으로써 국토 보전이나 수원의 험양, 지구온난화 방지 등 삼림의 공익적 기능 등을 저해하였다.

** 예컨대 2014년에는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3층 학교 등이나 대규모 건축물을 목조로 짓기 쉽게 하였다. 나아가 2014년 11월에는 새로운 목질 재료인 CLT(직교집성판) 보급을 목표로 한 로드맵을 발표하고, 2016년 3·4월에는 CLT에 관한 건축기준법에 따른 고시(강도, 일반적인 설계법 등)를 공포·시행하였다. 이로써 일반적인 CLT 구법에 의한 건축물을 대해서는 국토교통대신의 개별 인정이 필요 없게 되었다.

재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자는 시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국유 시험연구시설을 사용할 수도 있다.

공공건축물의 목재 이용 이외의 목재 이용 촉진에 관한 정책

목재 이용촉진법은 공공건축물에서의 목재 이용 촉진만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목재 자체가 지닌 장점(단열성, 습도 조절, 자외선 흡수 등)이나 목재 이용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것, 국민의 목조주택 선호도 등을 고려해 목재를 이용한 주택 건축 촉진도 요청하였다. 이를 위해 법에서는 목조주택을 건축하는 자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 목조주택에 관한 전시회 개최, 목조주택 수요 개척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대책 마련을 규정하였다. 나아가 법에서는 목재를 이용한 주택 건축 촉진 외에 공작물에의 목재 이용 및 목질 바이오매스 제품 이용 효율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마련 등도 요청하고 있다.

마치며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로 지난 20년간 목조건축물이 11배 이상 증가하는 등 목조건축에 관한 관심이 많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산림청의 자료를 보면, 연간 전체 건축의 연면적 5%를 목재로 건축할 경우 목재 사용량은 약 85만m³가 증가한다. 그러면 약 13조 3,041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효과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산화탄소를 약 223만 4,000CO₂톤 감축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23만 4,000CO₂톤은 휘발유 10억 l를 연소하였을 때의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맞먹고, 우리나라 휘발유 자동차 83만 7,000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같다. 이를 떠나서도 1970년대부터 심고 가꾸어 온 나무들이 충분히 성장해

목재로 활용 가능한 시기에 접어든 우리의 현실을 생각하면, 목재 이용 촉진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시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충분한 논의를 토대로 공공건축물의 목조화·목질화를 추진하고, 새로운 국산 목재 수요를 창출해 나가는 것은 삼립자원의 선순환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설계나 시공을 담당할 인재를 육성하고, 새로운 기술을 끊임없이 연구·개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나아가 국산 목재 이용 촉진의 의의나 매력을 널리 알림으로써 목조건축 시장을 더욱 확대하고, 그에 맞춰 목재 생산·유통 체계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국토교통부. (2020).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국토교통 단기 규제개선 추진과제 마련. 4월 29일 보도자료.
- 2 산림청. (2020). 목조건축 신축 시 전문가 자문으로 튼튼하고 아름답게. 4월 2일 보도자료.
- 3 農林水産大臣, 国土交通大臣. (2020). 平成30年度公共建築物における木材の利用の促進に向けた措置の実施状況の取りまとめ. <https://www.mlit.go.jp/report/press/content/001333373.pdf>(검색일: 2020.5.20.)
- 4 國土交通省. (2020). 国の公共建築物の木造化率、9割超に!! . 3월 18일 보도자료.
- 5 社団法人愛媛県建築士事務所協会. (2003). 木材利用効果PR推進事業委託業務. https://www.pref.ehime.jp/h35700/1461/3_rinsan/documents/bcost_1.pdf(검색일: 2020.5.20.)
- 6 全国知事会国産木材活用プロジェクトチーム. (2019). 国産木材の需要拡大に向けた各都道府県の取組事例集(案). <http://www.nga.gr.jp/ikkrwebBrowse/material/files/group/2/20190703-06shiryou.pdf>(검색일: 2020.5.20.)
- 7 全国知事会. (2019). 国産木材の需要拡大に向けた提言. <http://www.nga.gr.jp/ikkrwebBrowse/material/files/group/2/20190806-shiryou1.pdf>(검색일: 2020.5.20.)
- 8 農林水産省. (2016). 公共建築物等木材利用促進法のあらまし. <https://www.rinya.maff.go.jp/jiyou/koukyou/attach/pdf/index-35.pdf>(검색일: 2020.5.20.)
- 9 林野庁 홈페이지. <https://www.rinya.maff.go.jp/jiyou/koukyou/>(검색일: 2020.5.20.).

**노예제도 해방 이후에도
지속된 인종-계층간 빈부 격차**

시카고의 대규모 빈민가·저개발 지역 재생사업 발표와 추진 방향

강기향

프리랜서 디자이너,
저널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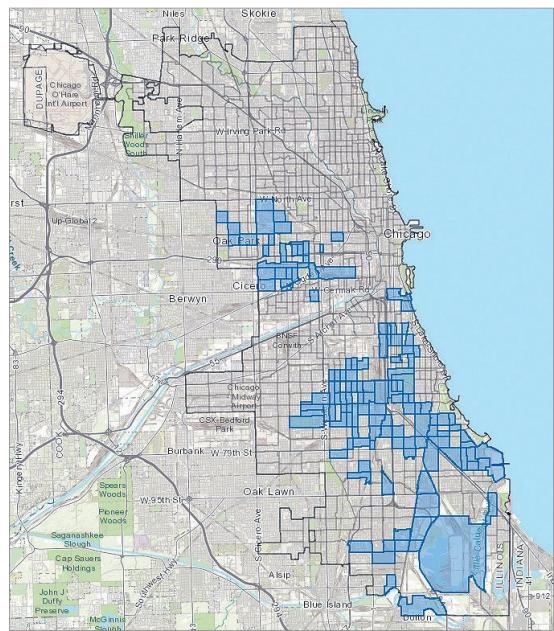
일리노이주 시카고시는 미국 중부의 넓은 평지에 위치하면서 비옥한 땅을 가지고 교통의 요충지로 역할을 해 온, 미국의 대표적인 대도시다. 하지만 이러한 훌륭한 환경 속에서도 미국 대도시들 중 가장 선명하게 빈민가, 저개발 지역이 구분되어 있어 인종 간 갈등이 심각한 도시로 알려져 있다. 역사적으로 미국 시카고시가 위치한 일리노이는 1900년대 흑인 노예제도를 시행할 당시 법적으로 흑인 인구가 거주할 수 있었던 지역을 남쪽으로 구분했다. 이후 흑인 노예제도가 해방되고 나서도 자연스럽게 백인들은 기존 거주지인 북쪽에 거주하고 흑인들은 남쪽에 살게 되었다. 이러한 지역적 차별이 현대 사회에 들어서서도 계속 잔존하게 되며, 시카고 남부 지역은 미국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사회라 불리는 오명을 가지게 되었다. 저소득층 대다수가 거주하는 시카고 남부 지역은 세금 기여도가 낮은 만큼 지역 정치인들로부터 꾸준히 정책적으로 소외 받아 왔으며, 이러한 점은 문화예술, 공공시설, 안전 기관 등이 북쪽 지역 대비 현저히 부족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에 폭력, 마약, 살인, 강도, 총기 사고 등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문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빈민가의 이미지로 각인되었다. 2020년 현재까지도 인종, 계층 간의 문제가 도시 남, 북을 기준으로 이어지고 있으나, 2019년 시카고 최초의 흑인 여성 시장 로리 라이트풋(Lori Lightfoot)이 당선된 이후 적극적으로 대규모 재생 사업 구상과 추진을 진행하고 있다.

빈민가-저개발 지역 재생 사업 방안

시카고시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인종, 경제적으로 분리되어 있던 저개발 지역을 대대적으로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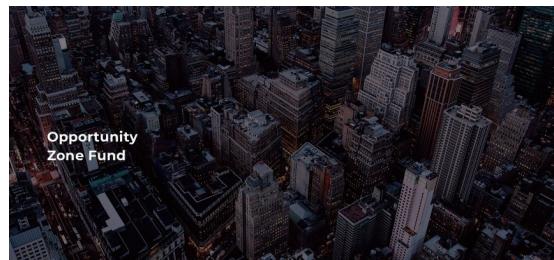
전시키는 초대형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20년 1월 27일, 해당 소식을 발표하고 시카고 저개발 지역 남부와 서부에 ‘기회의 땅(Opportunity Zone)’ 135개 구역을 지정했다. 단순히 동네, 구역별로 나누어 점진적으로 진행할 경우 오히려 해당 지역만 관광지로 인기를 얻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생겨날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카고 남쪽 지역의 거대한 135개 구역의 빈민가, 슬럼화된 지역 전반을 재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 내 대형 민간 투자 기업, 투자자들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오하이오주 신시내티에 본사를 둔 5/3 은행(Fifth Third Bank), 스타벅스, BMO 해리스 은행 등에게 수백만 달러를 지원받았으며 민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한정된 도시 예산에 더해 외부 지원으로 수준 높은 도시재생이 가능하다. 투자자들 역시 차후 낙후되어 있던 시카고 남쪽이 재개발됨으로써 생겨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는 모습이다. 미국 연방정부는 빈곤 지역에 대한 민간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세금 공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 기업들은 세금 혜택과 사회적 환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이미지 상승 효과를 얻으며 윈-윈(win-win)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민간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한 아파트 빌딩은 물론 운동장, 미술관, 문화센터 등도 조성될 예정이다.

대대적인 지역 발전에도 불구하고 생겨날 수 있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역 시민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콘퍼런스, 브리핑을 통해 융통성 있게 수정·보완해나가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저소득, 빈민 계층이 가장 걱정하는 주거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0만 달러를 투입, 현지 사업 육성 및 임대주택 재건을 적극으로 진행하



시카고시가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이어가는 ‘기회의 땅’ 135개 구역

출처: 시카고 시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dcd/supp_info/opportunity-zones.html



‘기회의 땅’ 프로젝트의 민간 투자 유치를 홍보하는 모습

출처: Opportunity Zone Fund 홈페이지. <https://sortis.com/opportunity-zone-fund>

고 있다. 나아가 대규모 도시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전문 기업 및 인력 유입을 적극적으로 도모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남쪽 지역 대형 재개발 계획으로 인해 불만이 생겨날 수 있는 북쪽 백인 밀집 지역의 시민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마찰을 최소화하고, 남쪽 지역의 개발로 인해 시카고 도시 전반이 더욱 안전하고 매력적인 지역으로

성장할 것을 적극 홍보하며 대다수 시민들의 찬성을 얻고 있다.

시카고시가 위치한 일리노이주의 주지사 J. B. 프리츠커(J. B. Pritzker)는 추후 시카고 남쪽 지역뿐만 아니라 일리노이주 전역의 저발전, 소외 지역을 대상으로 별도 1,200만 달러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것이라 밝히며 향후 대대적으로 낙후된 지역 재생 사업을 진행할 것을 밝혔다. 미국 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대규모 도시 개발 정책을 통해 지역 외 전문가들 채용함으로써 고급인력 유입을 통한 지역 전반의 해당 사업 활성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점은 고소득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시카고 북쪽 지역 시민들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만큼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또한 도시 개발 정책에 반드시 필요한 건설 인력 및 자재 유입을 통해 항공, 항만, 운송 등 다방면의 지역 일자리가 전반적으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개발되는 낙후된 지역의 저소득층 일자리 문제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다각화된 시점 유지

시카고시는 전례 없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민간 투자, 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등을 통해 남, 북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향의 사업 진행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 시카고시가 국면하고 있는 인종-계층 간의 사회 문제를 완화하고, 최초의 흑인 대통령 버락 오바마를 배출한 도시에 걸맞은 변화를 맞이함으로써 세계적인 도시로 한 발 나아가기 위해서다. 시카고 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인종 갈등 완화, 균등한 부동산 발전, 전문가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기관 유치, 저소득층 일자리

개발을 통한 향후 세수 확보 같은 이익이 예상된다. 특히 SNS, 온라인 스트리밍, 미디어, 콘퍼런스 등 다양한 소통의 창구를 통해 시민들의 고충과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 도시재생 사업을 유동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시카고시의 저개발 지역 도시재생은 현재 눈에 보이는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 외에도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높은 거주 비용을 지불하고 시카고 북쪽 지역에 거주하던 학생 및 사회인들에게 대안책이 될 것이 예상되며 기대감을 얻고 있다. 북쪽 지역에는 백인들 외에 시카고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외국인, 이민자들이 살고 있다. 대다수의 북쪽 지역 거주자들은 안전을 위해 높은 임대료, 웅자금을 지불하며 거주하고 있다. 이 중에서는 월급의 40% 이상을 월 거주비용으로 지출하는 경우도 있으며,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경제적인 부담감을 호소해왔다. 이들은 대부분 중산층으로 저소득층으로서 혜택에서는 제외되어 왔다. 향후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되면 학생, 직장인, 가족 단위 시민들에게 질 높은 거주지와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카고시는 저소득층을 위한 거주지는 따로 조성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부동산 가격 제한 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집중하는 정책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 내에서도 LH의 임대주택 등 저소득층 및 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주거공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저개발 지역의 집과 동네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부여하여, 소상공인들과 지역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사업이 주목 받으며 서울을 비롯한 지방 도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카고 시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은 동시다발적으로 저개발, 빈민 지역을 발전시키는 만큼 시민들과의 적극

적인 소통을 통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결과를 도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낙후된 지역 재개발에 쓸리는 예산으로 인해 불만이 높아지는 북쪽 지역 시민들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그들이 원하는 안전한 거주 지역, 양질의 일자리를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사회·경제적으로 구분되어 있던 지역민들의 고충을 수렴하여 도시 발전을 도모하는 만큼,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과 불편을 정책과 소통으로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인다. 특히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기 위해 수준 높은 지역 주민 거주지 확보, 개선, 확충과 시카고 기타 지역 시민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부동산 가격 컨트롤을 약속함으로써 일반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주정부가 적극 개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역시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며 특정 외국인 노동자들 밀집 지역이 빈민가로 여겨지며, 해당 지역의 치안 및 교육 수준 저하로 인해 시민들로 하여금 점점 더 꺼려지는 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지역 내에서 자란 다문화 가정 아이들 또한 계속된 빈곤과 차별 속에서 살아간다는 통계가 나오고 있음에도 한국 원주민들과의 갈등 속에서 쉽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모습은 시카고 남, 북의 오랜 기간 인종-계층간의 사회적 갈등과도 많이 닮아있다. 시카고시가 진행하는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 역시, 각계각층이 원하는 접(일자리 창출, 기업 유치, 지역 상권 활성화, 치안 개선, 적당한 가격의 거주지 제공)을 수렴하고 이에 걸맞은 대안을 제시하며 모두가 만족할 만한 방안을 찾아 나가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시카고시의 대규모 도시재생 사업을 벤치마킹 삼

아, 도시 내 각계각층 시민들이 궁극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중심으로 재개발 사업을 이어나간다면, 한 충 더 성숙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시카고 시정부 공식 홈페이지. https://www.chicago.gov/city/en/depts/dcd/supp_info/opportunity-zones.html
- 2 Opportunity Zone Fund 홈페이지. <https://sortis.com/opportunity-zone-fund>

파리 세마에스트의 쉼터 재생을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김나래

프랑스 르아브르대학교 강사,
건축역사 및 문화재학 박사

파리시는 1980년대를 지나면서 도시 내 소상공업 활동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교통망을 개선하고 도보거리를 신설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 시기부터 시작된 문제 인식은 2006년의 새 지역 도시 계획(PLU)을 통해 적극적으로 상가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발전하였다. 셈파리센(SEMPARISEINE)* 혹은 세마파(SEMAPA)** 등 파리시 준(準)공공기업***은 테마별 도시정책 모델을 적용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파리 12구를 중심으로 비교적 낙후된 파리 동쪽 지역의 상업 거리를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목적으로 설립된 세마에스트(SEMAEST)****이다. 초기에는 베시(Bercy), 뢰이(Reuilly), 샬롱(Chalon) 등 12구 거리 재생이 중심이었으나 서서히 파리 시내 동쪽의 다른 구까지 사업 범위가 넓어졌다.

다른 도시 재개발사업과는 달리 세마에스트는 사라지거나 활동이 쇠퇴한 지역에서 다양한 상권을 발전시키고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반적으로 세마에스트와 같은 프랑스식 도시 재생사업 모델은 거버넌스위원회 설립 후 상업·주거·교통 등 분야마다 20~25개 항목으로 구성된 단기 예측 진단 작업부터 시작한다. 이를 통해 거주자와 함께하는 상가를 만들기 위한 전략을 짜고 상업

* 파리 15구를 재개발한 SEMEQ 15와 파리 1구 포럼 데 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SEM Paris-centre 회사가 결합한 파리시 공공기업이다. 레알 재정비 사업 등 파리 시내 중요 리노베이션 혹은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였다.

** Société d'étude, de maîtrise d'ouvrage et d'aménagement de la ville de Paris. 파리시가 66%, 파리 대파르트망이 26% 그리고 일 드 프랑스 수도권 지역이 8% 참여하여 공동사업을 벌이는 회사이다. 13구에 속한 파리 좌안 도시개발 계획을 진행하였는데, 19세기 오스만 도시계획 이후 최대의 파리 재정비 사업이었다.

*** 파리시는 20개의 준관영 기업을 통해 도시 재개발, 부동산, 공공 서비스 사업에 주체로 참여하고 있다. 이들 기업 중 17개는 파리 코뮌, 1개는 파리 대파르트망, 2개는 프랑스 정부가 소유하고 있다.

**** Société d'économie mixte d'aménagement de l'Est parisien

활동 시작 단계를 끝기 위해 마케팅 계획을 세운다. 다른 한편으로는 전방위로 프로그램을 이끌 매니저를 선정하고 재활성화 활동을 위한 전문 활동원을 구성한다(Marcon 2018, p.15).

프로젝트를 진행한 다음 완성 단계 이후에는 각 지역 중심 활동을 감시하거나 비교·평가할 만한 센터(observatoire)를 설립하기도 한다. 세마에스트의 경우 도시 재정비, 도심 재활성화, 상업공간의 부동산, 파트너십과 노하우 전수 및 교육 부서로 활동 영역을 나누어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세마에스트의 주요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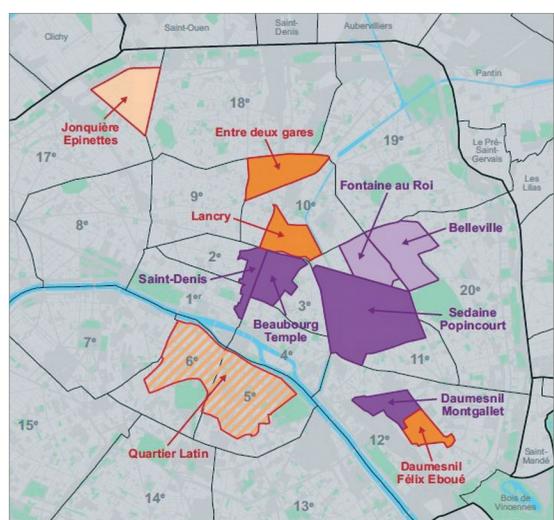
삶터 재생, 지역 연대에 초점을 둔 동네 상점 살리기

동네 상점들을 되살리는 ‘비탈카티에(Vital Quartier)’는 세마에스트의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1 단계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6개 지구가 선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1년까지는 5개의 새 지구가 추가되었다. 파리시는 비탈카티에 1단계를 위해 5,750만 유로(약 787억 7,700만 원)를, 2단계에는 3,000만 유로(약 411억 원)를 세마에스트에 선불투자하였다(APUR & SEMAEST 2013, p.3). 그 결과 해당 지역들의 소상공인 상점들은 낡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업활동에 잘 정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빈 상점 수를 줄여 상업 공동화(désertification) 현상을 막고, 단일 업종에서 벗어나 다양한 균형시설과 상점들이 있는 동네 살리기에 중점을 두었다. 둇지 내몰림을 막기 위해 일종의 ‘보호 상가’를 지정하는데, 이후에는 해당 거리 1층에 있는 소매상 혹은 수공업 상점은 다른 업종으로 전환할 수 없다.

비탈카티에의 연장선상에서 파리시는 새로운 ‘파리 상업 계약(Contrat Paris’Commerces)’을 세

마에스트를 통해서 추진하였다. 2017년 3월에 시작한 이 계획은 단일 업종이나 오랫동안 빈 곳으로 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리를 대상으로 생드니(Saint-Denis, 1-2구), 풍텐 오 뤄(Fontaine-au-Roi, 11구) 등의 12개 우선 지역을 선정하였다. 파리시는 세마에스트에 선매권을 주고, 세마에스트는 순차적으로 상점들을 매입해 사업장을 수리 및 개축하는 방식으로 재정비한다.

이곳들을 25년 장기 계약으로 소매상들에게 다시 저렴하게 임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되파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 소유주들의 경우에는 소상인들에게 임대하도록 세마에스트가 중개해 약정을 맺음으로써 소유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자영업자들의 자금 한계를 극복하도록 돋는다. 개인보다는 지역공동체나 공공의 가치에 우선권을 두는 지역연대를 강조하는 것이다. 앞으로 200곳 이상을 자영업자들에게 임대할 예정으로, 이미 81곳이 이 계약을 통해 정착하였다. 이



파리시 소상공업 재생 사업 선정지

출처: La revitalisation des commerces de proximité par la Ville de Paris, APUR et SEMAEST, 2013



세마에스트의 상가 재정비 전과 후 모습
출처: APUR & SEMAEST(2013, p.13)

중에서 23곳은 세마에스트와 직접 계약을 하였으며, 58곳은 개인 소유주가 소상공인에게 임대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종기에르 에피네트(Jonquière-Epinettes) 지역은 50%, 벨빌(Belleville) 지역은 59.4%의 빈 상점 감소효과를 누렸다. 단일 업종 지역에서는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었는데, 예를 들어 파리 10구의 랑크리(Lancry) 지역은 직물도매 상들의 수가 53.8%에서 점점 낮아지는 대신 식품 판매상이 늘어났다.*

한편 위의 예와는 달리 세마에스트의 임무 중 하나는 새로 형성된 거리의 창업을 돋는 것이다. 옛 상가가 아니라 도시 재정비 지역으로 상권이 개발되는 곳도 역시 위와 같은 시스템을 적용해 발전시키는 일을 한다. 또한 주거를 비롯해 우체국·어린이집·체육관·공원 등 소규모 균린생활시설이 잘 안착

할 수 있도록 돋고, 건물들 1층에는 상업 시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상권에 대한 사전 점검부터 창업 지원과 유지·관리로 거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높이도록 노력하였다.

지역자원과 결합한 문화산업 지원

프랑스는 도시 문화재를 활용해 옛 거리를 보존하고 상업적으로 활성화하는 데 많은 경험이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세마에스트의 수공업 및 창작활동 지원사업은 문화재 건축과 문화산업의 만남이라 할 수 있다. 1990년과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비아 뒤크 데 자르(Viaduc des Arts)는 세마에스트가 참여한 유명한 프로젝트이다. 대규모 리노베이션 공사 후 18년간 예술 장인들에게 아치형 문화유적 건물을 장기 임대하였으며, 임대 후에는 꾸준히 대중에게 장인들의 활동을 노출하였다. 예를 들어 유럽 예술 직업인의 날 행사, 디데이 등 각종 이벤트와 전시회 등으로 예술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그들의 작품을 상업화하는 플랫폼을 마련하였다. 현재 63개의 아치형 건물에 52명의 예술 장인들이 입점하였으며, 그중 11명은 살아 있는 기술장인으로 인정을 받았다.

쿠르 드 앵뒤스트리(Cour de l'Industrie)는 문화재 등록 건물로 6년간 문화재 수리기준에 맞춰 대대적으로 보수하였다. 현재는 가구, 악기제조, 조각, 세공, 도예 등 각 분야 50여 명의 예술 장인이 이곳에 모여 일종의 예술 아틀리에 겸 문화상품 부티크로 자리 잡았다.

아브뉘 뒤 멘(Avenue du Maine)은 1900년 만국박람회 때 건축자재로 지어진 건축물로 제1차 세계대전 동안 러시아 화가이자 조각가 마리 바실

* www.semaest.fr



쿠르 드 앵위스트리 공사 전·후 모습

출처: La cour de l'industrie inauguration(2017)

레프(Marie Vassilieff)를 중심으로 당대 예술가들의 모임이 있었던 곳이다. 개축 공사 후 현역 예술가들이 활동하는 문화공간으로 보존하고 있다.

한편 파리 5·6구의 소르본 대학가 라틴지구에서는 지역의 역사성을 고려해 작은 서점들을 보존하는 활동을 벌였다. 덕분에 사라지는 서점의 수는 줄었지만, 여전히 동네서점들은 생존의 갈림길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이에 파리시는 2015년 세마에스트를 통해 190만 유로(약 26억 원)를 추가 지원해 이 지역의 문화산업을 지원하였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환경 활용 방안 제시

세마에스트는 사업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 환경 구축과 적용,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2015년에 시작한 ‘코스토(Programme CoSto)’는 파리의 소상공인들을 인터넷 네트워크로 연결해 서로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2015년에서 2018년 사이 350개 이상의 자영업자에게 인터넷을 활용한 마케팅 방법과 각종 분쟁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1,400명의 상인과 장인들을 중심으로 네트워크를 구성하였으며, 웹사이트^{*}를 만들어 유용한 정보와 소식을 나누고 있다.

이 사이트를 통해 창업부터 회계와 법 관련 조언, 정부나 지자체 지원금, 직원 고용, 상점 사이트를 만드는 법, 결제, 배송을 비롯해 인터넷 쇼핑몰을 구축하는 방법과 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대책으로 별도 페이지를 이용해 위생, 지자체 지원책, 소규모 상점의 생존전략 등을 안내하고 있으며, 이 사이트를 기반으로 회계관리를 주제로 한 인터넷 콘퍼런스(webinaire)를 조직해 운영해 왔다.

최근 코스토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상점에서 QR 코드로 결제하는 파리 코메스 상품권을 내놓았다. 한국의 제로페이와 같은 방법으로 핸드폰에 상품권 QR 코드를 내려받거나 메일로 pdf 파일 상품권을 전달한다. ‘테스터 드 코메르스(Testeur de commerce)’는 창업 테스트 프로그램으로, 이 플랫폼을 통해 몇 주 혹은 몇 달 동안 건물을 장기 임대해 평소 구상하였던 사업을 실험적으로 운영해 볼 수 있다. 현재 파리 10구와 11구 두 곳에 사업테스트 공간을 마련해 두었으며, 인터넷으로 ‘인적사항’, ‘사업 활동영역’, ‘간략한 사업계획 소개’ 등 관련 서

* www.costo.paris

식을 보내면 원하는 기간 중 저렴한 임대료로 바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

세마에스트의 활동은 점점 사업 범위를 넓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일드프랑스 지역과 각자체에 전문가 시스템 및 담당자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장티(Gentilly)시에는 다양한 상점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그랑파리 익스프레스 계획에 포함되는 역 주변은 근린시설과 소매상들을 보전시키는 작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

시사점

파리시의 세마에스트 사례는 둥지 내몰림, 즉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이전 단계인, 지역 내 작은 상점들의 거리를 살리는 '삶터 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스토리텔링이 있는 지역문화를 살리고, 역사를 되짚어 각기 다른 특색을 찾아 지역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가시화되면 지역경제가 살아나는데, 이 시점부터 '둥지에서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가 장기적으로 보호한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지역연대와 네트워킹으로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이 공공사업의 의의라 할 수 있다.

18년 혹은 25년이라는 장기 임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고, 소자본 창업자들에게는 새로운 금융지원 창구도 열어둔 셈이다. 신축을 통해 새것을 만들기보다는 개축으로 되살리는 것이 어느 면에서는 훨씬 어렵고 조심스럽다. 상권을 살리는 것도 쉽지 않지만 유지하는 것은 더 힘들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세마에스트가 면 안목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을 이어 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도시 상가의 재생은 삶터를 되살리는 일로 공간의 부활과 더불어 전문적인 상업 전략과 전술이

뒤따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세마에스트의 사업들은 자율성과 소자본, 혹은 수익성보다는 충분한 시간과 적극적 개입으로 도시 소생의 큰 그림을 우선 시한 예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1 Marcon, A. (2018). *Mission prospective sur la revitalisation commerciale des villes petites et moyennes*.
- 2 Muller, S. (2015). Patrimoine et revitalisation des centres anciens : le modèle français confronté aux villes du sud. *Techniques Financières et Développement*. Epargne sans frontière. 21-34.
- 3 La cour de l'industrie inauguration. (2017). dossier de presse
- 4 APUR & SEMAEST. (2013). La revitalisation des commerces de proximité par la Ville de Paris. 96.
- 5 세마에스트 홈페이지. semaest.fr
- 6 코스토 프로그램 홈페이지. www.costo.paris
- 7 Servir le Public. CoSto - connected stores Paris. www.servilepublic.fr/trophes/costo-connected-stores-paris/
- 8 파리 10구 홈페이지. La SEMAEST agit pour la diversité des commerces du 10e. www.mairie10.paris.fr/ma-mairie/commerce-artisanat-vitalite-economique-emploi/la-semaest-agit-pour-la-diversite-des-commerces-du-10e-335

건축물이 화재안전에 미치는 영향

‘화재’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재난이다. 과거 대연각호텔 화재부터 최근 이천 물류창고 화재까지 대형 화재 사고는 여러 차례 있었다. 그렇다면 ‘화재안전’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떠올릴까? 어린아이들이라면 아마도 빨간 소방차와 용감하게 불을 끄는 소방관이 생각날 것이다. 집 안 어딘가에 있는 소화기와 복도에서 보았던 소화전, 조금 더 나아가서는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소방차와 소방관, 소화기, 소화전 그리고 스프링클러 등이 화재안전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런데 건축물, 구체적으로는 ‘건축물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화재안전을 위해 중요하다고 말하면 적잖은 사람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소화기·소화전·스프링클러 등은 그 자체로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지만 건축물, 좀 더 상세하게 말해서 건축물을 구성하는 여러 요소(계단과 벽, 기둥과 지붕 등)는 화재안전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건축물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는 화재 시 인명의 피해를 막기 위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항이다.

건축법령과 소방법령의 역할

화재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대피이다. 화재 초기 스프링클러의 작동과 소화기·소화전 등을 활용한 소방 활동도 중요하지만,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설령 스프링클러와 소화전이 없거나 미비한 건축물일지라도 사람들의 대피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히 베틸 수 있는 튼튼한 구조와 일정 시간 동안 안전한 피난로를 유지해야 한다. 이를 고려하였을 때 건축물이 가져야 하는 성능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째, 건축물은 화재 발생에도 쉽게 무너지지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과 향후 정책 방향

홍성준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과장

않는 내화 성능을 가져야 한다.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는 내화 성능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여도 일정 시간 동안 버틸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둘째, 건축물은 안전한 피난 동선을 확보하여야 한다. 「건축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사람들의 주된 피난 통로인 직통 계단을 2곳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에 따라 계단을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으로 구분하여 연기 침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화재 시 건축물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가연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화재 시 일정 시간 동안 마감재 연소로 인한 유독가스와 연기 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특정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마감재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이다.

반면 「소방법령」은 반영구적인 시설이 아닌 소방 활동이나 피난을 지원하는 설비에 대해 주로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와 같은 소방 설비 등이 화재안전에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상기 「건축법」의 규정을 지키지 않은 건축물은 제아무리 막강한 소방 설비를 갖추더라도 화재로부터 인명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개선 방향

건축물이 화재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큰 만큼 「건축법」은 최초 제정 당시부터 화재안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건축법」의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

먼저 2010년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로 고층건축물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되었다(2011). 2015년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를 통해 건축

건축법[1962년 1월 제정]

제23조(특수건축물 등에 있어서의 피난 및 소화에 관한 기술적 기준) 학교, 병원, 극장, 영화관, 연예장, 관람장, 침회장, 백화점, 여관, 공동주택 또는 기숙사의 용에 공하는 특수건축물이나 연면적이 1,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복도, 계단, 출입구 기타의 피난시설과 소화전, 저수조 기타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상 필요한 통로의 기준은 각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최초 제정 당시 규정된 화재안전 관련 내용

물 외벽의 가연성 단열재가 화재를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고, 6층 또는 22m 이상 건축물의 외벽 마감재와 단열재에 준불연 이상의 성능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또 2017년 12월과 2018년 1월의 제천·밀양 화재로 인해 범정부 TF가 꾸려졌고, 피난약자가 이용하는 건축물과 3층 또는 9m 이상의 모든 건축물은 난연성능 이상의 외벽 마감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화재안전기준이 대폭 강화되기도 하였다. 창고와 관련하여서는 2008년 이천 냉동창고 화재 이후 3,000m² 이상 창고의 내부 마감재는 난연성능 이상을 사용하도록 하였고(2010.2.), 이후 그 대상을 600m² 이상 창고로 확대하였다(2014.8.).

이처럼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천 물류창고 화재를 둘이켜보면 여전히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남아 있다. 특히 아직 사고조사가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화재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는 내단열재는 별도의 기준이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으며,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경제 논리에 휘둘려 절끔절끔 제도를 개선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건축자재에 강력한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이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 때문에 화재안전기준을 일률적으로 강화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건축자재가 갖추어야 할 성능은 화재안전기준뿐 아니라 단열 성능이나 거주자의 건강과 관련한 부분 등 여

러 가지가 있다. 예를 들어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에 있기를 바라는 사람은 오로지 안전만을 기준으로 하여 시멘트와 같은 불연재를 마감재로 사용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더욱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서 제도가 개선되는 것은 분명히 바람직한 방향이다. 하지만 건축 분야의 안전기준 강화는 친환경, 국민건강, 아름답고 품격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한 노력 등 여러 가치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현행 법 체계를 넘어서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검토해야 할 필요도 있다.

먼저 현재 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은 「건축법」상 용도와 규모를 기준으로 달리 적용된다. 건축물의 화재안전은 재실자 밀도와 건축물의 세부적 용도, 사람들의 행동에 따라 영향을 받지만, 「건축법」상 용도가 같다 하여 재실자 밀도나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용도·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 아니라 재실자 밀도를 고려한 화재안전기준으로의 전환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 다른 접근 방법은 '사양' 중심에서 '성능' 기반으로의 전환이다. 기존 사양 중심의 제도는 기준을 단순화하여 법령의 준수 여부를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대공간 등에서 자유로운 설계를 제약하는 특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현재 사양기준과 동등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설계자의 창의성을 보장 할 수 있도록 성능 기반 설계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사양기준과 성능기준을 각각 어떻게 적용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건축자재 품질 확보 방안

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의 의미가 없다. 「건축법령」상 기준의 준수 여부는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등의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화재안전성능을 갖

춘 건축자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설계도서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화재안전성을 확인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건축물을 손상시키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완성된 건축물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자재를 채취하여 성능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맹점 때문에 시공 단계에서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으로 자재를 납품하면서 위조된 시험성적서를 사용하거나 실제 시험성적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등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제기가 지속적으로 있어 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건설현장을 무작위로 방문하여 사용되는 자재를 시험하여 적법한 건축자재가 사용되었는지 확인하는 건축안전 모니터링 사업을 2014년부터 시행하여 왔다. 그 결과 시행 초기에는 샌드위치 패널의 경우 적합한 자재의 사용비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처참한 수준이었으나, 모니터링을 지속하면서 최근에는 적합비율이 80%에 육박하는 등 비약적으로 품질이 개선되고 있다. 다만 일부 현장에 대한 샘플 점검에 의존하는 모니터링만으로는 불법 자재를 근절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기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부적합률이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토교통부는 현행 모니터링 체계의 대안으로 건축자재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고 품질 수준을 유지하고자 현재 내화구조에 적용하고 있는 품질인정제도를 샌드위치 패널, 방화문, 내화충진구조 등 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간에는 시험성적서에 의존하여 자재의 화재안전성을 확인하였지만,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되면 공장의 제조 품질관리 능력 까지 확인하여 인정서를 발급하게 되며, 불법자재가 확인된 경우 형사처벌 외에 인정취소와 신규 신청 제

한 등의 행정제재까지 도입된다. 품질인정제도가 정착되면 불량자재를 생산하는 부실기업은 활동이 제한되고, 정직하고 기술력이 있는 업체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강화 방안

「건축법」에서 화재안전기준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었으나, 개선된 기준은 신축이나 증개축 또는 용도변경과 같이 건축주가 건축·용도변경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적용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5월부터 시행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성능 보강은 「건축법」에 따른 제도 개선과 달리 소유주가 건축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제도와 차이를 갖는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적용 대상은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과 다중이용업(고시원·목욕장·산후조리원·학원) 시설을 대상으로, 3층 이상이고 가연성외장재를 사용하였으며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건축물에 외장재를 교체하거나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화재안전성을 보강하는 경우 공사비 4,000만 원을 기준으로 3분의 2를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지만, 2022년 말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지원 대상

분류	세부용도	화재취약 요인		
		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	1층 필로티 주차장
피난약자 이용시설	의료·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원	●	●	무관
다중이용업소 (건축물 연면적 1,000m ² 미만)	고시원, 목욕장, 산후조리원, 학원	●	●	●

제아무리 화재안전성능 기준을 강화해도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이 개선되지 않고 오히려 노후화만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성능 보강 제도는 기존 건축물의 안전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아직 시행 초기이니만큼 한계점도 있다. 우선 기존 건축물에 소급 적용된다는 특징 때문에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은 전체 건축물 중의 일부에 국한된다. 현재 기준을 적용할 경우 보강 대상 건축물은 전체 700만여 동의 건축물 중 1,400동 정도로 추정된다.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강이 완료되더라도 나머지 건축물의 보강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아울러 소급 적용의 한계로 보강 대상과 정부의 지원 대상을 일치시킴에 따라 의무대상이 아닌 자발적인 보강에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사적 소유물인 건축물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보강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들에게 DM을 발송하여 보강 대상임을 알리는 한편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강비용을 저리 응자(1.2%)하여 화재안전보강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 조금 더 많은 건축물이 안전할 수 있도록 화재발생 시 대형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숙박시설을 화재안전성능 보강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하지만 정부 주도의 보강 의무화나 지원대책만으로 700만 동에 달하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을 높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사회 전반에 걸쳐 안전의식이 높아지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에도 건축물 관리자 스스로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국립도시건축 박물관의 시작: 국제설계공모 추진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공간문화 연구단장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시작하기까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건축 아카이브에 대한 논의의 시작과 함께 국외의 건축과 도시 관련 박물관들이 주목을 받게 되었고, 2007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2007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설립되면서 건축 아카이브와 도시건축박물관에 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2011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 도시건축박물관을 포함한 국립박물관단지를 조성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그간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2015년 국립박물관단지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국립박물관단지 조성, 그리고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2016년에는 국립박물관단지 전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고, 2019년에는 박물관단지의 1차 건립시설인 어린이박물관, 통합운영센터, 통합수장고의 설계가 완료되어 2020년 착공을 앞두고 있다.

국립박물관단지에는 우선 어린이박물관, 도시건축박물관, 디자인박물관, 국가기록박물관, 디지털문화유산영상관까지 5개 박물관이 순차적으로 들어서게 되는데, 도시건축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에 이은 두 번째 박물관으로 2019년에 사업 추진이 확정되었다. 도시건축박물관은 총 사업비 900억 원을 투입하여 지하 2층, 지상 4층으로 조성되는데, 이는 박물관단지 내 박물관 중 최대 규모다. 올해 안으로 도시건축박물관 설계에 착수하여 2022년 착공, 2025년 개관하는 것이 목표다.

도시건축박물관의 지향점

도시와 건축은 물리적 환경, 경제 및 기술에 국한된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라 일상이 영위되는 토대로서 이용자인 시민과 함께 평가되고 개선되며 변화되

어야 할 대상이며,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투영하는 시험지이다. 따라서 도시건축박물관은 전문가, 실무자, 시민이 함께 세계적·국가적·시대적·사회적으로 도시와 건축에 대하여 다양하게 변화하는 요구와 이슈들을 공유하고, 더 나은 도시적 삶에 대한 논의를 생산하는 참여와 소통의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도시건축박물관은 유물 중심의 전통적인 박물관과 달리 자체적으로 다양한 아카이브와 전시 콘텐츠를 구축·생산하면서 전시-교육-연구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박물관이 되어야 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은 국립박물관단지 내에 조성되는 시설로 국립박물관단지 전체 및 인접시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또한, 관람객이 전시물을 단순 관람하는 일반적 방식과는 달리 도시건축박물관 자체가 전시물이 되어 관람객이 다양하고 즐거운 건축적 체험을 할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이 되어야 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은 확보된 유물을 전시하는 전시 기능 중심의 박물관이 아닌 도시와 건축에 대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 전시하고, 교육, 연구로 확장하는 아카이빙 중심의 박물관으로서 아카이브-전시-교육-연구와 관련한 기능과 동선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아울러 도면, 모형, 필름, 문서, 디지털 생산물, 건축재료, 건축부재 등 다양한 형식과 규모의 전시매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의 구현이 가능하여야 한다.

도시건축박물관 국제설계공모

지난 6월 2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은 도시건축박물관의 국제설계공모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 행복청은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담당하고, 국토교통부는 도시건축박물관의 전시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행복청은 이번

공모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안서 평가를 통해 지난 4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관리기관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국제설계공모는 2단계 설계공모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시건축박물관 전체에 대한 디자인 콘셉트와 개략적인 계획안을 제시하는 1차 공모와 구체적인 건축설계안과 전시공간 구상안을 제출하는 2차 공모로 나누어 실시한다. 공모에는 국내외건축사 모두 참여가 가능하지만, 외국 건축사 면허 소지자는 국내 건축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 한다.

7월 7일부터 8월 중순까지 총 45일간 진행되는 1차 공모에서는 5인의 심사위원이 공모지침상 주요사항을 고려하여 5편의 우수 작품을 선정하며, 2차 공모에서는 1차 공모에서 선정된 우수작품 5편에 대한 구체적인 건축설계안을 심사해 10월 말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된다. 특히 설계공모 누리집 (www.mua2020.org)을 통해 참가등록, 자료제공, 서류제출 등을 완료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으며,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종이 없는’ 디지털 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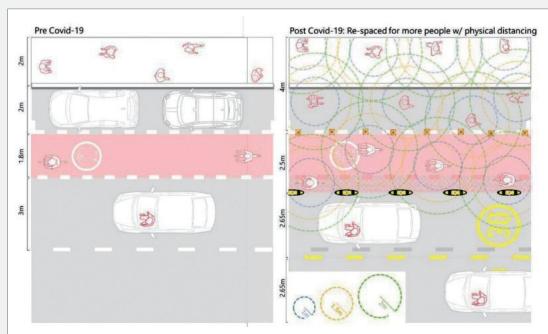
도시건축박물관의 논의가 시작된 2007년으로부터 13년 동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 필요성, 건립 방향, 국외사례, 공간구성, 전시 콘텐츠, 아카이빙 등 관련한 다양한 자료와 보고서 등을 통해 도시건축박물관의 건립을 이슈화하고자 노력하여 왔고, 이제 그 결실을 맺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와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도시와 건축 아카이브의 구심점이자 도시와 건축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공감대 확산의 거점으로서 ‘도시건축박물관’ 건립을 위한 최적의 설계안이 선정되기를 기대한다.

코로나 팬데믹에 회복탄력적인 도시인프라 (Resilience Urban Infrastructure)

베를린, 코로나19 대응 '팝업 자전거도로' 개설

문기덕

독일 클라인마흐노우시청
도시계획부 공무직



1.5m 물리적 간격을 고려한 교통수단 공간의 변화

출처: 국제수송포럼(2020, p.5)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맞아 고밀도 도심환경을 탄력적으로 개편하려는 정책들이 동력을 얻고 있다. 특히 1.5m 거리 두기의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전술적 어버니즘(Tactical Urbanism)*' 방식의 프로젝트들이 활발하다. 독일 베를린 주의 경우 그동안 추진하고자 한 자전거도로망 확충계획을 코로나 위기 속에서 전술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베를린은 지난 3월 1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슈퍼마켓과 약국 외에 모든 식당 상점과 학교, 놀이터 등의 문을 닫고 3명 이상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등 전방위 방역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통인구도 급감하였다.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객은 평소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베를린은 인구 1,000명당 381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는데, 독일 평균 687대와 비교해 거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공공교통, 공유차량, 자전거 등 자가용 외의 다른 교통수단 분담률이 높은 도시임을 말해 준다. 주목할 점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자전거 통행이 급증하였다는 점이다. 이동 시 거리두기가 어려운 대중교통 대신 자전거가 안전한 대안적인 교통수단으로 재인식된 것이다.

자전거 이용 인구 급증에 따라 안전성과 자전거도로망 확장의 문제가 제고되었고, 베를린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프리드리히시안-크로이츠베르크구의 간선도로에 차선 하나를 내주는 '팝업 자전거도로(Pop up bike lane, 임시 자전거길)' 설치가 제안되었다.

사흘 만에 베를린 주정부와 지자체(구청) 간의 긴밀한 협의체가 구성되고 '팬데믹에 회복 가능한, 탄력적인 도시인프라(Resilience Urban Infrastructure)' 구축을 위한 비상재원을 마련하였다. 인근 다른 구도 합류하였다. 주요 간선도로에 주황색 테이프선과 도로안전임시시설물을 설치해 3m 너비의 자전거길을 새롭게 확보하고, 기존의 자전거

* 계릴라 어버니즘(guerrilla urbanism)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선제적 시범운용을 통해 가정의 실효성을 실증한 후 사회적 수용성을 바탕으로 빠르게 도시를 바꾸어 나가는 개념이다. '실천적 도시계획·설계이론'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황색 표시선과 임시교통안전시설로 확보된 베를린시의 팝업 자전거도로

도로망을 연결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주요 내용이다. 도로변 주차구간은 폐쇄하거나 중간 차선으로 옮겨 무분별한 도로변 주정차를 방지하기로 하였다. 논의가 종결된 지 불과 일주일 만에 12.5km에 달하는 해당 구간에 팝업 자전거도로가 확보되었다.

팝업 프로젝트의 확산과 기대효과

베를린의 팝업 자전거도로가 미디어를 통해 알려지자 자전거도로망 정비를 꾀하려는 전 세계 지자체에서 문의가 이어졌고, 이에 베를린시는 영어와 프랑스어로 된 프로젝트 소개서를 발표하였다. 지난 4월 29일 독일도시학연구소 (Deutsches Institut für Urbanistik)가 주최한 화상세미나에는 독일 내 200여 개의 지자체가 참여한 가운데 담당 공무원들이 질의응답 형식으로 프로젝트의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이미 10년 이상 자전거도로망이 교통·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가능한 대안으로 인식되고 추진 중인 가운데 이 프로젝트가 다시금 유행하는 이유는 팝업 전략이 가지는 구현 가능성 때문이다. 그 특징으로 ‘유동적 실행’, ‘비용 절감’, ‘사회적 수용성 확대’ 등을 꼽을 수 있다.

베를린주 기후보호부 교통 담당자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사전 분석이나 구체적 계획안 없이도 2주 만에 구현이 가능하다. 팝업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이미 베를린 교통

법에 포함된 자전거 고속도로 조항에 의거해 시행되었으며, 실제 필요한 것은 자전거 조성 가이드라인(도로상황에 따른 매뉴얼), 바로 시행에 옮길 수 있는 교통시설물 그리고 무엇보다 주정부와 구청의 협업의지에 있다고 담당자는 강조한다.

베를린 주정부는 팝업 자전거도로의 안전성을 검토한 후 신호체계와 시설 보완 등을 거쳐 영구적인 자전거도로로 확정할 예정이다. 통상적인 방법으로 자전거도로 건설을 진행할 경우 독일에서는 행정적 조율이나 민원문제로 최소 2년에서 10년까지 시간이 소비된다. 구와 구를 연결하는 간선도로는 계획자(시정부)와 시행자(구청)의 차이에서 오는 행정관료주의에 따른 절차 문제로 오랫동안 자전거도로망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시범운용은 문제 상황 파악이 용이하고, 유동적으로 상황 대처가 가능하여* 행정업무를 상당 부분 간소화할 수 있다. 이번에 시행된 팝업 자전거도로는 기존 건설 방법에 비해 최소 50% 이상의 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목표는 앞으로 진행될 ‘자전거 고속도로’를 위한 사회적 수용성을 담보하는 데 있다. 베를린시는 단일 방향 최소 3m 너비로 평균 시

* 주황색 선은 쉽게 떼었다 붙이며 수정할 수 있다.



베를린 자전거 고속도로

출처: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politik_planung/rad/schnellverbindungen/pix/karte_rsv_gr.jpg

◎ 글/기사



완성된 자전거 고속도로

속 22.4km로 주행이 가능한 자전거 최우선의 고속도로를 100km 구간 이상 건설할 계획이며, 이는 이르면 2022년 이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독일자전거협회(ADGC)는 정기적으로 자전거 친화성을 평가하고 발표한다. 지난 2018년 베를린의 자전거도로(평균 1.5m 너비)는 협소하고 연결이 좋지 않으며, 무분별한 주정차 차량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베를린주는 팝업 자전거도로 프로젝트로 자전거 교통의 안전성과 편리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금 베를린 시민들은 팝업 자전거도로를 통해 전에 경험하지 못한 안전하고 빠른 미래의 자전거 고속도로를 체험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시민들의 실증적 경험이야말로 앞으로 확대될 자전거 고속도로 정책의 밑거름이자 지속 가능한 교통환경 정책의 안정적 토대로 작동할 것이다.

참고문헌

- 1 베를린주정부 환경·교통·기후보호국 홈페이지. https://www.berlin.de/senuvk/verkehr/politik_planung/rad/index_en.shtml
- 2 국제수송포럼. (2020). Resiliente Stadt: Wie Umwidmung von Straßenraum urbanes Leben starkt. COVID-19 Transport Brief. <https://www.itf-oecd.org/sites/default/files/german-respacing-cities-resilience-covid-19.pdf>
- 3 자전거 고속도로 타당성 분석보고서. https://www.berlin.de/sen/uvk/_assets/verkehr/verkehrsplanung/radverkehr/berlin_rsv-stammbahn-endbericht.pdf
- 4 임시자전거도로 추진 시행기관/구간별 정보. <https://www.infravelo.de/temporaere-radfahrstreifen/>
- 5 독일 도시건축연구소 화상세미나. <https://difu.de/veranstaltungen/2020-04-29/krisenfestes-radfahren-die-corona-pop-up-radwege-in-berlin>
- 6 독일자전거협회 2018 자전거 친환경성 평가. <https://fahrradklimatest.adfc.de/>

빈, 기후변화 대응 위한 건축법 개정(안) 발표

<https://www.wien.gv.at/presse/2020/04/27/gaal-kraus-reform-der-bauordnung-bringt-mehr-digitalisierung-und-klimaschutz-und-macht-wien-zukunftsfit>

<https://www.wien.gv.at/presse/2020/05/06/ranking-oeffis-wien-gruenste-stadt>

<https://www.wien.gv.at/presse/2020/05/22/klimamusterstadt-wien-wohnbaustadttraetin-gaal-und-umweltstadtraetin-sima-praesentieren-erste-fassadenbegruebung-an-gemeindebau>

오스트리아 빈은 기후변화 대응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건축법 개정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한 Katherin Gaal 하원의원과 Peter Kraus 녹색계획 대변인은 태양광 발전 의무화를 골자로 하여 화석연료 에너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태양광 에너지를 표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거용 및 교육용 건물을 포함한 신축 건물은 태양광 발전 시스템 적용을 의무화하며, 특히 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 태양광 발전 시스템은 생산된 전기를 가정 내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될 예정이다. 또한 이제까지 기술적·경제적 이유로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지 못한 경우 설치 의무를 유예하였으나 앞으로는 교체 지역에 대한 설치를 의무화한다.

태양광 발전 의무화 외에도 건축허가신청 등 건축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기후보호 및 에너지 전문가를 포함한 자문위원회 운영,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처럼 빈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방위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올해 'The world's 10 Greenest Cities 2020'에서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주요 정책을 살펴보면, 전기에너지를 사용하는 대중교통 운송수단을 통해 연간 CO₂ 배출량을 1,500kg가량 절감하며 1인당 CO₂ 배출을 최소화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도시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전체 도시 면적의 53%에 해당하는 거대한 녹지대와 새로운 공원을 조성하며,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에서 활용 가능한 수직녹화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2023년까지 총 625만 유로(약 84 억 6,000만 원)를 지원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친환경적인 도시로 꼽힌 빈

출처: 빈시 홈페이지. <https://www.wien.gv.at/presse/2020/05/06/ranking-oeffis-wien-gruenste-stadt>(검색일: 2020.6.10.)

중국, 도시의 건축 디자인 질 관리를 위한 지침 발표

http://www.mohurd.gov.cn/jzjnykj/202004/t20200429_245239.html

<https://www.dezeen.com/2020/05/14/china-ban-copycat-architecture-supertall-skyscrapers/>

중국 정부가 도시의 건축 디자인 질을 관리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내놓았다. 중국 주택 및 도시농촌건설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건축물 표절 금지, 초고층 건축물 건설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지침을 발표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번 지침의 목적을 “중국의 도시 정신을 구현하고 시대적 양식을 보여주며 중국만의 특성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설명하였다.

건축물 복제 행위 엄격히 금지

이번 조치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경기장, 전시관, 박물관, 대극장 등 대규모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복제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고 밝힌 점이다. 중국에서는 파리의 에펠탑과 개선문, 시드니의 오페라하우스 같은 타국의 랜드마크나 르코르뷔지에의 통상성당, 자하 하디드의 베이징 왕징 소호처럼 유명한 건축가의 작품을 그대로 복제한 건축물이 소도시와 마을을 중심으로 등장해 많은 논쟁과 법적 분쟁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건축물 높이 500m 이상은 금지, 250m 이상은 엄격 제한

일반적으로 500m 이상 신축 건물은 허용하지 않는다. 만일 신축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방화성능과 소방설비, 내진설계, 에너지 절약 등 엄격한 심의를 통과해야 함을 명시하였다. 250m 이상 신축 건물의 건설도 엄격히 제한되는데, 실제로 건설해야 할 경우 지방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및 관련 부서에서 건축계획을 철저히 검토하고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건축 디자인 질 관리

지역의 랜드마크와 고층 건축물을 중심으로, 중국 전역의 건축 스타일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강화한다. 지침에서는 건축설계 시 형태와 색상, 규모, 높이, 공간환경 측면에서 도시의 설계 요건을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 이와 관련된 현장조사를 벌이고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하였다. 관리를 위해 공무원들이 투입되는 것은 물론 도시총괄건축가 제도를 도입해 중국 전역에서 활용할 계획도 밝혔다.



중국의 대표적 초고층 건물 상하이타워



유럽 건축양식을 복제해 조성한 중국의 텁스터운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경관 독점하는 호텔 2개 층 철거 명령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0/may/11/athens-hotel-ordered-demolish-top-floors-blocking-acropolis-view-greece>

그리스 정부와 법원은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 경관을 가리는 대기업 소유 호텔에 대해 2개 층을 철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년 전에 들어선 이 호텔은 그리스에 본사를 둔 매트리스 제조업체 소유의 건물이다. 지역 주민들은 10층짜리 호텔이 빼앗아간 아크로폴리스 경관을 지켜내자며 그리스 최고행정법원(Council of State)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후 1년간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건축가 등이 반대시위를 벌여왔으며, 온라인 청원도 제기해 2만 3,000명의 서명을 받기도 하였다.

지역 주민들의 생각을 지지하는 여론과 시위가 점차 거세지자 그리스 중앙고고학위원회(KAS)가 긴급회의를 소집하였고 ‘서구 민주주의의 상징 성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호텔 높이를 낮춰야 한다는 결론을 만장일치로 내렸다. 최고행정법원도 해당 지역의 건축물 높이는 21m 이하여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았다.

그리스는 2012년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새로운 건축법을 통과시켜 적정한 환경 기준만 충족하면 대규모 건축물과 고층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이후 투자자들은 앞다투어 대규모 관광객을 겨냥한 건축물을 계획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된 시민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건축가 아이리니 프레자두(Irini Frezadou)는 “해당 지역에서 적어도 7개의 대형 호텔의 허가를 고려 중인 것으로 안다”면서 “이제라도 당국이 조치를 취한 것은 고무적이나 아크로폴리스의 도시·문화적 환경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건축과 계획에 대한 새로운 법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코스타스 바코야니(Kostas Bakoyannis) 아테네 시장은 이번 판결을 ‘매우 용감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아크로폴리스는 건축 이전에 그리스인의 영혼이자 중요한 문화유산으로,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하였다. 다만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제가 더욱 위축될 상황임을 고려하여 “정확한 규칙을 만들고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안정적이고 안전한 비즈니스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아크로폴리스 경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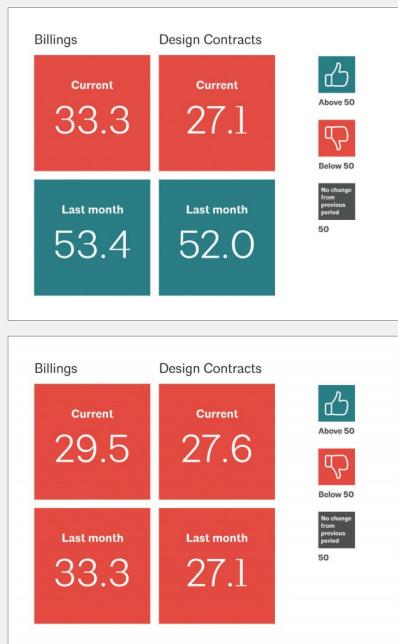
©Shutterstock

AIA,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건축매출지수 급감 발표

<https://www.aia.org/press-releases/6288369-architecture-billings-index-points-to-majo>

<https://www.aia.org/pages/6288434-abi-march-2020-architecture-firm-billings>

<https://www.aia.org/pages/6296537-abi-april-2020-business-conditions-at-arch?editing=true>



AIA가 발표한 3월(상)과 4월(하) 건축매출지수와 설계지수

출처: AIA 홈페이지. <https://www.aia.org/press-releases/6288369-architecture-billings-index-points-to-majo>, <https://www.aia.org/pages/6296537-abi-april-2020-business-conditions-at-arch?editing=true>

미국건축가협회(American Institute of Architects: AIA)는 코로나19 영향으로 미국 내 건축사사무소의 설계 서비스 수요가 기록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AIA에 따르면 2020년 3월 건축매출지수(Architecture Billing Index: ABI)가 전월 대비 20.1포인트 감소하여 33.3을 기록하였으며, 4월에는 이보다 더 떨어진 29.5를 기록하였다. ABI는 비주거용 건축 활동에 대한 경제지표로 그 수치가 50 이상이면 매출 증가, 50 미만이면 감소한 것으로 본다. 2월과 3월 사이 하락 폭은 ABI를 도입한 1995년 이후 가장 큰 것으로, 2001년 경기 침체기가 시작될 당시 9.4 포인트, 대침체(Great Recession)에 들어설 당시 8.3포인트 감소한 것과 비교해서도 매우 큰 수치이다. 신규 설계 의뢰지수도 56.5에서 23.8로, 계약지수도 52에서 27.1로 2월과 3월 사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3월 중순 건축사사무소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4월 중 매출이 15%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2020년 2분기의 회사 손실 예측치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 기업의 94%가 매출 감소를 예상하였고, 그중 25% 이상 손실을 볼 것으로 예측한 기업이 3분의 1 이상이었다. 평균적으로는 향후 3개월 동안 17%의 수식 손실을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손실은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 정책의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53%의 기업이 고용 동결을 시행하였고, 15%는 시행을 고려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32%의 기업이 직원 임금을 동결하였고, 12%는 임금을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응답 기업의 38%가 직원들의 임시 휴직을 고려하였고, 10%는 이를 시행하였다. 35%의 기업이 직원 규모를 줄이는 것을 고려하였고, 실제로 단행한 곳도 13%였다. 또 23%의 기업이 일부 직원을 정규직에서 임시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였고, 실제로 진행한 곳은 8%였다.

한편 4월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CARES Act'*에 의한 급여 보호 프로그램(Payroll Protection Program)을 신청한 기업이 전체 응답 기업의 84%이며, 신청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이 2%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난 3월 의회를 통과한 미국의 3차 대응책으로, 근로자·가계·기업에 대한 지원, 코로나 대응을 위한 의료보건 시스템 운영 지원, 항공 등 심각한 위기에 처한 산업 부문에 지원 등을 담은 피해구제정책이자 경기부양정책(출처: 조용석. (2020). 美 코로나 경기부양 2700조 투입…한국도 지원 확대해야. 이데일리. 5월 23일 기사)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공간 디자인 제안

[https://www.dezeen.com/2020/05/13\(curl-la-tourelle-head-tent-classrooms-social-distancing-school/](https://www.dezeen.com/2020/05/13(curl-la-tourelle-head-tent-classrooms-social-distancing-school/)

<http://www.clth.co.uk/projects/research/pop-up-schools>

<https://www.dezeen.com/2020/05/12/caret-studio-social-distancing-stodistante-installation-vicchio/>

https://www.caretstudio.eu/caret_studio/



안전거리를 시각화한 Giotto 광장의 바닥패턴

출처: Caret Studio 홈페이지 https://www.caretstudio.eu/caret_studio (검색일 : 2020.6.11.)

영국, 안전한 교육공간을 위한 텐트형 교실 제안

영국 건축 스튜디오 Curl la Tourelle Head Architecture는 영국 정부가 '6월부터 초등학교 재개학이 학년별로 이뤄진다'는 계획을 발표함에 따라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교육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개념의 교실을 제안하였다.

이는 학생과 교직원 간에 필요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감염 가능성을 최소화하고자 텐트 형태에서 착안한 교실을 팝업 구조로 설계하였다. 각각의 텐트형 교실은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학교 운동장 또는 인근 야외 공간에 설치하며, 교실 내부는 2m 간격으로 책상을 배치하여 학생 간에 일정한 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존 학교의 교실 내에서 활용 가능한 좌석 배치를 제안하여 야외 공간을 활용한 텐트형 교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텐트형 교실을 만드는 주요 소재로 야외 축제용 천막을 사용하거나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하는 등 자원을 재활용하고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탈리아, 광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시각화한 바닥 패턴 적용

이탈리아 건축 스튜디오 Caret Studio는 도시봉쇄와 이동제한 등 코로나 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 조치들이 종료됨에 따라 광장 등 공공장소의 재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장려하기 위해 이를 시각화한 바닥 패턴 설치 프로젝트인 'StoDistante'를 마쳤다.

피렌체 근방에 자리한 Vicchio 지역 내 마을 광장인 Piazza Giotto에 설치된 흰색의 바닥 패턴은 사람들 사이에 유지해야 할 최소한의 안전거리로 설정된 1.8m를 기준으로 삼고, 해당 크기의 사각형을 격자무늬로 배열하였다. 패턴을 구성하는 사각형은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을 고려해 광장 중앙에 다다를수록 크기가 커지는 형태를 띠며,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지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 텐트형 교실

출처: Curl la Tourelle Head Architecture 홈페이지. <http://www.clth.co.uk/projects/research/pop-up-schools>(검색일: 2020. 6. 11.)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한 도시 문제 개선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2020. 4. 23.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본사업에 선정된 부천시 상살미 마을의 ‘공유주차·모빌리티 사업’을 지자체·민간·주민이 함께 참여한 모범사례로 소개하며, 지난 4월 24일 부천시청에서 참여기업 17곳과 간담회를 가졌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은 민간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발굴한 아이디어로 기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로, 2019년 6곳을 대상으로 첫 예비사업을 실시하여 1년간 사업계획 수립 및 대표사업 시범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2월 본사업지로 3곳(부천·인천·대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부천시 상살미 마을은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을 통해 2009년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해제되기까지 겪어 온 원도심 내 고질적인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에 마을 주변 테크노파크 주차장과 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면을 공유하고, 테크노파크 주차장 이용 시 주차대리 또는 공유모빌리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며, 모든 서비스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운영 및 관리하였다. 특히 사회적경제 모델인 마을기업 ‘상살 미사람들’을 설립하여 기업과 함께 공유서비스를 운영·관리하고, 부천시는 조례개정을 통해 마을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운영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예비사업 기간 중 공유 주차공간 280면 확보, 주차장 수급률 72%op 증가, 불법주차 41% 감소, 마을기업 운영을 통한 21명의 고용창출 효과를 거뒀다. 부천시는 향후 스마트시티 챌린지 본사업 기간 동안 지역 내 주차난을 겪고 있는 13개 지역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공유모빌리티와 대중교통수단을 연계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 추진 전·후

출처: 국토교통부. (2020). 주차문제로 몸살 앓던 부천 원도심 스마트시티 처방으로 획기적 개선 … 전국 확대한다. 4월 23일 보도자료.

* 공유주차와 모든 이동수단(공유주차 및 대중교통)을 통합 검색 및 결제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산림청,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산림청 대변인실
2020. 5. 21.

산림청은 지난 5월 20일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숲법」) 제정을 통해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쾌적한 생활환경과 미세먼지·폭염 등 도시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동안 산림청과 지자체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시숲을 조성하고 관리해 왔다. 그러나 생활권 숲의 체계적인 확충 및 생태 관리를 위해 현행 법령 체계를 보완한 종합적인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2011년 관련 법안을 처음 발의하였으나 조경업계의 반대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이후 2018년부터 산림청을 포함한 산림계와 국토교통부·조경계가 재논의를 벌여 「도시숲법」 제정에 이르렀다.

이러한 「도시숲법」은 지자체의 장이 도시숲 면적의 유지·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정부가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도시숲 조성과 관리를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자 개인이나 기업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시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나무와 토지를 기부받을 수 있으며,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조성과 질적 관리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모범 도시숲 인증 제도도 신설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산림청이 도시숲지원센터를 지정하면 지자체는 센터에서 도시숲 관리 및 이용 프로그램의 개발·보급과 도시녹화 운동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산림청과 지자체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도시숲 조성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민간 참여를 활성화한다.



서울시 도봉구 도시숲(좌)과 서울시 여의도공원(우)

출처: 산림청. (2020). '숲속의 도시, 숲속의 대한민국' 구현, 법적 기반 마련. 5월 21일 보도자료.



경기도,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나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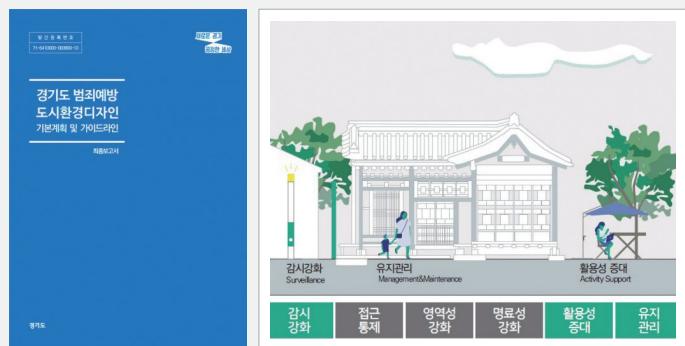
경기도 건축디자인과 디자인정책팀
2020. 3. 8.
2020. 3. 27.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경기도는 원도심 범죄유발 상황을 줄이기 위해 진행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였다. 이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6조에 의한 것으로, 2013년에 수립한 안내서와 2015년에 수립한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종합계획’을 보완하였다. 이번 용역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19년 7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진행되었다.

셉테드(CPTED) 기법을 적용하고 농촌·어촌·도시 등 다양한 공간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별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이번 용역의 결과는 주거지역·상업지역과 학교·청소년 시설 등의 낡은 담장 개선 및 골목길 조명 확충, 방범용 CCTV·비상벨·방범창 설치, 공원·공터·빈집 정비 등에 적용된다.

경기도는 향후 매년 31개 시·군 중 5곳을 공모해 진행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도 이번에 수립한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반영할 계획이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좌) 셉테드(CPTED) 6대 원칙(우)

출처: 경기도. (2020). 경기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3월 8일 보도자료.

수원시 매산동 등 5개 지역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경기도는 올해 도내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예산 25억 원을 들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 공모를 통해 희망지역을 접수 하였으며 ‘안전취약 수준’, ‘주민참여 의지’, ‘사업내용 타당성’, ‘표준모델로의 발전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사업대상지 5곳을 선정하였다.

올해 선정된 사업대상지는 외국인 밀집지역인 ‘수원시 매산동’과 노후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하고 기반시설이 취약한 ‘용인시 마북동’ 외에 ‘이천시 창전동’, ‘구리시 수택동’, ‘가평군 청평면’ 등으로, 주민과 경찰서 등 관계기관의 의견수렴과 환경특성 분석을 통한 기본설계 등을 추진한다. 특히 설계부터 공사까지 모든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참여하게 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업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은 경기도가 2014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2~5곳을 선정하였으며, 현재까지 예산 125억 원으로 총 26 곳에 사업을 진행하였다. 대표적으로 경기도 양주시 봉암리 일대에서 진행한 사업의 경우 폐가 21채를 철거하고 도로와 담장, 조명,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새롭게 정비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79% 감소시킴으로써 주민만족도 96%의 결과를 얻는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도내 취약지역, 외국인 밀집지역, 여성안심구역 등에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전(좌)·후(우)

출처: 경기도. (2020). 도, 수원시 매산동 등 5개 지역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3월 27일 보도자료.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 개선

인천시 교통정책과
2020. 4. 6.

충청남도 교통정책과
2020. 4. 30.

대전시 교통건설국 공공교통정책과
2020. 5. 18.

인천시,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추진

인천시는 초등학교 주변 도로의 안전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2022년까지 국비를 포함해 121억 원을 투입하여 관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263곳에 무인 교통단속장비를 설치한다는 목표 아래 올해 초등학교 90곳에 133대를 설치할 예정이다. 또한 스쿨존 내 교차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관내 무신호 횡단보도(741곳)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군·구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비율에 따라 신호기를 우선 설치한다.

아울러 2020년 하반기 「도로교통법」개정을 통해 시행되는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하여 주정차금지표지 설치, 노면표시(주정차금지 및 황색복선) 정비 등 시설 개선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인천시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맞춤형 교통안전시설



옐로카펫



과속경보시스템

출처: 인천시. (2020). 인천시, 민식이법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 본격 추진한다. 4월 6일 보도자료.

충청남도,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 추진

충청남도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올해 180억 원을 들여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도는 이 사업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로를 설치하고 차량속도 감속 유도시설, 안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39곳) ▲초등학교 주변 무인 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등 설치(250곳) ▲횡단보도 내 옐로카펫 설치(31곳) 등을 실시한다. 또한 6월 시행 예정인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대비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초등학교 414곳에 불법주정차 금지표지를 설치하는 한편 노면표시 등도 개선한다.

대전시, 어린이보호구역 시설 개선에 박차

대전시는 보행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을 집중 설치하고, 노후 교통신호기와 철주를 교체하는 등 교통시설 개선에 나선다.

시는 먼저 서구 핸님네거리 등 3개 교차로의 노후 철주와 오동작으로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신호등 설비 32개를 올 상반기 중 정비할 예정이다. KT연수원 외 18곳의 교차로에 교통신호등이 신설되고, 교차로 32곳의 노후 교통신호제어기도 교체된다. 또한 39곳의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호기를 신설하고, 갈마초등학교 등에 보행약자를 위한 횡단보도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를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이다.

도시 환경문제 대응책으로 도시숲 조성 확산

충청남도 산림자원과
2020. 4. 2.

충청북도 산림녹지과
2020. 4. 8.

세종시 환경녹지국 산림공원과
2020. 5. 10.

충청남도, 도심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미세먼지 차단 숲 조성
충청남도는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공기질 개선과 도시열섬현상 및 폭염 완화 등을 위해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도의 설명에 따르면 충청남도는 중국과 인접해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 유입이 많은 데다 전국 노후 화력발전소 60기 중 30기가 도내 위치해 있어 미세먼지 발생량이 많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개 시·군 5곳(14.9㏊)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한다. 세부 대상지는 ▲아산 둔포산업단지 ▲서산시 대죽·오토밸리일반산업단지 ▲당진시 석문국가산업단지 ▲예산군 예당일반산업단지 등이다.

도는 미세먼지 차단숲을 통해 미세먼지를 흡착·흡수·침강·차단하고, 발생원 주변에 다열·복층 구조로 혼효림을 조성해 주거지역 유입·확산을 억제할 방침이다.

충청북도, 도시공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확충

충청북도는 미세먼지 저감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도내에 다양한 유형의 도시숲 15곳을 상반기 내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건물 사이 등 자투리땅에 조성하는 ‘녹색쌈지숲’ 3곳, 생활환경의 보호유지와 보건위생 등을 목적으로 조성되는 ‘생활환경숲’ 2곳, 학교와 그 주변 공간에 조성되는 ‘명상숲(학교숲)’ 1곳이 새로 들어선다.

또 생활권 주변 지역의 산림과 큰 규모의 공간을 활용하는 ‘산림공원’도 진천군에 조성된다. 이 밖에 충주시와 보은군 일대 등 5곳에 가로수 식재를 진행하며, 청주시·진천군·단양군 일대 도로변을 활용해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명품가로숲길’도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

세종시는 미세먼지와 열섬현상 등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도심 내 녹지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2022년까지 ‘도시 바람길숲’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산림의 맑고 찬 공기를 끌어들이고, 도시 내부의 오염된 공기와 뜨거운 공기를 배출해 기후변화 대응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시는 도심 외곽의 산림을 정비하고 수종을 갱신해 ‘바람 생성숲’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생성된 바람이 도시 내부로 유입되도록 하천 및 주요 도로 주변에 ‘연결숲’을 조성한다. 도심 내부에는 유입된 찬바람이 확산되는 ‘디딤숲’과 ‘확산숲’이 조성되며, 주변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차단해 생활권 내 미세먼지 유입을 줄이는 ‘차단숲’도 들어선다.

시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통해 도심 내 전체 면적의 52%를 차지하는 공원·녹지 등과 도시 외곽의 산림을 연결, 미세먼지 저감과 열섬현상 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에서 조성 중인 다양한 형태의 도시숲



녹색쌈지숲



명상숲

출처: 충청북도. (2020). 충북도, 미세먼지 저감 도시숲 확충.
4월 8일자 보도자료

장소와 지역사회에 관한 사회경제적 정책연구·지원을 수행하는 미국의 UI(Urban Institute)

고영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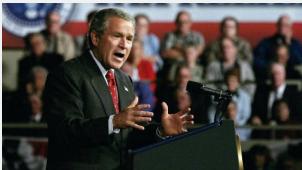
들어가며

Urban Institute(UI)는 미국의 도시문제 해결과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공공 정책과 사업의 수립 및 시행 성과를 예측하고 평가하며, 국가정책과 사업이 데이터 등의 객관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추진되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이다. 미국 건축·도시 분야 싱크탱크로서 UI가 갖는 차별성은 장소(place)와 지역사회(community)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의 효과 및 성과 검토·분석, 지역 주민 설문조사, 데이터 구축 및 시각화, 과학적 방법론 개발 및 모델링을 통해 미국 내 모든 수준의 정부[연방(federal), 주(state), 광역(metropolitan area), 도시(city)]의 정책과 모든 공간 규모[도시지역(urban area), 교외 및 농촌(suburban & rural area)]에서의 사업 시행과 개선의 근거 제시, 정책자문 및 교육을 수행함에 있다.

이 글에서는 지난 50여 년간 미국의 건축·도시 정책과 사업에 대한 정책 연구, 근거 기반의 정책자문과 지원을 담당하는 UI의 설립 배경, 조직문화 및 구성, 연구 분야를 소개하고 우리나라 건축·도시 정책연구·지원을 담당하는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 도움이 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설립 배경 및 주요 연혁

UI는 미국 도시의 빈곤 문제 해결방안 마련과 정책 수립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수행을 목적으로 1968년 린든 존슨 대통령이 설립하였다. UI는 당시 미국 대다수 가정에 만연하던 빈곤과 불평등을 해결하고자 마련된 연방정부의 신규 정책 활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결과예측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현금지급, 식료품 바우처,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정책과 사업 간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여 정책 시행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미국 정부의 정책 개발에 기여해 온 UI
 UI는 정책연구의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도시빈곤 해결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1968년 설립된 이후 지역사회 환경과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시대별 주요 정책의 효과 예측 및 성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지원 중이다.
 출처: <https://www.urban.org/about/our-history>(검색일: 2020. 6. 9.)

1973년 닉슨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건설 중단 선언과 함께 UI는 이전 30년간의 주거지원사업 성과를 추적조사하고 지원사업의 성과 강화를 위한 주택정책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레이건 대통령 재임 시기이던 1982년에는 지난 10년간의 가구소득, 경제성장, 빈부격차, 고령자 복지, 세입세출의 변화를 추적 조사하고 해당 데이터를 근거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소련연방 붕괴에 따라 동유럽에 민주주의 사회시스템이 도입되던 시기인 1992년에는 동유럽 국가들이 시장경제로 전환하고 기본 사회지원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도록 동유럽 국가들의 지역정부 역량 강화, 시민참여 확대, 성과관리 개선책 등에 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또한 1996년 미국의 복지개혁 이후 미국 전역의 4만여 가구를 대상으로 추적조사를 벌여 연방정부의 복지지원 제한 속에서 주정부의 복지지원 제공에 관한 지침 마련의 근거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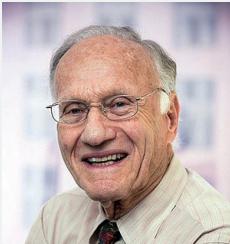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의 조세감면 경기부양정책 시행에 발맞추어 UI는 조세정책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조세정책의 실질적 효과측정 모델을 개발하여 이후의 선거 시기에 맞추어 제안되는 각종 조세정책안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근거 기반의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미국의 사회 경제적 피해 복구가 한창이던 2006년에는 최우선 지원이 요구되던 주택과 일자리, 보건서비스 및 교육에 대한 복구전략을 제시하고 재난재해에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역할에 대한 정책자문을 수행하였다.

UI는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대공황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발간하였으며, 당시의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는 이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였다. 이에 발맞추어 UI는 2013년 주택금융 정책센터를 설립하고 국가 주택금융제도의 재건과 미래 자본시장정책 및 제도 마련에 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오바마 정부의 미국 의료보험체계 개선정책(Affordable Care Act) 시행과 더불어 UI는 변화되는 의료보험체계가 미국의 사회경제, 고용주 및 일반시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예측하여 정책시행의 근거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또한 오바마 정부가 시행한 의료보험체계의 폐지 및 개선에 관한 2018년의 트럼프 정부 정책토론회에 즉각적 정책개선안의 효과 예측 자료를 작성·제출하였으며, 미국 각 주정부가 마련 중이었던 지역사회 빈곤 해결을 위한 식비지원, 의료지원, 주택 및 양육지원정책 개선안에 UI의 예측모델을 활용한 정책효과 및 성과예측 자료를 작성·제출한 바 있다.

기관 비전과 목표

UI는 조직원의 다양성 존중, 연구성과의 정직함, 다분야 협동의 무대를 조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다음과 같은 기관의 비전과 목표, 업무수행의 슬로건을 제시한다.



UI의 역대 기관장들[위에서부터
윌리엄 골햄(1968~2000), 로버트
라이샤워(2000~2012), 사라 로زن
월터(2012~현재)]

상 <https://www.urban.org/author/william-gorham>(검색일: 2020. 6. 9)
중 <https://www.urban.org/author/robert-d-reischauer>(검색일: 2020. 6. 9.)
하 <https://www.urban.org/author/sarah-rosen-wartell>(검색일: 2020. 6. 9.)

UI의 비전과 목표

구분	내용
비전	사회경제 분야 정책연구에 기반한 정책제안과 결정지원, 통찰력 강화를 위해 배경·경험·능력과 사고의 다양성 강화
조직구성의 목표	미국의 역사·사회적 비주류 그룹을 포함하는 조직 구성
조직문화의 목표	인종, 사회, 경험적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문화
연구와 소통의 목표	미국의 다민족·다문화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정책연구
슬로건 1: 근거가 우리를 이끈다	객관적이고 독립적으로 증거기반의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결론을 도출하며 특정 정당 및 협안에 치우치지 않는 연구를 수행한다.
슬로건 2: 다양성은 필수다	다양한 견해와 시각에서의 연구수행과 접근을 위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화하는 팀을 구성한다.
슬로건 3: 사실이 중요하다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 평등성 및 삶의 질 강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개선에서 근거 기반성을 중시한다.

기관 운영

UI는 미국 건강·교육·복지부(US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차관을 지낸 윌리엄 골햄(William Gorham)이 기관 설립의 해였던 1968년부터 2000년까지 기관장을 맡았으며, 국회 예산처장(Director of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을 지낸 로버트 라이샤워(Robert D. Reischauer)가 2000년에서 2012년까지 제2대 기관장으로 활동하였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는 국가경제위원회(National Economic Council) 부국장을 지낸 사라 로즌 월터(Sarah Rosen Wartell)가 UI의 제3대 기관장을 맡고 있다.

UI는 매년 200여 건의 정책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450여 명의 인력으로 구성된다. 2018년 기준 UI의 총 자산규모는 약 1억 7,000만 달러(약 2,054 억 원)이다. UI의 운영은 국가 및 지자체, 각종 정부지원기관과 교육기관 및 민간의 정책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한 수입이 주요 기반을 이룬다. 주요 지출은 정책연구, 정책성과 평가, 기술적 지원에 사용된다. 기관 운영에 있어 UI는 특정 정부 및 정책에 우호적 연구수행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거절하고 있으며, 연구용역 발주처의 성향이나 의도와 독립되는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

UI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지식생산과 근거 기반의 정책제안을 통해 정책결정권자의 통찰력을 강화한다. 학술적 조사와 검토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정책결정의 모든 수준에 연관되는 정·관·학·연·성격의 기관과 민간의 이해관계자를 지원한다. 정책이 국민 생활환경 개선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연구결과를 통한 지원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UI는 정책연구, 데이터 분석, 정책·전략의 자문과 지원, 행사개최 및 대국민 소통을 추

“UI는 미국의
사회경제적 이슈에 대한
새로운 지식생산과
근거 기반의
정책제안을 통해
정책결정권자의
통찰력을 강화한다.”

진한다.

정책연구

사회경제적 문제를 설명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량적·정성적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한다. 사회경제 정책의 변화가 국민과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검토한다. 정책대안 검토를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정책과 사업의 성과 예측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방법론을 적용한다.

데이터 분석

사회경제 분야를 아우르는 각종 빅데이터의 비용 효율성을 분석하며, 이를 위한 선진 기술을 도입·적용한다. 지속적 정책현안 발생과 변화를 실시간으로 검토·분석한다.

정책·전략 자문 및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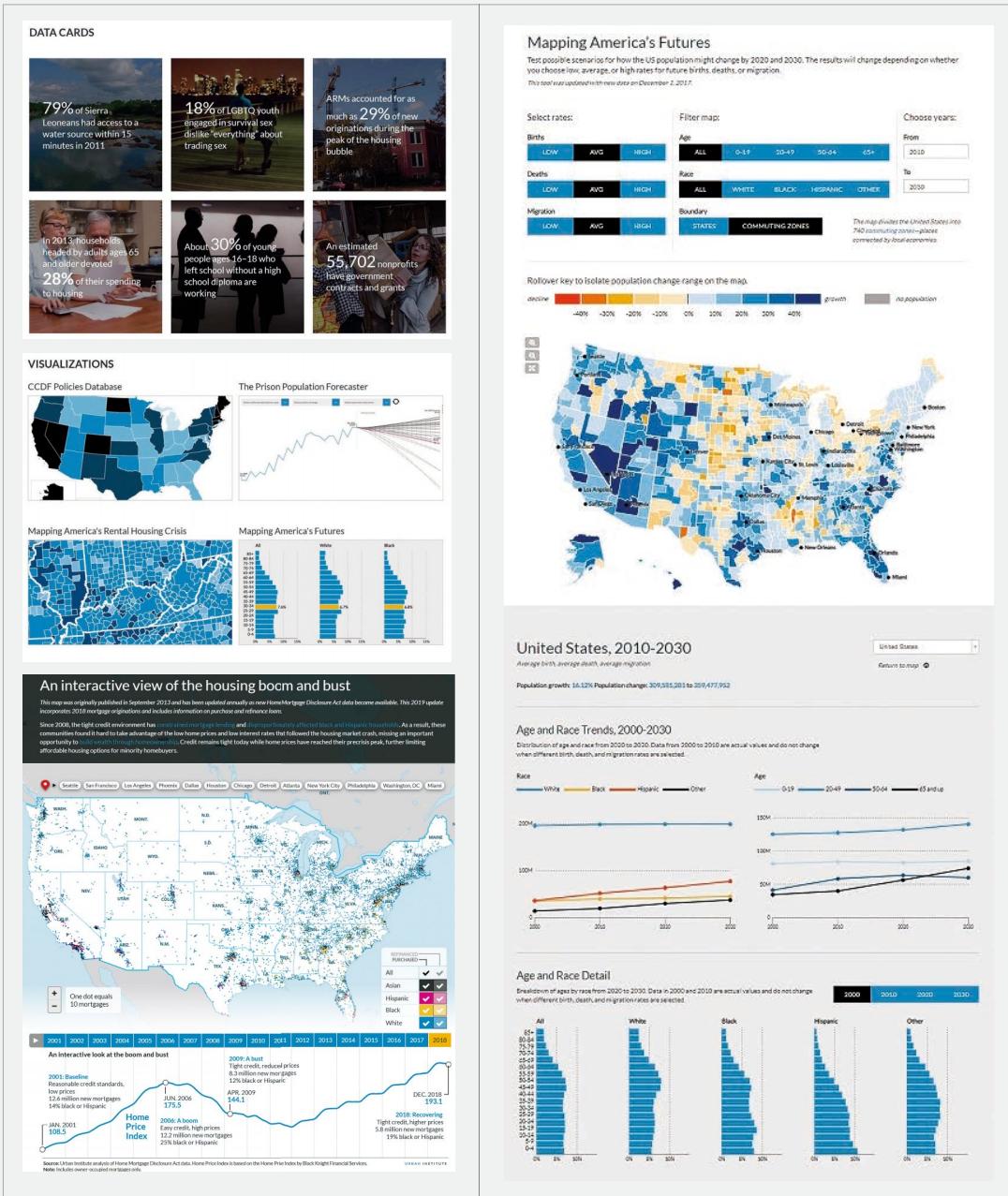
사회경제적 현안에 대한 혁신적 솔루션을 개발하고 최적의 근거를 도출하고자 한다. 민간 및 자선기관의 성공적 투자전략 수립 지원을 위한 근거 기반의 지침을 제시하는 것도 주요 업무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웨비나, 대면자문, 협장 방문, 기술적 지원 등을 통해 정책 수립·시행의 이해관계자가 UI의 데이터와 각종 자료를 활용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연구를 통한 근거가 정책실무자에게 실질적 제안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발하는 일도 맡고 있다. UI가 구축한 데이터 및 시각화 자료를 언론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UI 연구자 연수를 통해 각종 단체와 교육기관과의 관계성을 강화하며, 정책수립지원의 동반자를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행사 개최

최근의 정책현안 대응 방안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도출하기 위한 연구자, 정책입안자, 실무자 및 관계자 토론을 주최·주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정책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생중계 및 녹화영상 제작 등을 통해 국가 수준의 정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상시 자문대응체계 구축하고 있다.

대국민 소통

정책연구의 결과 및 통계수치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시각화하고 테마지도를 제작하는 등 정책지원 근거 제시의 효율화를 도모한다. 또한 스토리텔링 기법을 활용해 다양한 국민 삶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과 정책변화의 영향력, 사회경제적 문제 등의 화두를 제시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특수해 마련 지원을 위한 전략



UI의 정책지원 연구·조사 결과는 보고서 및 요약 브리프 외에도 카드뉴스 형식의 요약과 데이터 시작화, 테마지도의 방식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어 근거 기반의 정책수립과 개선을 도모한다.

좌·상 <https://www.urban.org/data-viz>(검색일: 2020. 6. 9.)

좌·하 <http://apps.urban.org/features/mortgages-by-race/#/37,996/-96,526>(검색일: 2020. 6. 9.)

우 <http://apps.urban.org/features/mapping-americas-futures/#map>(검색일: 2020. 6. 9.)

“UI는 장소와 지역사회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각종 사회경제적 현안을 연구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자문을 수행한다.”

개발에도 힘쓰고 있다.

건축·도시 관련 연구 분야 및 연구센터

장소와 지역사회 개선을 통한 국민 삶의 질 증진을 목표로 각종 사회경제적 현안을 연구하고 근거 기반의 정책자문 등을 수행하는 UI는 관련 현안을 총 25개의 영역으로 구분하고 기관의 연구 분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보다 집중적 정책연구지원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UI는 기관 내부에 12개의 별도 연구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연구센터 간의 협업과 주제의 융복합을 통한 대응이 요구되는 16개의 국가정책·계획 분야를 별도로 지정하여 정책연구와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UI의 25개 연구 분야와 12개 센터 및 16개의 센터 간 융복합 현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으며, 건축·도시 분야 정책연구지원과 관련된 연구 분야와 센터를 선별하여 소

UI의 연구 분야와 정책센터, 융복합 현안

구분	내용
연구 분야 (25개)	청소년(Adolescents and Youth), 고령화(Aging), 어린이(Children), 기후 및 환경변화, 재난재해(Climate, Disasters, and Environment), 지역사회 참여(Community Engaged Methods), 범죄 및 사회정의(Crime and Justice), 경제성장 및 생산성(Economic Growth and Productivity), 교육(Education and Training), 가정(Families), 금융(Finance), 음식·영양(Food and Nutrition), 성 구분(Gender and Sexuality), 보건(Health and Health Policy), 주거 및 주택금융(Housing and Housing Finance), 이민자(Immigrants and Immigration), 소득(Income and Wealth), 국제개발(International Development), 노동력·노동시장(Job Market and Labor Force), 균린주구 및 도시(Neighborhoods, Cities, and Metros), 비영리 단체 및 자선활동(Nonprofits and Philanthropy), 사회성과연계(Pay for Success), 빈곤, 취약성, 안전망(Poverty, Vulnerability, and the Safety Net), 인종·민족(Race and Ethnicity), 연구방법론 및 데이터 분석(Research Methods and Data Analytics), 세금·예산(Taxes and Budget)
정책센터 (12개)	교육정책센터(Center on Education Data and Policy), 국제개발센터(Center on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Governance), 노동·복지·인구센터(Center on Labor, Human Services, and Population), 비영리 단체 및 자선활동 센터(Center on Nonprofits and Philanthropy), 보건정책센터(Health Policy Center), 주택금융정책센터(Housing Finance Policy Center), 소득정책센터(Income and Benefits Policy Center), 범죄정책센터(Justice Policy Center), 주거·지역사회정책센터(Metropolitan Housing and Communities Policy Center), Research to Action Lab, 통계분석팀(Statistical Methods Group), Urban-Brookings Tax Policy Center
융복합 현안 (16개)	미국의 노동력 구축(Building America's Workforce), 지역사회 경제발전의 구심축(Community Economic Development Hub), 근거 기반의 정책 역량(Evidence-Based Policy Capacity), 사회안전망 확보(From Safety Net to Solid Ground), 이동성과 불평등(Inequality and Mobility), 아동에 대한 이해(Kids in Context), 저소득 노동자 가정(Low-Income Working Families), 지역사회와 청소년 지원(Neighborhoods and Youth Development), 소득균형·분배(Opportunity and Ownership), 성과평가·관리(Performance Measurement and Management), 이민자 정책(Program on Immigrants and Immigration), 노후보장 정책(Program on Retirement Policy), 건강의 사회결정요인(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지방정부의 금융정책(State and Local Finance Initiative), 세금정책(Tax Policy and Charities), 워싱턴DC 관리 정책(Urban - Greater DC)

“근린주구, 도시,
광역권 수준에서의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관여되는 장소와
공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개하고자 한다.

근린주구 및 도시 분야(Neighborhoods, Cities, and Metros)

근린주구, 도시, 광역권 수준에서의 국민 삶의 질 증진에 관계되는 장소와 공간의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주거 불평등, 주거민 차별, 빈곤 집중 등에 대한 경향을 추적·조사하고 분석하며, ‘쇠퇴지역 재생’, ‘도시성장 관리’, ‘주거유형의 선택 폭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다.

주거 및 주택금융 분야(Housing and Housing Finance)

주택금융정책에 관한 자료와 분석, 주택소유율, 임대주택 및 무주택자에 대한 분석 등을 위한 주택시장의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진행한다. 주거지원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고, 정책입안자를 대상으로 주택금융정책이 가구주·지역사회·지역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정책을 자문한다.

기후 및 환경변화, 재난재해 분야(Climate, Disasters, and Environment)

국민 건강과 사회경제적 삶의 질을 결정하는 지역사회의 물리적 환경이 전 국민과 지역에 균등하게 조성·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열악한 주거환경, 재난피해 경험 지역사회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적·물리적 환경영향의 불평등을 분석한다.

고령화 분야(Aging)

베이비부머 세대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 고령화로 인한 사회경제 변화에 대한 기초·광역·국가 수준의 정책효과를 평가한다. 생산인력, 건강지원, 주택수요, 연금계획, 노후보장 등의 변화추세에 대한 추적검토와 연구를 통해 정책입안자와 국민을 대상으로 정책현안을 보고하고 자문을 수행한다.

범죄 및 사회정의 분야(Crime and Justice)

지역사회, 도시, 광역권 및 국가 수준에서의 범죄예방, 정의구현을 위한 정책방안을 도출한다. 범죄발생 경향을 분석하고 범죄예방정책을 평가하는 연구도 수행한다. 또한 폭력과 약물남용 등 범죄로부터 사회취약계층 국민과 지역사회를 보호할 수 있는 전략을 연구한다. 범죄 피해자 및 피의자, 실무담당자 면담을 통해 현장 기반의 객관적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량적·정성적 데이터 분석 방법론을 종합 활용한다.

지역사회 참여 분야(Community Engaged Methods)

지역사회 대표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기반 및 참여 방식의 연구를 수행한다. 지역사회 개발과 개선의 기획, 시행 이후의 자문 등 모든 지역사회 개발과정이 지역사회의 의견에 기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략 연구를 수행한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사회적 환경이 전 국민과 지역에 균등하게 조성·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한다.”

주거·지역사회정책센터 (Metropolitan Housing and Communities Policy Center)

주택, 커뮤니티 공간, 학교시설의 개선을 통한 미국의 가정, 일상생활, 교육의 질 증진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주요 도시와 교외 지역에서 국민 삶의 질 개선에 관계 되는 공간적 요소를 탐색한다. 도시지역 주택정책 및 지원사업 등 주거공간 개선에 관한 연방·주·지역 정부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 일도 담당한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의견조사, 어린이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전략 평가도 수행한다. 노후지역 및 거주자에 대한 지원 정책사업을 검토하고, 각종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농촌사회·도시·광역권이 대응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한다. 사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혁신적 연구방법 마련, 국가 지역사회 지표발굴 및 진단사업(National Neighborhood Indicators Partnership)을 통한 지역사회 통계·행정구역별(block, census track 등) 실태조사, 지역사회 개발사업의 정책자문 수행 또한 센터의 주요 업무이다.

시사점

UI는 미국의 중앙정부와 광역 및 기초지자체, 민간기업 및 해외 기관 등 모든 수준의 정책결정기구를 대상으로 모든 규모의 공간환경(장소, 건축물, 도시 및 대도시 등)에 관계하는 사회경제적 문제와 현안을 연구하는 비영리 정책지원 기관이다. UI는 특정 정책에 관계되는 공간적 대상과 사회적 계층을 정확하게 지정하고 최대의 정책개선 효과 달성을 위한 객관적 연구성과 및 근거 기반의 정책 수립과 시행이 최선의 결과를 담보한다고 주장한다.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문하기 위해 UI는 연구결과를 정리한 보고서와 요약 브리프의 발간 외에도 카드뉴스, 데이터 시각화 및 테마지도 작성 등을 통해 정책입안자와 실무자, 나아가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한다. 정기토론회 등의 행사와 웨비나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에도 열심이다.

UI는 기관 운영을 위한 수입의 50% 이상이 정부가 발주하는 정책과제 용역으로부터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 및 정권이나 발주처의 입맛에 맞추어 우호적인 정책효과 예측 또는 성과평가를 추진하지 않으며 객관적 데이터와 조사결과에 근거하는 정책연구 수행을 강조한다.

장소와 지역사회에 관한 사회경제적 현안 해결을 위해 정책이 진정으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시행되도록 지원하며 연구결과의 대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우리나라의 민주과학적 건축·도시 싱크탱크가 가져야 할 이상향이다.

참고문헌

1 미국 도시연구소 홈페이지. [\(검색일: 2020. 6. 9.\)](https://www.urban.org)

건축과 도시공간

—

Vol. 38

Summer 2020

장소 탐방

Place Review

3

종로구 국공립 부암어린이집은 ‘가능성’으로 지어낸 공간이다. 시간과 계절의 변화를 시각적으로 느낄 수 있게 하는 구조, 구석 구석 자리한 학습·놀이공간 속에서 아이들은 관찰하고 상상하고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며 소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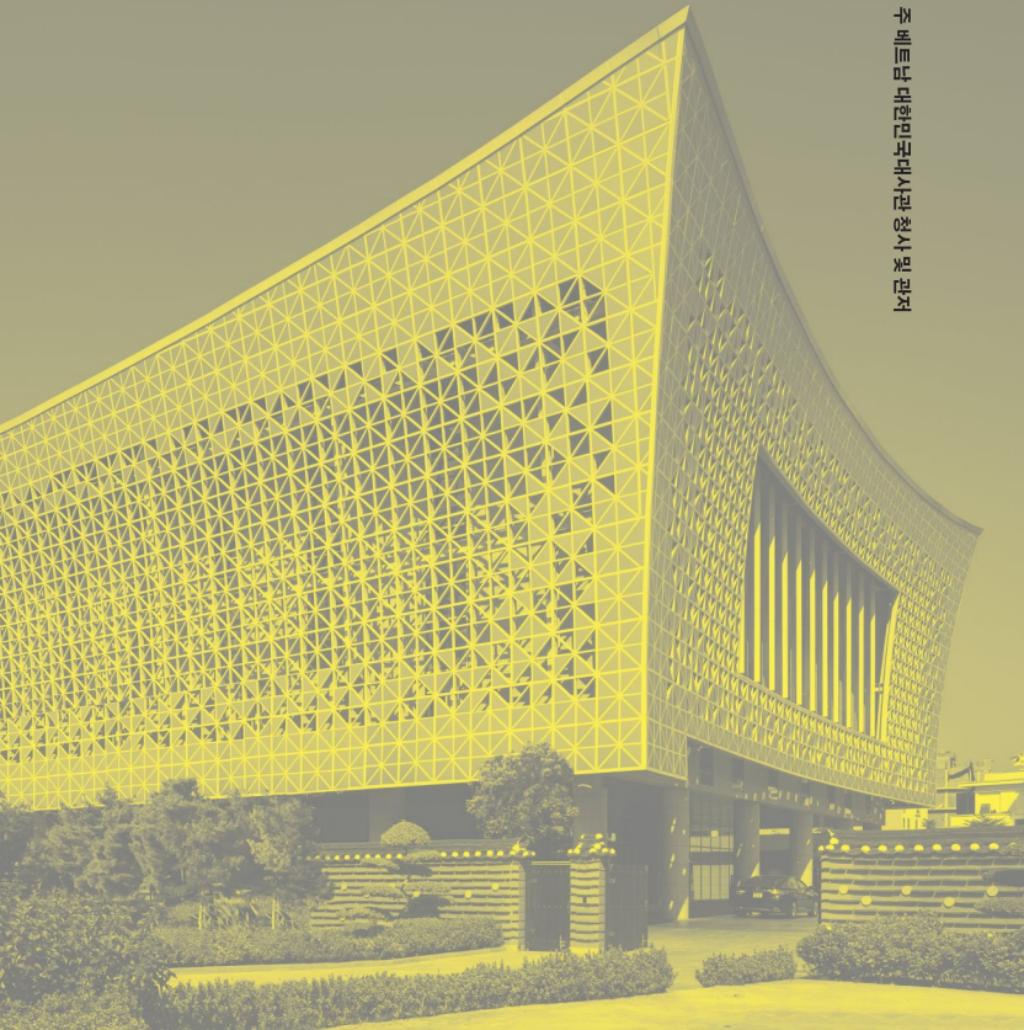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청사에 담긴 한국은 직접적이지 않지만, 한국다움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다. 선(線), 음양, 비움, 마당 등 한국 전통 건축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도, 베트남 현지의 조건을 녹여내 그 자체로 교류와 조화의 장을 상징하고 있다.

중로구 국공립 부암어린이집



부암 어린이집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세모·네모·집

- 종로구 국공립

부암어린이집

094

한국의 혼을 담은

외교청사

-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110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세모·네모·집 - 종로구 국공립 부암어린이집 |

부암어린이집 중앙에는 자연의 포근함이 느껴지는 세모난 선큰마당이,
부모와 잠시 헤어지고 만나는 공간에는 네모난 소통의 창이 자리한다.
건물 내부에 자리한 '상상의 집'은 아이들의 무궁무진한 상상력을 키워
주며 자연스럽게 학습과 놀이를 오가도록 한다. 부모의 마음이 담겨있
는 부암어린이집은 온전히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의 혼을 담은 외교청사 -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은 지난 2019년
새롭게 신축·이전되었다. 직유가 아닌 은유로 한국 전통미와 정체성
을 건축에 담아냈다. 건물 외벽에는 규칙적인 패턴과 자유로운 면 구성
의 대비가 조화를 이루는 솔리드 면으로 계획하여 베트남의 강렬한 태
양열에 건물이 데워져 냉방부하가 올라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했다.

종로구 국공립부암어린이집

어린이가 중심이 되는 세모·네모·집

김상언 · 김은진
에스엔건축사사무소
공동대표

개요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검정로6다길 10-7
용도	노유자시설(어린이집)
대지면적	360m ²
건축면적	94m ²
연면적	490.78m ²
규모	지하 1층~지상 3층
높이	12m
건폐율	26.11%
용적률	77.81%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외부마감	치장벽돌
내부마감	석고보드 위 도장, 친환경바닥재(마모륨), 자작나무합판
설계	김상언, 김은진
설계담당	민수현
감리	김상언
시공	(주)원일건설
기계설계	세움엠엔씨엔지니어링
구조설계	(주)누리구조
전기설계	(주)엘림전설
설계기간	2016.12.~2017.4.
시공기간	2017.5~2019.4.
공사비	약 19억
건축주	종로구청



남측 지하층 도로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전경



북악산 백사실계곡 가는 길목에서 본 어린이집의 모습

아이들에게 어린이집의 첫인상은 ‘엄마와 헤어지는 곳,
정말 가기 싫은 두려운 곳’이다. 아이들은 심리적으로
안정되고 편안하면 천사처럼 온순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통제불능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어린이집은 따뜻하고, 평온하며,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우리는 어린이집이
‘부모와 헤어져서 잠시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즐겁고,
흥미롭고, 가고 싶은 집’이 되기를 바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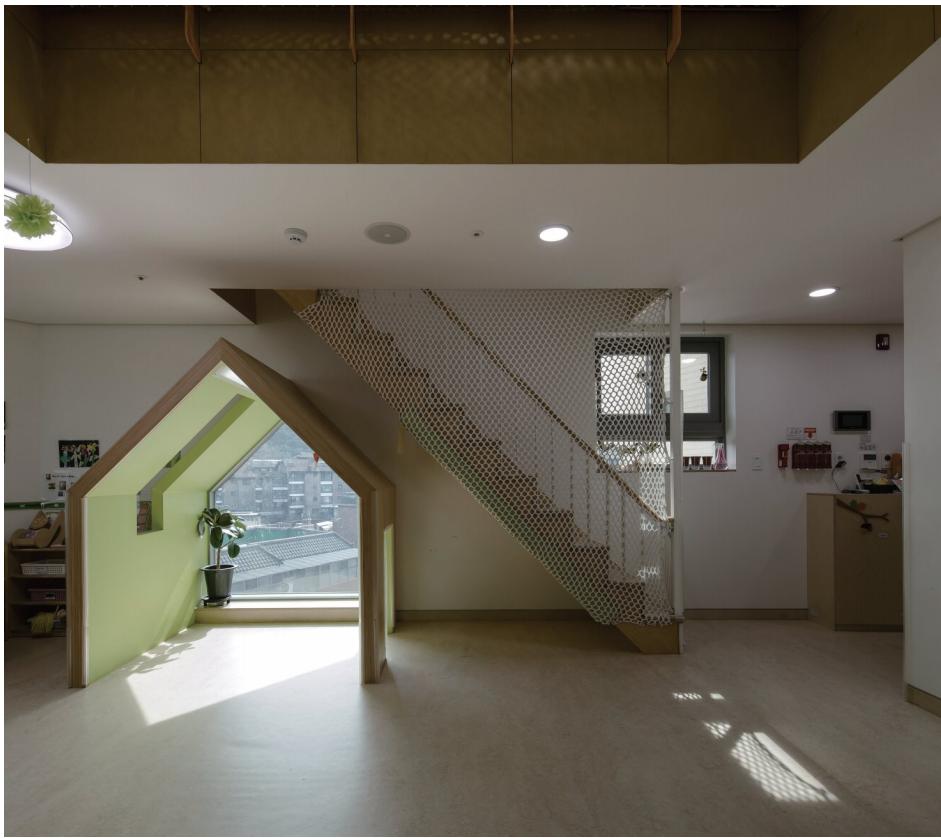






좌 영아(1~2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놀이터(지상 1층)

우 경사를 활용한 옥상놀이터



상 하 옥상의 경사면 하부를 활용한 다락 그물놀이터
상상의 집



©김용순



© 김용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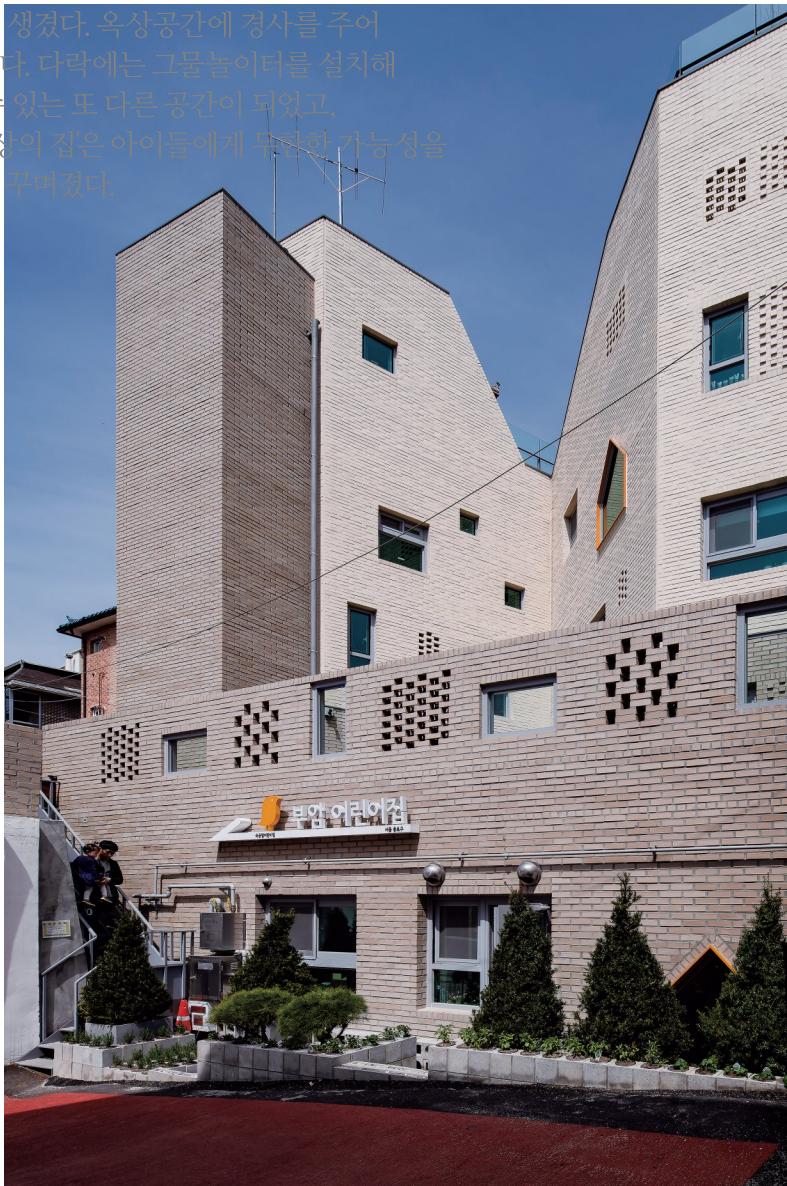


© 김용수

좌 우 · 상	작은 삼각형 정원, 선큰마당 소통의 창
우 · 하	상상의 집과 아이들

부모로서 어린이집 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 고민한 결과 부암어린이집에는
다양한 공간이 생겼다. 옥상공간에 경사를 주어
다락을 만들었다. 다락에는 그물놀이터를 설치해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또 다른 공간이 되었고,
집 속의 집, '상상의 집'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주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
한종수



단절되어 있던 지하층의 길과 지상 1층의 길을 이어준 모습

안전한 보육의 공간

어른들의 언어로 ‘어린이집’은 “아이를 돌보고 기르는 보육시설”이다. 아이가 부모와 떨어져 잠시 맡겨지는 곳으로, 주어진 시간 동안 안전한 돌봄을 제공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 그 결과 서울에는 최근 4~5년 동안 수천 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신설되었다(서울 외 지역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성과의 차이가 심하게 난다). 어린이집이 공공건축이 되면서 공립자본을 활용해 기존보다 쾌적한 환경과 시스템이 확보되었음이 분명하고, 일하는 부모들은 조금 더 마음 편하게 일터로 향할 수 있게 되었다. 짧은 기간 동안 수치적·정량적으로 상당한 발전을 이루어 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는 감성적이고 정성적인 접근이 필요할 때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을 발주하고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수행하게 되면서, 여러 선택 과정에서 보다 안전한 방법을 취하게 된다. 아이들의 가능성은 어른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무궁무진하여 매번 새롭고 획기적인 시도를 해도 그들을 만족시키기 힘든데, 시도조차 할 여건이 되지 않는 것이다. 어른들의 시선으로 정의하고 공간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껍데기는 바뀌었으나 그 안의 생활은 비슷한 꼴이 되게 만든다.

◎
현
상



상 남측 지하총 도로에서 바라본
어린이집 전경

하 북악산 백사실계곡 가는
길목에서 본 어린이집의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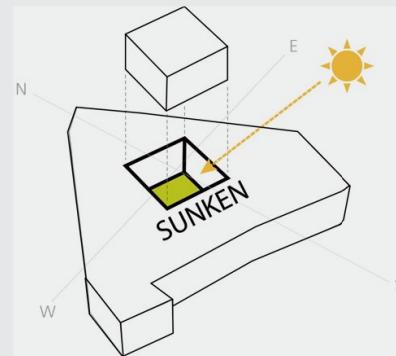
처음으로 마주하는 세상, 어린이집

어린이의 눈높이로 생각해 봐야 한다. 그들의 시선으로 ‘어린이집’은 ‘정말 가기 싫은, 두려운 곳’일 수 있다.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와 같은 존재이고, 공식적으로 부모와 처음 헤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충격을 받는다. 아이들은 항상 이런 첫인상을 가지고 어린이집 생활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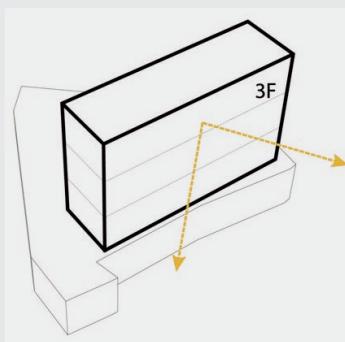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과 악하다는 ‘성악설’이 존재한다. 내 아이에 대해 대부분은 전자라고 느끼지만, 가끔은 후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내 아이도 가끔은 미운데, 남의 아이를 돌보는 보육교사는 어떠할까? 아이들은 매우 원초적인 존재라서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천사처럼 온순하다. 하지만 반대로 심리적 불안과 불편이 느껴지면 통제 불가능한(악한)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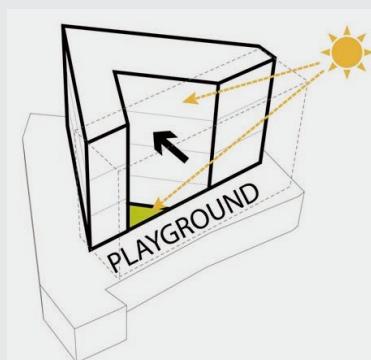
STEP 1. 최대용적계획
요구면적 충족을 위한 지하층 최대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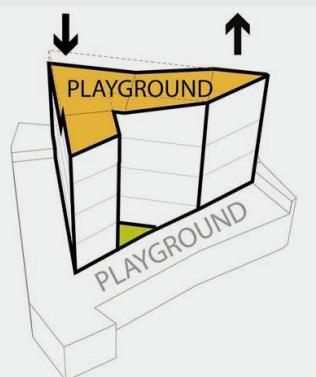
STEP 2. 대지 중앙 비워내기
지하층 환경 개선(자연채광 및 환기 극대화)



STEP 3. 지상층 남향 배치
보육실 채광 고려



STEP 4. 채광을 고려한 매스 변형
지상층과 지하층 채광, 조망 동시 고려



STEP 5. 내외부 공간 특화
지붕/옥상/다락 특화로 아이들의 공간 형성



STEP 6. 자연 + 다채로운 입면 형성
따뜻하고 부드러운 재료와 자연의 삽입

디자인 프로세스

그렇다면 건축가는 어떻게 해야 할까? 많은 부분은 보육교사의 뜻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상당히 많다. 어린이집은 ‘제2의 가정’으로서 따뜻하고, 평온하며, 흥미롭고 재미있는 공간이어야 한다. 기본적으로 아이들의 눈과 마음이 편안한 색채(채도가 높지 않고 편안한)와 재료로 안정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게 좋다.

반면 어른들에 의해 억지로 정의된 어린이다움(삼각형 창과 구름 모양의 벽지, 빨강·노랑·파랑의 원색 등)에 아이들은 쉽게 싫증을 느끼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오히려 창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빛이 어떻게 떨어지는지를 고민하고, 계절과 시간 그리고 시선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감정과 자극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아이들은 작은 구조물이라도 무수히 많은 종류의 놀이를 만들어 낼 능력이 있다. 놀이를 통해 친구들과 소통하고 마음을 주고받는 과정은 매우 흥미롭고 즐거운 일임이 분명하다.

우리의 건축적 제안으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부모와 헤어져서 잠시 맡겨지는 곳’이 아니라 ‘즐겁고, 흥미롭고, 가고 싶은 집’으로 받아들이길 희망한다.

대지의 조건 그리고 해결책: 용적률 게임

대지는 조용한 주택가의 막다른 골목 끝이자 북악산이 시작하는 산자락에 위치한 삼각형 모양의 작은 땅($360m^2$)이다. 삼각형의 각 변이 지하 1층, 1층, 3층 높이에서 3개의 길(도로)과 만난다. 건축·조경면적이 각각 대지면적의 30%이고, 법적 놀이터 면적은 대지면적의 47%나 되었다. 보행로와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정복 일조권 제한과 충수제한까지 적용하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요구 면적을 채울 수 없는 땅이었다.

2016년 8월 설계공모 당시 80여 개의 팀이 응모하였으나 최종 제출된 작품은 12개 팀에 불과하였고, 그중의 절반은 법규 위반에 해당하였다고 하는데, 주어진 지침을 해결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래 베네치아 비엔날레 건축전에서 한국관의 주제가 ‘용적률 게임’이었다. 건축법규의 제약 속에서 수익성을 위해 최대의 용적률을 확보하면서 생기는 우리나라 특유의 건축논리를 보여주는

◎
설계
팀



상 영아(1~2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체험놀이터(지상 1층)
중 경사를 활용한 옥상놀이터
하 옥상의 경사면 하부를 활용한
다락 그늘놀이터



⑥ 건축과 도시공간

것이었다. 우리는 부암어린이집 설계공모를 ‘어린이를 위한 공공의 용적률 게임’으로 받아들였고, 적극적으로 게임에 임하였다.

우리는 면적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층을 최대로 활용하고, 삼각 선큰(선큰마당)을 통해 지하에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옥상공간에는 자연스러운 경사를 주어 미끄럼대와 놀이언덕 등을 만들고, 그 하부에는 다락을 만들어 놀이공간을 조성하였다. 지하부터 옥상까지 비록 작은 공간이라도 벼리는 공간 없이 최대로 활용하여 수납과 놀이공간으로 계획하였다.

그렇게 조성된 옥상놀이터는 온전히 아이들의 것이 되었다. 탁 트인 전망과 맑은 하늘을 체험하는 것은 기본이다.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경사면(클라이밍)을 올라 미끄럼대로 내려오면서 끊임없이 달릴 수 있고, 그 옆에는 작은 공연과 야외교육이 가능한 계단이 설치되었다. 다른 측면에는 만지고 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가 위치하고 있으며, 여름에는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어린이 수돗기를 계획하였다.

옥상공간에 경사를 줌으로써 생긴 다락 공간을 아이들의 놀이 공간으로 꾸미고, 그 물놀이터를 설치하였다. 또 ‘상상의 집’은 아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은 주는 작은 도구이다. 이곳은 아이들의 ‘아지트’이면서 ‘역할놀이의 집’이 되기도 하며, 책을 읽는 도서관이나 작은 방이 되기도 한다. 집 모양의 창(소통의 창)으로 밖을 보고 관찰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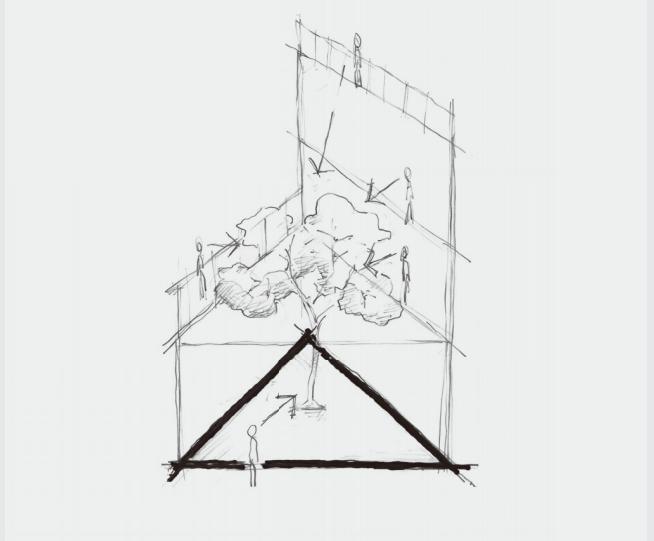


상상의 집
작은 삼각형 정원, 선큰마당

부암어린이집의 세 가지 즐거움: 세모·네모·집

부암어린이집을 계획하면서 공간의 성격 세 가지를 부여하였다. 이 세 가지는 물리적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시각적·간접적으로 연결되거나 혼합되어 공간을 이룬다. 시간의 흐름과 자연의 변화는 공간과 분위기의 변화로 이어지고, 이는 아이들의 시선과 행동의 변화로 귀결된다.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공간이기 이전에 ‘가능성’이라고 생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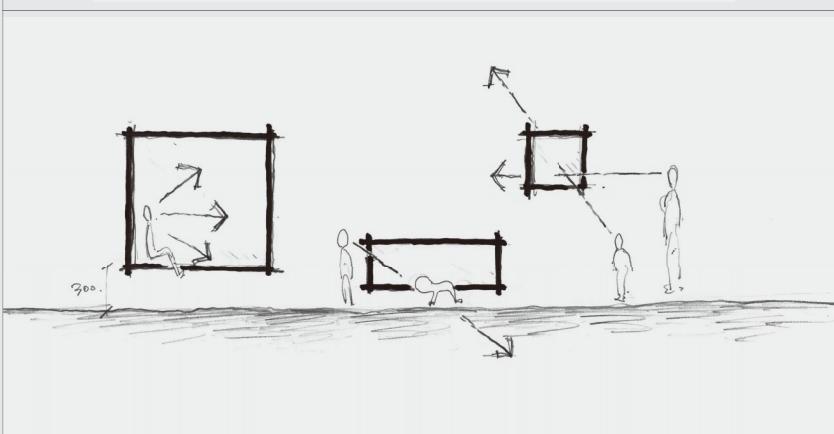
우리가 제안하는 건축적 요소들은 부모와 아이 그리고 보육교사 간에 자연스러운 만남과 소통을 유발하고, 어린이집을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한다. 아이가 부모와 헤어질 때의 아쉬움과 여운 그리고 다시 만날 때의 기다림과 기대감 등의 감정을 충



|세모| 어린이집의 중심,

선큰마당(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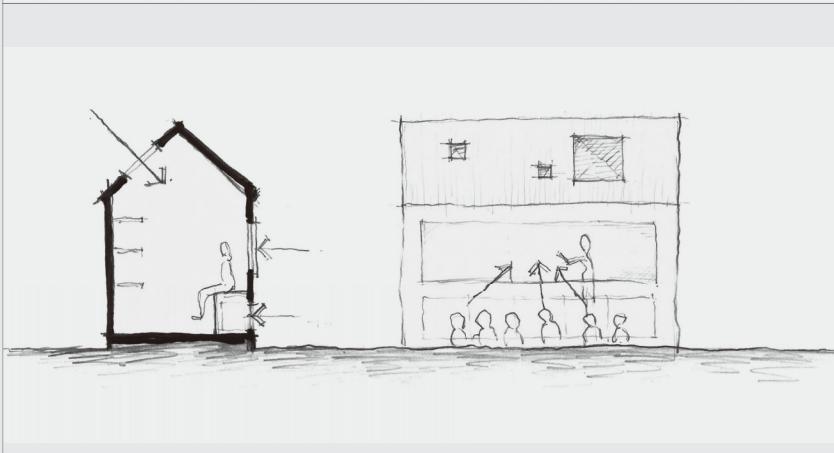
대지의 중앙에 자연을
끌어들이고, 어린이집 전체가
편안하고 포근한 분위기를
이루도록 함



|네모| 매개의 공간,

소통의 창(경계)

부모와 잠시 헤어지고 만나는
공간이자 외부와 시각적으로
소통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놀이공간



|집| 창의적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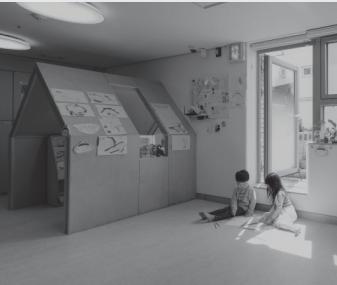
상상의 집(내부)

'집 속의 집', 아이들의
아지트와 같은 공간으로
자연스러운 학습과 놀이를 유도

부암어린이집의 세 가지 즐거움 [세모·네모·집]



©김용관



상 소통의 창
하 상상의 집과 아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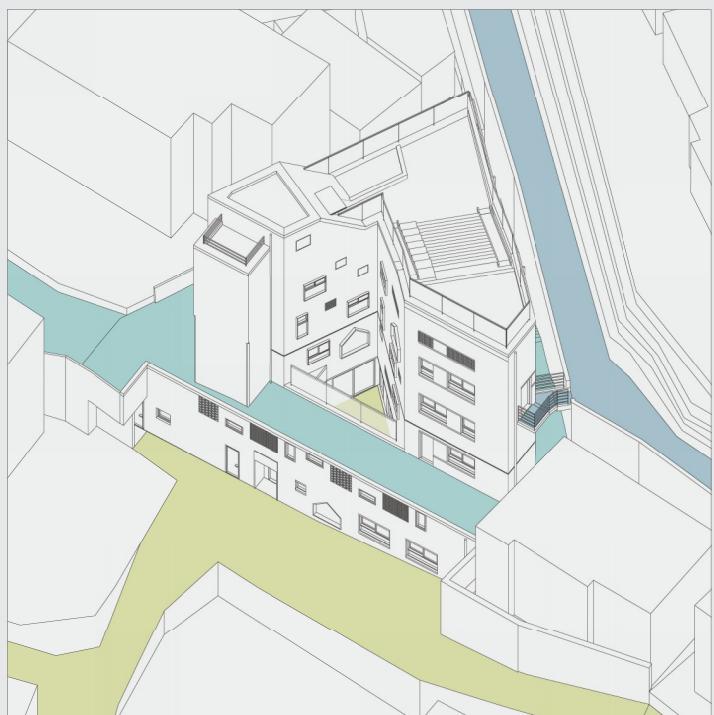
분히 나눌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하고, 서로의 시선(소통의 창)을 고려하였다. 작은 공간의 변화(상상의 집) 속에서 아이들은 숨고, 점유하고, 새로운 놀이를 개발한다.

프로젝트의 한계: 소규모 공공건축의 숙명

공공건축은 작품이 되기 쉽지 않다고 한다. 가장 큰 문제는 “입찰을 통한 시공사 선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설계는 설계공모 확산으로 인해 질이 높아졌으나 시공사 선정은 여전히 입찰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

부암어린이집의 시공사는 심각하게 부실하여 6~8개월로 예상된 공사기간이 21개월이 지나서야 끝이 났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공사는 대표와 한두 명의 직원으로 운영되는 곳이었는데, 낙찰에 성공하면 현장소장을 새로 뽑아 통으로 공사를 맡기는 식이었다.

골조공사가 끝나갈 즈음 시공사가 맡고 있는 현장 두세 곳에서 각종 하자와 대금 미지급 등의 문제가 생기고 우리 공사에도 압류가 들어오기 시작하였다. 이후 거의 모든 공정에서 임금이 미지급



©에스엔건축사사무소

다이어그램

되고, 건축자재가 제때에 반입되지 않았다. 공정이 바뀔 때마다 현장소장이 교체되었고, 인수인계 과정은 생략되었다. 최종 마감공사의 일부는 시공사가 빠진 상태로, 구청에서 별도 발주한 다른 전문업체가 투입되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완성도나 디테일을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비용을 지불받지 못한 하도업체와 일용직 노동자들의 민원에 못 이겨 담당 공무원도 교체되었다.

내 아이를 보내는 마음으로: 공공건축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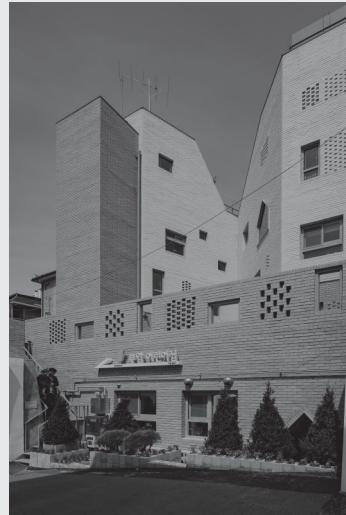
부암어린이집은 우리의 첫 신축 공공 프로젝트였다. 공공건축 설계 공모에서 두 번째 만에 당선이 되었으니 상당히 운이 좋은 편이었다. 당시 우리에게는 돌이 되어 가는 아이가 있었는데, 아직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있었다. 설계 초반에는 당선을 기대하기보다는 부모로서 어린이집 건축에 대해 공부하고, 아이들의 공간에 대해 고민하여 보고자 하였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감정이입이 되어 우리 아이가 다니는 상상을하게 되었다. 이어 당선이 되니, 사용자의 시선에서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부암어린이집은 기존 노후화된 어린이집을 허물고 새로 짓는 곳이었다. 기존의 어린이들은 차로 10여 분 거리의 평창동 주택을 임대하여 공사기간 중 머물게 하였다. 그러나 당초 8개월 정도로 예상한 공사기간이 21개월이 되면서 문제가 심각해졌다.

중간에 시공사와 계약해지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임시로 이전해 있는 아이들이 문제였다. 시공사 계약해지와 새로운 시공사 선정 등에는 최소 3~4개월이 소요되는데, 그 후 공사 완료 때까지 계산한 기간 동안 임시 어린이집을 유지할 예산이 없었다. 말 그대로 아이들이 거리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 연출되었다. 가까스로 옥외 부대공사를 제외한 상태에서 아이들이 등원을 시작하였고, 주말을 이용하여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준공까지 21개월이라는 시간은 정말 힘든 여정이었고, 감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포기하고 싶었다. 첫 공공 프로젝트라서 잊고 싶지 않은 개인적 욕심도 있었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라는 생각으로 벼텨 냈던 것 같다. 자칫하면 엉터리 공공건축이 될 수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재 이곳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앞으로 어떤 공공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이보다 힘들리는 없다는 생각과 자신감이 생겼다.

◎
설
계
가



단절되어 있던 지하층의 길과
지상 1층의 길을 이어준 모습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한국의 혼을 담은 외교청사

정영균 · 조남승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개요

위치	베트남 하노이
용도	공공업무시설(청사, 영사), 단독주택(관저)
대지면적	13,855m ²
건축면적	4,714.03m ²
연면적	10,355.43m ²
규모	지하 1층, 지상 3층
건폐율	34.02%
용적률	74.74%
구조	철근콘크리트
주요 외장재	청사, 영사 – 알루미늄복합패널, 화강석 관저 – 대리석, 목재루버
설계	홍을경, 이종우, 양정호, 김동우, 이재준, 배준호
시공	SM삼환기업(주)
디자인 연도	2015
준공연도	2019
발주처	대한민국 외교부
건축주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전경



남측 호수에서 바라본 전경

대사관 계획 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정체성’이란 화두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건축을
직유가 아닌 은유로 표현하고, 현대성을 가미하여
‘한국성’을 새로이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건축, 풍경을 담다’라는 콘셉트로
한국 전통 건축의 선(線), 음양, 비움, 마당 등의
공간 개념을 적용하여 바람과 빛을 담은
집으로 설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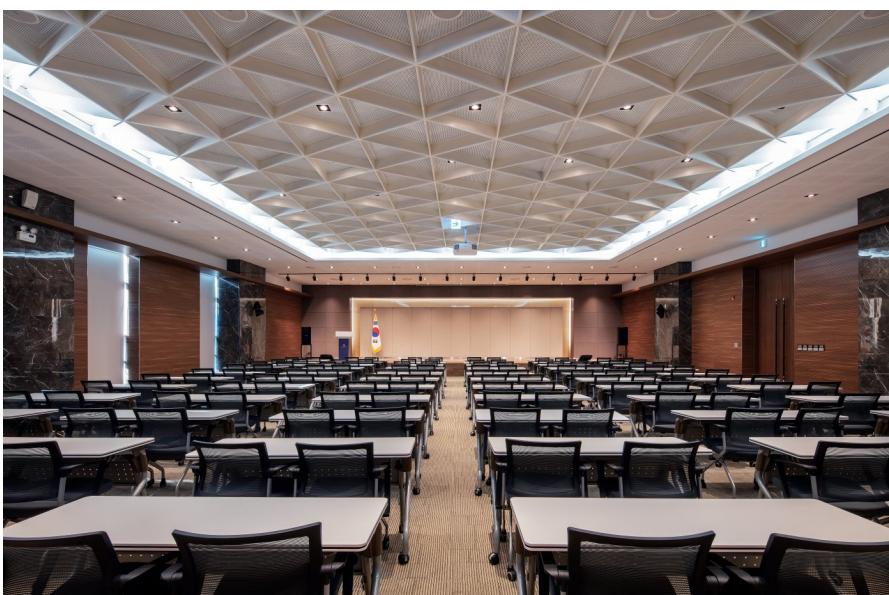




©박원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상 북측 청사 외관
하·좌 청사 출입구
하·우 남동측 청사 야경



상 청사 로비
하 청사 다목적 흘



남서측 청사 및 관저 전경



©박원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박원순,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상 서측 관저 전경
하 남서측 관저 부분입면

한국 전통 건축의 미학을 집약하는
처마의 곡선미를 건물 외벽에 적용하여
전통 건축의 선을 표현하였고,
대청마루의 개방감을 차용하여 자연풍광을
끌어들였다. 외관 패턴 디자인은
규칙적인 소슬 무늬 바탕에 규칙적인 패턴과
자유로운 면 구성하여 대비와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였다.

© 박원순, (주) 흐림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동측 전경

건립 배경 및 콘텍스트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은 우리나라와 베트남이 수교한 1992년부터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였지만, 2015년 새로이 신축·이전을 결정하게 되었다. 계획 대지는 하노이 외교 복합개발단지 내 북측 교차로 중심부에 위치하여 동측으로는 지상철 계획과 고층 주거 및 업무시설이 인접해 있는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었다.

©부원준 (주)화림종합건축사사무소 제공



한국 전통 건축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대사관 계획 시 그 나라를 상징하는 '정체성'이란 화두는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 청사 및 관저 프로젝트는 한국 전통 건축을 직유가 아닌 은유로 표현하고, 현대성을 가미하여 '한국성'을 새로이 해석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건축, 풍경을 담다'라는 콘셉트로 한국 전통 건축의 선(線)·음양·비움·마당 등 여섯 가지 개념을 적용하여 바람과 빛을 담은 집으로 설계하였다.



상 남동측 청사 야경
하 남서측 청사 및 관저 전경

한국 전통 건축의 선을 대표하는 처마의 곡선미

청사의 외벽에 적용한 곡선미는 지붕 형태를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외벽을 곡면 처리하는 매스의 형태로 전통 건축의 선을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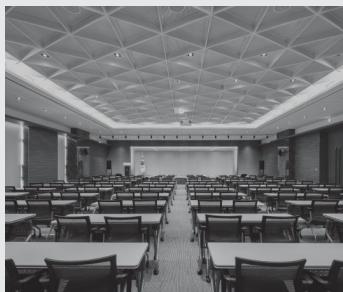
©(주)화림종합건축사사무소



배치도



©부원순
(주)회밀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상 남측 청사 외관
중 청사 다목적홀
하 청사 주출입구

비움의 미학

공간을 비워 냄으로써 자연풍경을 끌어들이는 대청마루의 개방감을 차용하여 창호 개방 시 열린 공간이 되는 가변적 구성을 계획하였다. 청사 1층 진입 및 로비 공간을 비워 내고 전면을 유리로 계획하여 마당의 자연풍경을 끌어들이는 내외부 공간을 조성하였다.

마당

한국 전통 건축에서 마당의 의미는 장소 개념뿐만이 아니라 활동이나 생활을 담는 기능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마당에 반사된 빛이 처마 아래를 골고루 비추는 간접조명 효과로 낮에도 밝은 실내공간이 가능하도록 돋는 역할을 한다. 청사 중앙에 마당 개념의 중정을 배치하여 장소·활동·생활을 담는 중심 공간으로 만들었으며, 상부에는 간접 채광의 천창을 계획하여 편안하면서도 밝은 실내공간이 되도록 조성하였다.

‘빛’을 이용한 ‘음과 양’의 조화

외관은 한국 전통 창호의 문양(소슬 문양)과 창살(격자무늬)의 멋을 살려 음과 양을 조화롭게 빚어냈다. 이러한 외피를 통과한 빛이 실내공간에 문양의 형태로 그려지게 되는데, 외관에서의 모습과 함께 실내공간에서도 빛이 만들어 내는 음과 양의 조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고려한 것이다.

균제미

가로 1.2m, 세로 7.2m의 대형 창호(격자무늬)를 청사 외관에 규칙적으로 나열함으로써 한국 전통 건축의 균제미가 느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기능적으로는 소슬 문양의 외피로 계획하여 다소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는 청사의 외관에 시야 각도를 고려한 창호 배치를 통해 개방감을 높였다.

칸을 들이고 내밀다

외부공간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칸을 들이고 내미는 형식으로 구성한 관저의 처마와 마루는 내부와 외부의 중간영역을 형성함으로써 일상과 풍경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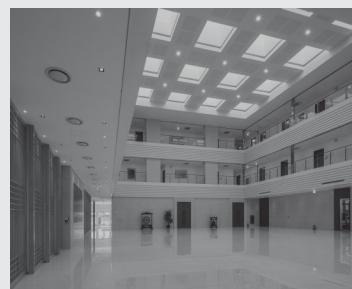


청사 단면도

계획안 설계화 과정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기까지 계획안에 담아낸 좋은 아이디어들을 구체화하는 과정 또한 중요하다. ‘가장 난도가 높은 3D 곡면의 외관을 어떻게 구현하느냐’는 곡선미의 구현이 최대의 이슈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곡면을 구현할 때 흔히 적용하는 세그먼트(Segment) 방식을 지향하고 공장에서 일체화한 단일 곡선으로 외벽을 제작하여 처마의 곡선미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였다.

©박원순, (주)회림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상 북측 청사 외관
하 청사 로비



©박원순 (주)회일종합건축사사무소제공



상 남서측 관저 부분입면
중 남쪽 호수에서 바라본 전경
하 동쪽 전경

외관 패턴 디자인은 규칙적인 소슬 무늬 바탕에 평면 기능상 채광이 필요 없는 실의 외벽면은 솔리드 면으로 계획하여 규칙적인 패턴과 자유로운 면 구성의 대비와 조화의 미를 고려하였다.

이는 베트남의 기후 특성상 강렬한 태양열에 건물이 데워져서 냉방부하가 올라가는 것을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계획으로, 건축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큰 도움을 준다.

청사 내부의 중정 상부 천창 형태도 이러한 기후 조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단일 천창의 형태로 계획하는 것을 지양하고, 20개의 면으로 분할하면서 각 천창 벽면에 깊이를 주어 직사광선이 아닌 간접 채광으로 중정에 빛이 닿도록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은은하면서도 밝은 실내공간을 연출하였다.

Epilogue

하나의 건축물이 완성되고 사용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건축가는 비로소 보람을 느낀다.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이 앞으로도 첨단 외교의 장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uri 소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124

포럼 및 세미나
130

연구소 단신
135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신규 과제를 소개하고
포럼, 토론회,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였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과제 소개

구분	과제명	과제책임
기본 과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김영현
	노상주차의 전략적인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한수경
	건축자재 통합품질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이종민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엄운진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김상호
	산업단지 경관아이드라인 마련 연구	이상민
수시 과제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한수경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김은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김영현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이여경

기본과제

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축행정정보 개방 범위 확대방안 연구

최근 데이터 3법이 통과되어 그간 활용이 어려웠던 개인정보를 가명·익명 정보화를 통해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신산업 육성에 대한 정부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건축행정정보는 환경, 재난방재, 주거복지, 도시계획, 에너지 등 도시환경과 직결되고 국민 일상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보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행정업무의 60% 이상이 모두 건축행정정보와 연관되어 있다.

세움터(e-AIS), 민간개방시스템 등에서 다양한 건축정보를 이미 공개하였으나, 건축물에너지 데이터와 소유권 변경이력 등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공개되지 못했던 부분이 존재해 왔었다. 특히, 건축도면의 경우, 창업을 기획·준비하는 많은 민간부문에서의 요청이 있어 왔지만 사생활 및 저작권 침해 우려 등으로 활용이 제한적이었으며, 데이터 품질에 있어서도 건축물 준공 이후에 최종 현황이 반영되지 않은 도면이 상당부분 있을 것을 예측되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간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건축행정정보 부문에 있어서는 데이터 품질 향상, 분산된 정보체계의 연계·통합을 위한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건축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성 등에 관한 연구는 별도로 진행되어 왔으나 건축행정정보와 데이터 3법, 저작권 등과 결합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부재했었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 기조에 따라 방대한 건축행정정보의 본격적인 개방·유통에 앞서, 개인정보와 연관된 정보의 개방 확대 방안, 건축도면의 개인정보 및 저작권 침해 등 이슈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면밀한 법·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축행정정보에 대한 수요 파악과 함께, 정보 개방·유통 및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마

련하는 것으로 건축행정정보별 「개인정보보호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제도를 검토하여 단계별 건축행정정보 개방범위를 설정하고, 개방·유통 절차 및 방법을 제안하는 연구이다. 건축행정정보의 개방·활용을 통해 건축과 IT 기술이 융합된 다양한 창업 활성화 등 스마트 건축 확대 및 건축서비스산업의 신산업 발굴·창출 기여하고자 한다.

김영현

② 노상주차의 전략적인 관리를 통한 가로공간 개선방안 연구

우리나라 자동차등록대수는 2005년 1,540만 여 대에서 2019년 2,370만 여 대로 약 54% 증가하였으며, 이와 함께 주차공간도 점차 확대되어왔다. 현행 법령에서는 건축 또는 도시개발 시 부설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을 일정 규모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주차공간은 부설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 형태로 조성되어 왔다. 반면 노상주차장에 대해서는 설치가 불가능한 도로의 종류만을 간략히 제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노상주차장의 설치면적은 부설이나 노외주차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목적지로의 편리한 접근, 시간단축, 무료주차 등의 이유로 종종 불법노상주차를 일삼고 있으며, 이에 따라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할 가로공간이 차량에 의해 무분별하게 점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적절한 노상주차는 가로활성화, 차량속도 저감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나, 부적절한 노상주차는 교통사고 위험 및 보행 불편을 야기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해칠 뿐만 아니라 화재, 범죄,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출동차량의 통행공간을 막아 대형재난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주차정책을 담당하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노상주차가 가지는 양면적인 특성을 이해하고, 도시 내 주차공간 및 가로공간의 면밀한 현황 분석을 통해 노상주차를 금지하고 불법주차 단속을 강화해야 할 곳, 노상주차가 필요하고 가능한 곳

등을 판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한편 주차관리 공급의 개선은 저렴한 주택, 기후변화, 경제 개발, 이동수단 선택, 도시디자인 등 도시의 다양한 측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시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가장 저렴하고 빠르며 실현가능한 방법이 될 수 있어 도시정책 수준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된다. 하지만 기존의 노상주차 관련 정책은 민원에 대응하는 단편적 접근에 머물고 있어, 노상주차 관리방식에 대한 도시정책적 관점에서의 판단기준과 노상주차장의 합리적인 설치조건 및 방법에 대한 방향 제시가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속가능도시를 지향하는 도시정책 차원에서 노상주차 관리 공급체계를 마련하여 가로공간의 안전성 편의성 증진 및 가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에서 효율성, 형평성, 합리성에 근거한 노상주차 관리 공급을 위한 판단기준으로 활용하고, 일반 국민들이 합리적인 노상주차 관리를 통한 가로환경 개선 효과를 인식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가로공간의 질적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한다.

한수경

③ 건축자재 통합품질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최근 연이은 건축물 화재사고 발생 등에 따라 '건축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관련 법·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건축법」 제52조의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개정(19.4.23.)에 따라 품질관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이 기존 복합자재에서 단열재, 방화문,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진구조로 확대되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 4(건축자자재 품질관리 정보 공개)가 신설(19.10.29)되어 불량 자재의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고 있는 반면, 건축자재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정보관리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news

이로 인해 성능미달의 건축자재 사용, 시험성적서 위변조 등의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또한 현재 '화재안전'과 관련된 건축자재를 중심으로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졌으나, 향후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건축자재 품질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자재의 관리 필요성 및 위해도를 고려하여 관리 대상을 도출하고, 성능인정, 성능확인, 자체성능확인 등 건축자재별 관리수준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건축자재 통합품질정보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방안, 「건축법」 및 하위규정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체계적인 건축자재 품질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종민

④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수집전략 마련을 위한 사전기획 연구

2020년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은 행복청이 건립주체로 국토교통부가 운영주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건립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설계공모가 진행되고 있으며, 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전시, 유물 등에 대한 구체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전시, 유물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건립에 대한 논의는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행복도시 건설과정에서 문화기반시설로 제시된 아래로, 그동안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주요 '논의'를 살펴보고, 사업이 구체화되는 시점에서 수집되어야 할 유물을 비롯한 국립도시건축박물관에 대한 '공감'과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그동안의 논의에서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향후 진행될 유물수집전략 마련이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도시건축박물관의 유물의 특성 등을 규정하고, 유사기관의 유물수집 사례를 참고로 유물수집 단계에 필요한 관련 규

정 등을 제시하고, 일부 시범사업을 통하여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국립도시건축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규정' 등 마련, '유물수집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실무적인 사항 등이 결과물로 도출될 것으로 기대한다.

엄운진

⑤ 건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 연구

건축허가제도는 건축행정 절차의 근간이 되는 행위로 해당 관청이 관계법령에 의거한 적법성을 확인하여 양질의 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축허가 절차는 민원인이 건축행정시스템인 세움터를 통해 허가부서에 신청을 접수하면 건축허가 담당부서에서 건축행정에 관한 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한국건축규정 e-시스템(e-KBC)을 통해 사용자들에게 건축 관계법령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도적 관점에서 「건축법」 및 관계법령에 따라 확인·협의해야 하는 사항이 건축허가단계에 집중되어 허가권자의 행정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며 민원인 측에서는 허가준비에 과다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원인의 편의성 증진과 허가권자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면서 안전한 건축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건축허가 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법령 및 제출도서를 간소화하고 준수여부를 증명하는 경우 자체 없이 건축허가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한 구조설계·설비·방화 등의 기술기준에 대해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 등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적합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허가권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방법에 대한 모색도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건축허가제도와 관련하여 민원인의 편의증진과 허가권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건축허가제도 현황과 건축허가 시 확인법령,

유사 개발행위 허가제도 분석 등을 진행하며 이를 통해 건축허가 절차 및 관련제도 관리와 운영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최종적인 건축허가제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김상호

마련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사업자가 실효성 있는 산업단지 경관계획을 수립하고 경관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단지 경관을 향상시키고 근로환경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상민

수시과제

① 산업단지 경관가이드라인 마련 연구

산업단지는 지난 50년간 국가의 산업발전 및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으나, 현재는 시설 노후화에 따라 산업단지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나 정주환경이 해결해야 될 중요한 문제점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열악한 주차환경과 정비되지 않은 공장건축물, 관리가 미흡한 수목 및 보도 등은 가로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오래된 가로시설물은 범죄안전을 위해하여 종사자 및 방문자의 불안감을 유발하고 있다. 또한, 인접한 자연환경 및 오픈스페이스의 연계가 부족하고, 정비되지 않은 안내체계 등으로 단지의 영역성 및 정체성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신규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이 꾸준히 이루어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산업단지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개발면적도 늘어나고 있다. 또한 준공 후 20년 이상 된 산업단지의 수가 증가, 산업단지 시설의 노후화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4년 개정 「경관법」이 시행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사업 및 재생사업에 대한 경관심의가 시행되고 있으나, 산업단지의 현황이나 특성에 맞는 경관계획 작성 기준 또는 심의기준이 부재하여 경관계획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심의에 따른 경관개선 효과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산업단지라는 특수한 목적을 갖는 공간에 적합한 경관계획 수립 기준 및 심의 기준을

② 보행편의지수 개발 및 보행정책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2012년 우리나라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2017년 보행안전 종합대책, 2018년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차량 소통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국가 교통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의 일환으로서 보행환경개선지구사업 및 보행자우선도로 사업과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개선), 어린이 노인 장애인보호구역 개선 등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정부에서도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등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 중이다. 이에 힘입어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회원국 평균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보행정책 효과를 높이고자, 최근 보행안전 측면에서 보행정책 성과를 측정하는 평가도구 개발이 이루어졌다. 김승남, 박수조(2016)는 보행 자전거 통행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녹색교통 활성화지수'와 보행자사고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보행안전지수'를 개발한 바 있으며, 후속연구인 오성훈, 한수경(2018)은 앞선 연구의 평가체계를 개선하여 '보행안전지수'와 함께 정책적 노력 수준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보행정책지수'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보행환경은 기본적으로 안전하고 편리하게 조성되어야 하므로, 보행정책의 성과는 보행안전뿐만 아니라 보행편의 측면에서도 논의될 필요가 있다.

news

이에 이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별 보행편의 수준을 정량화하여 측정할 수 있는 보행편의지수를 개발하여, 보행안전 및 보행편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보행정책의 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행환경의 안전성과 편의성 간 균형을 고려한 보행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수경

③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2014년 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세종시 국책 연구단지 이전을 기점으로 2015년에 예정 기관의 이전이 완료되었다. 당시, 자체 청사건립기관을 제외한 대부분 기관은 제1연구청사에 입주하였으나 공간부족문제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포함한 일부 기관은 민간 시설에 임차하여 이전하였다. 이후 약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서 연구기관의 인력이 증가하고 조직이 확대되었으며, 그로 인한 가용 공간 부족 등 시설이용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관계기관 및 부처 협의로 제2연구청사 건립 추진이 확정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국가 정책연구기관으로서 업무공간의 기능과 가치를 새롭게 규정하고 설계 발주 시 반영될 수 있는 공간계획 지침 마련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이를 위해 제2연구청사 건립의 핵심 가치를 창의성과 효율성으로 설정하고 정책연구청사의 조직 및 업무특성을 분석하며 기 조성된 제1연구청사 및 자체 연구청사의 계획 주안점을 검토한다. 특히 현 정책연구기관 사용자의 시설이용 만족도와 수요조사 설문을 통해 제2연구청사 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더불어 입주 예정 기관 간 TF 운영으로 각 기관의 독자적 업무 및 협력 등이 가능한 공간 조성, 스페이스프로그램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건축사 협업으로 기획안 시뮬레이션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결과는 1차적으로는 제2연구청사의 건축계획

에 적용되지만 장기적으로는 향후 건립될 미래 연구청사의 바람직한 업무공간 계획 가이드를 마련한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김은희

④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성과관리체계 구축 연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도시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도시 상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종 정보시스템을 통합·연계한 서비스로, 2008년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3개 부처의 업무협약 아래 국가 R&D(09~'13) 사업으로 개발되었다. 사업 초기에는 방범·방재, 교통 등 두 개 정보시스템의 연계·활용을 목적으로 개발되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재난안전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112, 119, 재난 등 국가 재난안전체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으로 보완되었다. 통합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5대 연계 서비스로 ①112긴급 영상 서비스, ②112 긴급 출동 서비스, ③119긴급 출동지원 서비스, ④사회적 약자 지원 서비스, ⑤재난안전 상황 긴급대원 지원 서비스가 있으며, 그 외에도 지자체 특성에 따라 환경관리, 불법주차 및 체납차량 관리, 기상예보 등 서비스 범위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현재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서는 2015년부터 보급 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108 개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이후에는 인구 20만 이하 기초지방자치단체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구축단계에서부터 구축 이후 지속적인 운영관리까지 많은 예산과 인력이 소요되는 공공 주도의 사업이다. 또한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주민의 안전, 편의와 직결되어 있어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도시서비스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대비 효과성 검증, 편의를 논하기에는 통합플랫폼 운영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 산출하기 위한 지표가 부재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의 지속적인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도출하고, 성과평가 시기, 평가방법, 성과관리주체, 성과평가의 활용방향 등 체계적인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 관리하는 통합플랫폼의 전반적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지속적인 운영·관리 및 플랫폼 개선에 기여하고자 한다.

김영현

⑤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규제모니터링 제도화 방안 연구

행정규제는 사회질서 유지나 공공복리 증진 등 특정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제이다. 이러한 규제 목적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제도 운영상의 한계 발생, 사회여건 변화 등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이 요구된다. 1995년 OECD의 행정규제 품질 향상을 위한 권고문은 규제 품질관리 및 합리화를 향한 전 세계적 움직임을 유도하였다. 국내에서도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규제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 정부에서는 '규제혁신'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규제 합리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건축규제는 공공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건축물의 안전, 기능, 환경 및 미관 향상을 위한 다수의 행위제한사항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행정규제이다. 하지만 건축 관련 법령이 복잡·다양하여 법령 간 규정이 상충되거나, 지자체의 개별 행정방침 운영, 인허가 절차상 재량권 남용 등의 숨은 규제나 행태규제가 빈번히 발생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방안(2014), 건축투자 활성화대책(2015), 건축행정서비스 혁신방안(2019) 등을 추진하여 건축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건축주나 건축사 등 피규제자들의 규제 합리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사회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고 기존 규제의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는 등 규제환경은 계

속 변화한다. 따라서 건축규제 합리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편적 정책 보다는 규제 신설 단계에서 예측되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규제 운영 단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발굴·개선하는 등의 제도적·정책적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규제 합리화를 위해 건축규제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규제모니터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건축규제에 대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규제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여경

news

포럼 및 세미나

auri 소식

Vol. 38
Summer 2020

제2회 마을재생 세미나 '포틀랜드의 밤'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2일(화) 광주 희재가에서 '포틀랜드의 밤'이라는 주제로 제2회 마을재생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3년 이내 포틀랜드를 다녀온 다양한 주체들이 대형 제조업이 빠져나간 산업공백의 대안으로 소상공인 생태계를 구축한 미국 포틀랜드의 창의적 도시재생 사례를 각각의 시각으로 살펴보며, 포틀랜드의 시사점을 공유하고자 마련되었다.

이에 포틀랜드에서 우리가 참고해야 할 것으로 '생태계'와 '저지름'이라는 키워드를 제시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마을재생센터 윤주선 부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광주방송 김태관 PD와 윤현석 무등산브루어리 대표, 방지민 프리랜서 작가,

이현덕 론드리프로젝트 대표, 나우매거진 남윤주 에디터가 순차적으로 발제를 이어갔다. 이들은 포틀랜드에서 만난 다양한 장소와 서비스를 소개하며, 포틀랜드 고유의 지역 정체성을 형성하는 사고방식과 문화적 특성 및 사회적 배경을 설명하였다.

미국 오리건주 북서부에 위치한 포틀랜드는 '최고의 녹색도시 1위'와 '이상한 사람이 가장 많은 도시 2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며, '로컬=특산품'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 지역 내 개성과 균형 간의 접점을 이루면서 지방 중소도시에 특화된 도시재생 사례로 각광받고 있다.

이어 종합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모종린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실시간 채팅 기능을 활용해 온라인 Q&A 시간을 가졌다.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 공동주관



news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4일(목)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포스트코로나 도시와 집, 이동의 새로운 미래 심포지엄'에 국토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과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가 국토교통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전망하고, 이러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전환하기 위한 혁신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세부적으로는 그린뉴딜, 물류산업 변화, 새로운 공간구조 등을 주제로 국내 석학과 전문가들의 발제 및 토론으로 구성되었다.

이에 KDI국제정책대학원 유종일 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설명하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변화와 그린뉴딜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켓컬리 김슬아 대표는 마켓컬리의 대표 서비스인 새벽배송을 소개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유통계의 변화와 문제점 그리고 해결방안을 발표

하였다. 홍익대학교 건축도시대학 유현준 교수는 코로나19와 주거공간의 변화를 살펴보며, 도시 및 주거의 향후 전망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김기훈 서기관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도시와 집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변화를 짚으며, 그린뉴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종합토론에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김은희 연구위원, 신한카드 장재영 빅데이터사업본부장, 한국교통연구원 소재현 부연구위원 등이 참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형태·건축산업·교통환경의 변화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펼쳤다.

로컬-리콜 (Local Recall) 오프닝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18일(목) 서울시립대학교 베타시티센터와 독일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이 공동주최하는 2020 세운 글로벌 포럼 ‘로컬-리콜(Local Recall) 오프닝’ 행사를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함께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하였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역 생산과 도시 공동체를 다시 그리다 – 지금 다시, 도시와 제조업’을 주제로, 탈성장 시대 전 세계 도시가 직면하고 있는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위기를 진단하고, 새로운 로컬의 역할과 시도를 실천적 담론으로 공유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리드리히 나우만 재단 한국사무소 대표인 크리스티안 탁스의 환영사로 시작된 행사에서는 우선 로컬-리콜 시리즈 및 2019 포럼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 일곱 가지 키워드를 소개하였다. 이

후 서울·뉴욕·브뤼셀을 중심으로 세종사이버대학 교자산관리학부 강우원 교수와 MIT 도시계획학과 박사과정에 있는 안채원은 서울을, 미국 플랫 커뮤니티 디벨롭먼트 센터장인 애덤 프리드먼은 뉴욕을, 벨기에 시티즈 오브 메이킹 프로젝트 코디네이터인 에이드리언 비커리 힐은 브뤼셀을 각각 말아 최근 급변하고 있는 현지 도시의 상황을 공유하고, 도시 제조업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 각 지역의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최근 서울·뉴욕·브뤼셀에서 지역적 생산은 어떤 변화를 겪었는가?’, ‘각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도심 제조업의 위기는 무엇인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전략들을 취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보며, 도시와 제조업의 미래를 구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 세미나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4월 2일(목) 대회의실에서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최근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사전검토 및 설계공모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건축심의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공공건축 관련 제도와 정책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연구소 올림 임현성 소장(안양석수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장 겸임)을 초청하여 공공건축의 기획과 사전검토의 역할에 대해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임 소장은 호화청사나 협소한 공간 등 공공건축 품질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공공건축 관련 법령과 제도가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고 전하였다. 특히 좋은 공공건축을 조성하기 위해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기획업무의 수행절차를 개선하고, 전문가의 역할을 더하는 사업계획 사전검토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다.

임 소장은 “전문가가 공공건축의 건축기획에 대한 검증 및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전검토 제도는 사업추진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적절성, 설계방향의 명확성을 검토한다”며 “최근 사전검토의 대상이 확대되고,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역할 및 설립근거가 마련되는 등 건축기획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고 밝히기도 하였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는 사전검토 제도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 등에 대한 논의를 벌였다.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 ‘가치의 이음과 생성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18일(월) 중회의실에서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를 열었다. 올해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건축문화자산의 가치 발굴 및 증진을 위한 보전·활용의 과정 중에서 설계 단계에 초점을 맞춘 ‘건축문화자산 가치증진을 위한 설계자들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이에 제1차 건축문화자산 강연회는 지요건축사사무소 김세진 소장을 초청해 ‘가치의 이음과 생성 : 체부동 생활문화센터’를 주제로, 근현대 건축자산이자 미래유산인 체부동 성결교회를 시민 오케스트라 등 음악 분야 생활활동 공간이자 지역 커뮤니티 공간인 체부동 지원센터로 리모델링한 과정을 소개하였다.

이 사업은 프랑스식 벽돌쌓기 등 건축사적 측면에서 보존가치가 높은 양식을 지닌 체부동 성결교회의 특성을 살려 교회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리모델링을 하였다. 또한 한옥 원형을 최대한 살려 복원하되 사용 용도에 알맞은 마감을 적용하고, 벽돌건물과 한옥의 조화를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김세진 소장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한옥 등 건축자산법’의 우수건축자산 제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며 “향후 한옥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관련 법과 제도가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하였다. 이어 “기존 건축물에서 어떠한 요소를 남기고 드러낼 것인지, 어떠한 요소는 소멸시키고 덧붙일 것인지에 대한 가치판단이 계속 이루어져야 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전문가 초청 강연회 ‘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연구공간은?’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4일(목) 대회의실에서 전문가 초청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는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건립을 위해 연구소가 맡은 ‘창의적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공간계획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으며, (주) 디자인그룹 아침 김한 대표를 포함하여 전문가 3명을 초청해 ‘아!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의 연구공간은?’을 주제로 스마트오피스와 스마트워크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기존 업무 공간이 개인 책상을 기반에 둔 업무 환경이라면, 최근 새롭게 등장한 업무 공간은 자유롭게 소통하고 협업 가능한 네트워크형 공간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를 고려한 스마트오피스는 각 기업과 구성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스마트오피스 구축 모델은 네 가지로 나뉜다. 스마트오피스의 사용 주체인 사람에 대한 혁신을 우선 하는 ‘Smart Office Human Innovation(SOHI)’, 조직문화 혁신을 이끄는 스마트오피스인 ‘Smart Office Organization Innovation(SOII)’, 공간에 대한 혁신에 주안점을 둔 ‘Smart Office Space Innovation(SOSI)’, 기업문화와 업무혁신을 의미하는 ‘Smart Office Working Innovation(SOWI)’이다. 이 중 SOHI, SOOI, SOCI를 통해 궁극적으로 SOWI를 도출할 수 있다.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유산의 조사·관리 방법론 도출을 위한 강연회 개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9일(화) 중회의실에서 선(線)·면(面) 단위 근대문화 유산의 조사·관리 방법론 도출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이자 <인천, 100년의 시간을 걷다>의 저자인 이연경 교수가 강연자로 나서 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걷기, 관찰하기, 기록하기’를 통해 1918년도의 지도 속에서 2018년 인천의 모습을 다각도로 탐색하던 과정을 소개하였다.

과거 인천은 원주민인 조선인과 함께 일본인·청나라인 등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개항도시였다. 이 교수는 2017년 4월 답사를 시작하면서 지역 성격별로 영역을 나누고, 각각의 지역적 특성을 관찰하였다. 관찰의 결과물은 장소 중심의 아카이브로 구축하고,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담은 사진 촬영부터 문헌조사 등과 병행하여 인천의 역사를 단행본으로 엮을 수 있었다.

한편 인천에 자리한 많은 근대건축물은 여전히 철거의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건축·도시·역사·문화의 다학제적 연구, 공간 단위의 보존 및 활용 정책 등 연구과제가 남아 있다. 이에 이 교수는 대중인식 변화를 이끄는 강연과 답사활동, 문화유산 관련 행정과 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강의를 마무리하였다.



혁신 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방안 세미나 개최 예정

The poster features a stylized city skyline with various buildings, wind turbines, and a hot air balloon, all connected by a network of lines and icons representing smart technology. Below the illustration, the seminar title is written in Korean. The details of the seminar are listed as follows:

■ 일시 : 2020년 7월 16일(목) 13:00~17:00
■ 장소 : 서울 대차동 세텍(SETEC)
■ 주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컨(KHARN)

세미나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자
13:00~13:30	스마트시티 정책비전 현황 및 건축·설비분야 협력 콘텐츠 적용방안	국토교통부 도시경과 박원호 사무관
13:30~14:00	스마트시티 기업참여 '챌린지사업'	국토연구원 이재용 센터장
14:00~14:30	세종·부산 시별도시 현황 및 해외수출 사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 센터장
14:30~15:00	스마트시티에서 건축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은석 센터장
15:00~15:20	Coffee Break	
15:20~15:40	스마트시티 새로운에너지건축	GS건설
15:40~16:00	New normal 시대를 위한 스마트 범위 솔루션	지멘스
16:00~16:20	스마트ZEB 에너지솔루션	존슨콘트롤즈코리아
16:20~16:40	스마트ZEB 낭만공원·중기 제습·공기질 관리비전	에이블코리아
16:40~17:00	스마트시티 신재생에너지 도입방안	자연원에너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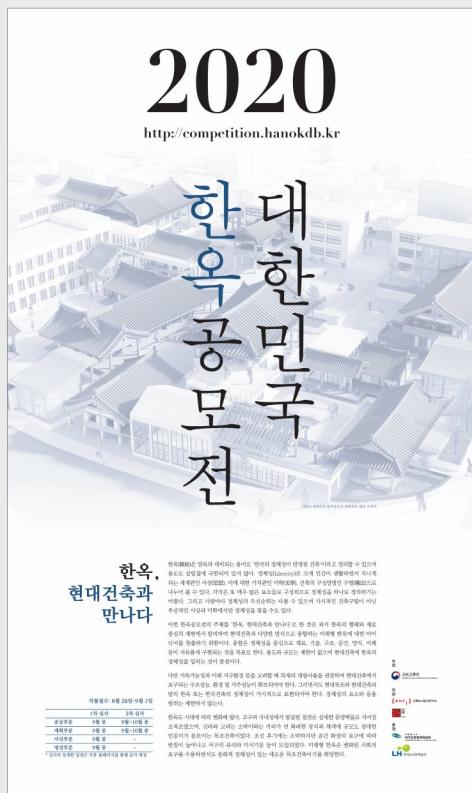
HVAC KOREA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

(aur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kharn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7월 16일(목) 2020 대한민국 기계설비전시회(HVAC KOREA)에서 '혁신성장 동력 스마트시티, 고효율 건축·설비 스마트콘텐츠 적용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최근 기후변화, 교통체증, 폐기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각국에서 스마트시티를 제안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세종·부산을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테마형 특화단지, 챌린지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 연계 스마트시티 등 기존 도시와 노후 도시를 위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스마트시티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가 낮고, 적극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점에서 정부는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고자 스마트 콘텐츠의 확장과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도시·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먼저 도시·건축물의 지속가능성 확보 필요성을 알리고자 국토교통부 박원호 사무관의 '스마트시티 정책비전·현황 및 건축·설비 분야 콘텐츠 적용 방안', 국토연구원 이재용 센터장의 '스마트시티 기업참여 챌린지사업',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최경석 센터장의 '세종·부산 시별도시 현황 및 해외수출 사례',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이은석 부연구위원의 '스마트시티에서 건축물 지속가능성 확보방안'을 주요 발제로 세미나의 전반부를 구성하였다. 이어지는 세미나 후반부에서는 GS건설, 지멘스, 존슨콘트롤즈코리아, 에이블코리아, 지엔원에너지 등으로부터 민간기업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를 위한 실질적 구현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auri



작품접수: 8월 28일~9월 1일

	1차 심사	2차 심사
준공부문	9월 중	9월~10월 중
계획부문	9월 중	9월~10월 중
사진부문	9월 중	
영상부문	9월 중	

*심사의 상세한 일정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예정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가 주관하는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이 열린다. 2011년 이후 올해로 열 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우리 한옥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창조적 계승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대한민국 한옥공모전은 '한옥, 현대건축과 만나다'를 주제로 과거 한옥의 형태와 재료 중심의 재현에서 탈피하여 현대건축과 다양한 방식으로 융합하는 미래형 한옥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색하는 자리이다.

공모전은 준공·계획·사진·영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데, 국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최근 디지털 매체의 발전과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영상 부문이 올해부터 신설되었다.

준공 부문은 최근 5년 이내에 준공된 한옥을 대상으로 하며, 건축주·설계자·시공자 중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계획 부문은 건축물 용도에 대한 제한 없이 공모전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제안이 가능하며, 4명 이내의 팀 또는 개인이 참여할 수 있다. 일반인과 청소년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사진과 영상 부문은 한옥과 관련된 자유주제로 전통 한옥뿐만 아니라 새롭게 한옥의 아름다움, 일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한옥의 의미와 가치를 독창적인 시각으로 담아낸 작품을 공개 모집한다.

작품 접수는 8월 28일부터 시작하여 9월 중 각 부문에 대한 1차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1차 심사 후 계획과 준공 부문에 대한 2차 심사가 진행된다. 심사의 상세한 일정은 2020 대한민국 한옥공모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전주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5월 20일(수) 전주시와 저층주거지 재생을 위한 사업화 모델 구상 및 발전전략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앞으로 두 기관은 ▲주거지재생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애로사항 및 현장문제 공유 ▲주거지재생 과제 도출 및 사업 발굴에 필요한 공동조사 및 연구 참여 ▲지역재생 관련 포럼·세미나·교육 같은 행사 개최와 참여 등의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식 후에는 서수정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지역재생연구단장이 전주형 주거지재생 비전과 전략을 설명하고, 연구소와 전주시가 많은 논의와 협업을 통해 마련한 '좋은 주거지 기준'을 발표하였다.

전주시는 도청 이전과 외곽 개발로 인한 인구 유출, 빙집 증가 등 구도심의 저층 노후주거지에서 발생하는 여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환경 개선 및 지역재생 정책을 추진해 왔다. 앞으로 주거지재생 연구에 선도적인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노하우를 더해 새로운 주거지재생 모델과 발전전략을 만들어 갈 계획이다.

앞으로 두 기관은 저층주거지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주거안정성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주거복지 실현을 목표로 지역 맞춤형 주거지재생 사업모델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을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 군산시 MOU 체결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6월 11일(목) 민·관협력 (Private-Public Partnership: PPP) 도시재생 추진에 협력하기 위해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민·관협력 도시재생 실현을 위한 정보 교류 및 상호 지원에 힘쓰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군산시민문화회관 도시재생인정사업 등 군산시의 대표적 민·관협력 도시재생 사업에 대한 현장연구와 총괄기획을 맡고, 군산시는 ▲민·관협력 도시재생을 위해 필요한 정보 제공 ▲관련 부서 행정협의회 운영 ▲공무원·시의원·주민대표 공감대 형성 등을 담당하며 업무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군산시 민·관협력 도시재생의 거점이 될 군산시민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군산시민문화회관은 고 김중업 건축가의 유작으로, 2013년 군산 예술의 전당 개관으로 장기간 유휴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었다. 군산시는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을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현장연구와 총괄기획 ▲설계공모 ▲운영자 선정 등 사업 전반의 협력을 위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두 기관은 업무협약을 계기로 군산시민문화회관 재생을 통한 지역 발전을 목표로, 민·관의 협력 속에 도시를 재생해 나가는 사업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예정이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연구보고서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연구 성과의 공유 및 확산을 위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보고서를 검색하실 수 있으며,

발간물 구입에 관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자료실로 문의 바랍니다.

자료실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2019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 2019-1
포용적 균린재생을 위한 공원 정책
개선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2
복지시설 취약지역 개선을 위한
공간환경 조성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3
지역 공공시설의
효율적 조성·활용을 위한
종합적 자산관리계획 수립방안 연구
2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4
생활밀착형 공공건축물의 이용자 참여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5
사회경제적 여건과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하는 주거공간 조성 방안
2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6
한국 공공건축물의
공급 활성화 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7
중소도시 마을연계형
거점공간의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8
건축자산 관리와 활용을 위한
국가의 지원정책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9
자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탄력적 도시설계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0
지역 정체성 제고를 위한 농촌주택개발
사업의 한목적용 활성화 방안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1
범죄예방 환경조성 시설·기법의
효과성 분석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2
도시 내 공공건축물 저층부 및
외부공간 개선방안 연구
29,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3
건축물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제도화 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4
노후 산업단지 공간환경
현황진단 및 개선방향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5
건축물 생애 관리 체계화를 위한
제도 마련 연구
30,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6
증·소도시 지속기능성을 위한
지역자원기반의 통합적 공간관리 방안
31,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7
건축 아카이브 통합
시스템 구축 방안 연구
18,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9-18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도시설계 전략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1
범죄예방 건축기준 개선방안 연구
11,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2
읽기 쉬운 관광안내체계 조성을 위한
보행네트워크 분석 연구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3
도시지역 새뜰마을사업
국비지원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4
건축물 실내 공간 수요변화에
대응하는 안전기준 개선 연구
16,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5
거주자 행태를 고려한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대응방안 연구
1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9-6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1
건축서비스산업 통계 구축방안 연구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2
공공건축 설계용역 밸류제도의
현황과 과제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3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효과성 분석 연구 -서울시 5개
CPTED 사업 지역을 중심으로-
1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4
한국건축양식 개념 및
사례분석을 통한 정책 담론 연구
2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5
한국 활성화 정책 추진 현황 및 과제
18,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6
지역 특성화 전략 마련을 위한
기초 연구 : 세종·시민의 일상생활과
장소인식을 중심으로 -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7
2019 기후변화 대응
건축·도시 정책동향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8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9-9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 2018-11

기본연구보고서-2018-2
녹색도시 정책여건 변화에 대응한
공원녹지 지표 개발방안 연구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3
장소기반 전략계획을 위한
도시계획체계 개선방안 연구
2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4
국가 녹색건축을 기본계획
성과 및 발전 방안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5
고령인구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개선방안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6
지역의 공유가치창출을 위한
기업사회공헌활동과
공공사업 연계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7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위한
민관협력방식 활성화 방안 연구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8
제로에너지건축물 조성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9
커뮤니티 자산으로서의 건축자산
보전·활용방안 연구
24,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0
이용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소규모 공공건축물의
기획·내실화 방안 연구
27,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1
크라우드소싱을 활용한 정책사업
모니터링 방안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2
지방중소도시의 스마트축소
도시재생 모델 개발
31,000원

2018년 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서-2018-1
공유경제 기반의 지역맞춤형
공동체주거 조성 방안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3 상업적 펜트리피케이션 진단체계 연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을 중심으로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5 2017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4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7 고령사회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 공공업무시설의 계획 현황과 개선 방향 연구 16,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4 노인의료복지시설 화재안전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16,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6 2017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2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8 민관협력사업을 통한 자립형 도시재생 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2 공공업무시설의 건축 규정 제도사 연구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5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건축서비스산업의 미래변화 전망과 대응전략 연구 2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7 지역 공공시설 자산관리계획에 관한 기초연구 1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9 택티컬 어버니즘 기반의 가로활성화 방안 연구 21,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3 포용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건축의 현황과 과제 -장애인복지시설 편- 1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6 유류공간 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회성과연계채권(SIB) 도입방안 연구 23,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8 소방서 조성 기준 및 계획 현황 연구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0 1950년대 이후 한국 주요 공공건축물 조성과정의 사회적 담론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4 2017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7,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7 국토경관 가치인식 향상을 위한 수요맞춤형 경관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25,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9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 현황과 평가 2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1 신 기후체제 대비 건축물 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진단 연구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5 대도시 노후 상업지역의 범죄예방환경설계 19,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8-18 고령사회 대비를 위한 건축도시환경의 고령친화도 진단 연구 1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0 건축자산 기반 창업 지원 플랫폼 기획 연구 2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2 차세대 교통기술 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의 대응방안 연구 24,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6 산업단지 배후 주거지의 범죄예방환경설계 19,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8-1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위한 법제화 방안 연구 14,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1 한옥 시공인력 양성을 위한 기초 연구 12,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1 조경진흥시설과 조경진흥단지 지정기준 연구 11,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7 한국 수선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지붕수선을 중심으로-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8-2 녹색건축을 채권 도입 및 적용방안 연구 11,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1 공동체토지신탁 도입 및 적용 방안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2 음면동 행정청사 리모델링 가이드라인 연구 9,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8 2016 보행자우선도로 현황과 평가 50,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3 청소년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탐색적 연구 8,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2 빅데이터를 활용한 건축·도시 미래정책 개발체계 연구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3 행정중심복합도시 가로별 디자인 지침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9 2016 서울시 도로다이어트 현황과 평가 48,000원
정책연구보고서 2018-4 지자체 보행안전 평가체계 개선방안 연구 13,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3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건축행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29,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4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방안 연구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0 건축서비스산업의 동향 및 실태 17,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1 지역건축기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매뉴얼 1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4 근대건축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가치 평가 기준 연구 20,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5 건축물을 유지관리 및 해체 등에 관한 법령 정비 방안 13,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1 건축기획 업무범위 및 대가기준 개선 방안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2 2018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성과보고서 15,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5 건축자산 진흥구역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 - 기존 지역·지구·구역과의 관계 정립 및 개선을 중심으로 - 22,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6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공간개선방안 연구 10,000원	일반연구보고서-2017-12 알기 쉬운 건축설계 저작권 9,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3 건축서비스산업의 재발견 - 우리 사회가 바라본 건축서비스산업 22,000원	기본연구보고서-2017-6 녹색인프라 구축을 위한 건축물 조경 제도 개선방향 연구 28,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7 빈집정비계획 수립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안 연구 15,000원	정책연구보고서-2017-8 가로장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개정방향 연구 12,000원
일반연구보고서 2018-4 소규모 건축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황 진단 및 정책추진 방향 23,000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신간 안내

건축도시공간연구소에서는 건축·도시 관련 분야의 다양한 주제에 대해 단행본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단행본 소개 및 자세한 사항은 연구소 홈페이지(www.auri.r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서점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문의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044.417.9640 information@auri.re.kr



건축서비스산업의 혁신
방재성, 양은영, 김은희
비매품



마을재생 시공학 개론
- DIT 건축재생
윤주선, 장민영, 김영하
비매품



201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협약보고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2019 AURI
국토경관 정책동향
이상민, 심경미, 이경재, 송운정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8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비매품



당연하지 않은 도시재생
김은희, 박소영, 서수정, 윤주선,
이영별, 이영은, 이재우, 장민영,
장원봉, 조준배
28,000원



범죄로부터 안전한 우리집
만들기- 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
범죄예방환경설계 가이드라인
조영진, 한수경, 혼태환, 박유나,
유혜정, 경찰청 범죄예방정책과
비매품



가치를 잇는 건축자산 활용(I):
공장·창고
건축문화자산센터
비매품



국가한옥센터 아카이브 1.
삼성건축사사무소
국가한옥센터
비매품



공공건축 가이드 01 -
공공업무시설 합리적
조성을 위한 기획업무 가이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신청서 작성 가이드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비매품



한국 공공건축물을
건축공사비 예산책정 안내서
이종민, 이민경, 이재석
비매품



독립 음악인의 창작 공간
- 뮤지스母校
임유경, 김지현, 김수빈
비매품



숫자로 보는 공공건축 2016
임유경, 이종민, 이경재
비매품

보내는 사람

성함

주소

받는 사람

(a u r i)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출판·홍보팀
세종특별자치시 절제로 194, 7층

3 0 1 0 3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생각,
필자와 편집진에게 바라는 점을 보내주세요.
의견이 채택되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 이번 호 <건축과 도시공간> 코너에 대한 의견
(예) 좋았던 코너와 이유, 해당 코너에서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주제 등

- <건축과 도시공간>에 바라는 점 또는 제안하는 점